

연구보고서 2016-49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이철선 · 이연희 · 남상호 · 김진희

【책임연구자】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친서민 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I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분야 참여가능성 모색 및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이연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전문원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진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49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6년 12월 31일

저자 이철선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범신사

가격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978-89-6827-418-3 93330

발간사 <<

현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소득양극화는 우리 경제시스템에 의해 창출된 이익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불공평하게 재분배되면서 발생하였지만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소득 재분배의 실패는 가계의 가족부양과 노후준비 등에 대한 자생적 충족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복지요구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예산의 약 30% 이상을 복지부문에 배정하는 등 점차적으로 그 대응수준을 높여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과 복지예산 절감 방안으로써 민간 영역의 자원봉사활동의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6년은 국가 차원에서 2006년부터 발효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이고, 기업 차원에서도 2006년부터 도입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회계보고서가 국제표준제도로 자리 잡은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막연한 의미를 사회적·경제적 가치로 산정하고,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철선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이연희 책임전문원, 남상호 연구위원, 김진희 연구원 4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한양대학교의 김종걸 교수님과 본 원의 고경환 연구위원,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홍성이 부장님과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장균 수석연구위원님께서 귀중한 의견을 보태주셨다. 이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6
제2장 한국의 자원봉사 현황	19
제1절 한국의 자원봉사 연혁과 구조	21
제2절 한국의 개인 자원봉사 현황	36
제3절 한국의 기업 자원봉사 현황	53
제3장 자원봉사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측정	61
제1절 개관	63
제2절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	65
제3절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	78
제4장 자원봉사 재확산을 위한 7대 이슈	97
제1절 개관	99
제2절 한국의 자원봉사 재확산을 위한 7대 이슈	100

제5장 시사점과 정책적 과제	133
제1절 시사점	135
제2절 정책적 과제	142
참고문헌	153
부 록	157

표 목차

〈표 1-1〉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사업 근로자의 이직률 추이	13
〈표 1-2〉 임직원 봉사활동 촉진제도 도입 비율 추이	15
〈표 2-1〉 한국의 자원봉사 연혁	24
〈표 2-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관련 도입 제도의 현황	25
〈표 2-3〉 연도별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영역: 2011~2014년	26
〈표 2-4〉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 이상): 2011~2015년	27
〈표 2-5〉 기부 여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 이상): 2011~2015년	28
〈표 2-6〉 봉사 영역별 활동 현황: 2014년	28
〈표 2-7〉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등록 대상	29
〈표 2-8〉 자원봉사 관련 조직 현황	31
〈표 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의 자원봉사 범위	32
〈표 2-10〉 온라인 자원봉사활동 유형	33
〈표 2-11〉 자원봉사 공통 인정기준	34
〈표 2-12〉 범부처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제도 개관	35
〈표 2-13〉 자원봉사 참여율과 참여자 수 추정: 2006~2015년	36
〈표 2-14〉 행자부 및 복지부 자원봉사 참여자 추이: 2010~2015년	38
〈표 2-15〉 행자부 자원봉사 일감 수 및 수요처 연도별 추이: 2009~2015년	38
〈표 2-16〉 행자부 1365 포털 자원봉사 참여자: 2010·2015년	40
〈표 2-17〉 복지부 VMS 자원봉사 참여자: 2010·2015년	41
〈표 2-18〉 행자부 1365 포털 자원봉사자 1인당 자원봉사 횟수	42
〈표 2-19〉 복지부 VMS 자원봉사자 1인당 자원봉사 횟수	43
〈표 2-20〉 행자부 1365 포털 자원봉사자 1인당 자원봉사 누적 시간	44
〈표 2-21〉 복지부 VMS 자원봉사자 1인당 자원봉사 누적 시간	45
〈표 2-22〉 행자부 1365 포털 자원봉사 1회당 자원봉사 시간	46
〈표 2-23〉 복지부 VMS 자원봉사 1회당 자원봉사 시간	47
〈표 2-24〉 행자부 1365 포털 자원봉사활동 영역별 자원봉사자 수 및 비중	48

〈표 2-25〉	행자부 자원봉사활동 영역별 연평균 증가율: 2010~2015년	49
〈표 2-26〉	복지부 VMS 자원봉사활동 영역별 자원봉사자 수 및 비중	50
〈표 2-27〉	복지부 자원봉사활동 영역별 연평균 증가율: 2010~2015년	50
〈표 2-28〉	행자부 자원봉사 수요처 연도별 추이: 2010~2015년	51
〈표 2-29〉	2015년 기준 행사 자원봉사 수요처 현황	51
〈표 2-30〉	복지부 VMS 자원봉사 수요처 추이: 2010~2015년	52
〈표 2-3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	54
〈표 2-3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사회공헌비용 추이	54
〈표 2-3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전담부서와 담당자 추이	55
〈표 2-3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원봉사 지원제도 추이	56
〈표 2-3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분야	57
〈표 2-3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파트너 현황	58
〈표 2-37〉	중소·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지원 방안	59
〈표 2-38〉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방안 예시	59
〈표 3-1〉	활동처·연령계층별 자원봉사활동 시 하루 평균 개인경비 지출 현황	66
〈표 3-2〉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시간당 임금과 산정 근거	66
〈표 3-3〉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 안	67
〈표 3-4〉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한 산업분류 매칭	68
〈표 3-5〉	시나리오별 자원봉사활동의 전 산업 생산유발액	70
〈표 3-6〉	시나리오별 자원봉사활동의 전 산업 부가가치 유발액	72
〈표 3-7〉	시나리오별 자원봉사활동의 총 경제적 파급효과	74
〈표 3-8〉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재정보완 파급효과 결과	77
〈표 3-9〉	자원봉사인력의 정규화 고려 시 인력 산정과 직접재정 절감액	77
〈표 3-10〉	1365 자원봉사활동 포털 회원 수	80
〈표 3-11〉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분포	82
〈표 3-12〉	응답자의 자원봉사활동 계기	83
〈표 3-13〉	응답자의 최근 1년간 자원봉사활동 일수	84
〈표 3-14〉	응답자의 자원봉사활동 시 하루 평균 활동시간 분포	84

〈표 3-15〉 연령계층별 자원봉사 활동처 분포	86
〈표 3-16〉 연령계층별 자원봉사활동 내용	86
〈표 3-17〉 연령계층별 자원봉사활동처 인지 경로	87
〈표 3-18〉 연령계층별 자원봉사활동 시 지출한 개인경비	88
〈표 3-19〉 자원봉사 일수별 사회에 대한 교육비용으로 환산한 사회적 산출 가치	89
〈표 3-20〉 연령계층별 사회에 대한 교육비용으로 환산한 사회적 산출 가치	90
〈표 3-21〉 자원봉사활동 실비용 기준 사회적 편익 추정	90
〈표 3-22〉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연령계층별 자원봉사에 따른 시간당 기회비용	91
〈표 3-23〉 자원봉사활동 기회비용 기준 사회적 편익 추정	92
〈표 3-24〉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연령계층별 사회적 이해 증감도	93
〈표 3-25〉 자원봉사활동 일수별 자원봉사에 따른 사회적 이해 증감도	93
〈표 3-26〉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가구소득별 사회적 이해 증감도	94
〈표 3-27〉 전 자원봉사자 반영 사회적 편익 결과	95
〈표 4-1〉 봉사활동 계기 중 자발성과 비자발성 비중	102
〈표 4-2〉 자원봉사의 자발성 관련 FGI 내용 요약	103
〈표 4-3〉 초·중·고등학교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사례	106
〈표 4-4〉 지자체의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 현황(예시)	108
〈표 4-5〉 자원봉사 인센티브·혜택에 대한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찬성률 비교	109
〈표 4-6〉 자원봉사의 비대가성 관련 FGI 내용 요약	110
〈표 4-7〉 자원봉사 시간등록제 관련 FGI 내용 요약	112
〈표 4-8〉 주요 기관별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 운영 현황	113
〈표 4-9〉 1365 연계 현황	114
〈표 4-10〉 자원봉사 수요처의 FGI 내용 요약	116
〈표 4-11〉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 관련 FGI 내용 요약	119
〈표 4-12〉 자원봉사교육 경험률: 2005~2014년	120
〈표 4-13〉 자원봉사 교육의 도움 정도: 2005~2014년	120
〈표 4-14〉 기업 자원봉사 관련 FGI 내용 요약	123
〈표 4-15〉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안)의 대분류 및 정의	126

〈표 4-16〉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2012~2015년	127
〈표 4-17〉 자원봉사자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증감 수: 2013·2015년	127
〈표 4-18〉 2013년 대비 2015년 연령별 자원봉사자 증감 수 및 비중	128
〈표 4-19〉 주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일자리 증감 현황	129
〈표 4-2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나눔기본법안 비교	132
〈표 5-1〉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재정보완 파급효과 결과 요약	138
〈표 5-2〉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편익 결과: 전체 자원봉사자 반영	139
〈표 5-3〉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148

그림 목차

[그림 1-1] 정부 총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	12
[그림 1-2] 전체 인구 대비 20세 미만의 자원봉사 참여율	14
[그림 2-1] 실업률과 자원봉사 참가율 추이: 2006~2015년	39
[그림 3-1] 자원봉사활동 일수별 하루 평균 봉사시간 분포	85
[그림 4-1] 한국의 자원봉사 재확산을 위한 7대 이슈 선정	100
[그림 4-2] 세대 간 자원봉사 참가율 추이 비교	104
[그림 5-1] 한국의 자원봉사 확산 단계: 2015년 기준	143
[그림 5-2] 자원봉사활동의 정책적 방향과 세부 과제	146

Abstract <<

Analysis of the Socioeconomic Value of Volunteering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volunteering as a potential source for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f welfare spending that has been growing with increasing income disparities and advancing population aging. Volunteering is considered in this study also as a supplement to the social service workforce employed in government-subsidized work programs. This study first briefs the history and features of volunteering in Korea on the individual and corporate levels. Secondly, we estimate the socioeconomic value of volunteering based on our internet survey and our analysis of the potential of volunteering in the industrial context. Thirdly, we identify priority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the effort to promote volunteering. Lastly, this study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and further discusses what should be done, to promote the voluntary sector. Our conclusion points to the need to reduce the risk of information on volunteering that the early majority (including enterprise entities) encounters. Increased policy attention is needed to foster a culture of sharing. Som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cluding social enterprises) need to be recognized as “organizations in need of volunteers.” In addition,

2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policy measures should be redesigned to better incentivize volunteering.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고에서는 소득 양극화와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으로 가중되고 있는 복지예산 절감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인력의 보완 요인으로서 자원봉사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개인과 기업으로 나누어 한국의 자원봉사 연혁과 현황,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이 가지는 막연한 의미를 산업연관분석과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였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의 재확산을 위한 선결과제인 7가지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이 성장기로 재진입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주요 연구 결과

우선, 한국의 자원봉사 역사를 살펴보면 현재 도입기를 거쳐 재정립기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자원봉사 역사는 지역 주민들이 관혼상제 의식을 상부상조로 해결했던 삼한시대의 ‘계’와 ‘두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일제 강점기 시절 YMCA와 YWCA 등 서양의 기독교 기반 관련 단체 주도로 민족계몽운동으로 이어지다가 광복 후 1960~70년대에 들어서는 자원봉사가 적십자운동 및 새마을운동과 연결되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확립기를 맞이한다. 이후 1978년부터 1990년까지는 사

4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지협의회·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직이 설립되고, 올림픽 등 정부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일반인이 참여하면서 확대기를 맞이한다. 1990년 후반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른 정부 참여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제도적 장치, 그리고 관련 부처의 자원봉사 전담 부서 설립 등으로 정부 주도의 재정립기를 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한국의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질적으로 4가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는 자원봉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과거의 단순 노동력 제공에서 전문기술이 적용된 재능기부·전문봉사, 그리고 근래에는 금품 등 물적나눔과 생명나눔(헌혈, 장기기증)으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는 자원봉사 제공 형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자원봉사는 활동처 방문이 필수적이거나 최근에는 인터넷, 모바일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자원봉사가 등장하고 있다. 셋째는 자원봉사 주체 측면에서 영리법인인 기업과 정부가 자원봉사 정책에 관여하면서 협회나 정부 산하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리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대표적인 것이 자원봉사시간 인증제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자원봉사는 다소 침체기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개인의 경우 자원봉사 참여율이 2009년 19.3%에서 2015년 16.3%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1인당 자원봉사 횟수와 자원봉사 시간도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자원봉사의 감소 추세는 기업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액 기준 1~500위 대기업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2년 77.8%에서 2014년 55.8%, 매출액 501~1000위인 중소·중견기업들은 2012년 48.5%에서 2015년 41.4%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평균 자원봉사 비용과 사회공헌 전담 부서 존재율에서

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셋째, 자원봉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수요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보건복지부 자원봉사 수요처는 2010년 7,391개였으나 2015년 총 12,142개로 연평균 10.4%씩 증가한 반면, 기타 공공부문 자원봉사 수요처가 많은 행정자치부 수요처는 2010년 69,681개에서 2015년 41,173개로 감소하였다.

한편 개인과 기업 모두 자원봉사활동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자원봉사활동이 전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1조 9,641억 원에서 최대 3조 2,92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생산유발액은 최소 1조 1,008억 원에서 최대 1조 8,447억 원이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최소 863.3억 원에서 최대 1조 4,477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재정 파급효과는 최소 3조 4,007억 원에서 최대 5조 6,989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생산유발액은 최소 1조 8,447억 원에서 최대 3조 1,98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최소 1조 4,921억 원에서 최대 2조 5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이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을 보완하는 인력은 54,021명~90,528명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정부는 최소 1조 1,359억 원에서 최대 1조 9,035억 원의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자원봉사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이해도 등 사회적 편익은 자원봉사자 717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1년간 최소 4,189억 원에서 최대 1조 3,64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원봉사자 1인당 사회적 편익 8,854~28,814원에 1년간 평균 자원봉사 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즉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이해도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이 재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이슈에 대한 선행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첫째는 입시·취업·기

업 업무 차원에서 실시되는 비자발적 자원봉사를 계속 자원봉사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할인카드, 마일리지 제도, 경비 제공, 기업의 인사고과 적용 등 대가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셋째는 자원봉사 인증제와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에 관한 문제로 현재, 인증관리시스템들이 범부처와 관련 기관별로 산재해 있고, 시스템 간 연동도 완벽하지 않으며, 연동이 된다 하더라도 측정변수가 시스템 간 상이해 통계 작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자원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간의 욕구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수요처는 평일 중심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지만 자원봉사자는 주말 봉사를 선호하고, 기업 등 자원봉사자는 개별·전문화된 자원봉사를 선호하지만 수요처는 봉사자의 질 관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단순 봉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는 기부가 함께 이루어지는 패키지형, 자원봉사 미경험자의 유인, 그리고 업종별 특화 형태의 자원봉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업 자원봉사의 사회적 자본 축적 가능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수요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등으로 수요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업 자원봉사에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섯째는 최근의 자원봉사 감소가 정부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확대 때문이라는 논쟁이다. 장기요양보험 등 일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이 확대되면서 독거노인 대상의 돌봄 자원봉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복지부가 국회에 새롭게 발의한 나눔기본법안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상충 가능성이다. 나눔기본법안에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법체계상 나눔기본법안의 국회 통과와 상위법 여부, 그리고 주무부처의 상이성으로 인해 부처 간 시너지 효과 발생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우선, 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이 성장기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 등 초기 다수자들이 자원봉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자원봉사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하여 나눔문화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수요처로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촉진제도 도입과 시스템 및 제도의 정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세부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촉진제도에서는 기업과 개인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나눔기본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 자원봉사 대가를 할인 등 금전적 보상이 아닌 현찰과 같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자원봉사 활동처로 등록시켜 현재 감소하는 수요처를 보완하는 과제도 요구된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시스템 정비 차원에서는 우선 기업 자원봉사활동 관련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이 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처의 투명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회계 등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정보 정비와 범부처 인증관리시스템 간의 지표 통일 및 연계 등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 정비 차원에서는 입시제도 내 자원봉사 시간의 축소와 기업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시간등록제 허용, 그리고 기업 대상 자원봉사교육 파견제 도입과 자원봉사 활동처의 회계자료 공시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자부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와 자원봉사 관련 정부 산하 기관 및 자원봉사센터들로 구성된 범부처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요 용어: 자원봉사활동,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서비스 산업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였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가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의 실패의 주요인 중 하나였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공산품의 대외 수출로 국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수출경제로 획득된 부는 임금 상승 등 노동력이 주요 수단인 근로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기보다는 기업의 재투자 활동을 위한 사내 자본으로 축적되었다. 그리고 축적된 사내 유보금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기업 생존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패막이라는 미명하에 지속화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 내 기업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의 실패는 근로자로 대변되는 대다수 국민에게 노후 준비 등 자율적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

한편 한국의 복지 수요 증가는 앞서 언급한 소득 양극화 이외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과 관련성이 높다. 세계 최고령 국가라는 일본의 경우, 총인구 중 65세 이상이 14%인 고령사회에서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12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4년이 빠른 8년 만(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합계출산율 1.24명(2015년)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1985년 1.67명으로 떨어진 이후 30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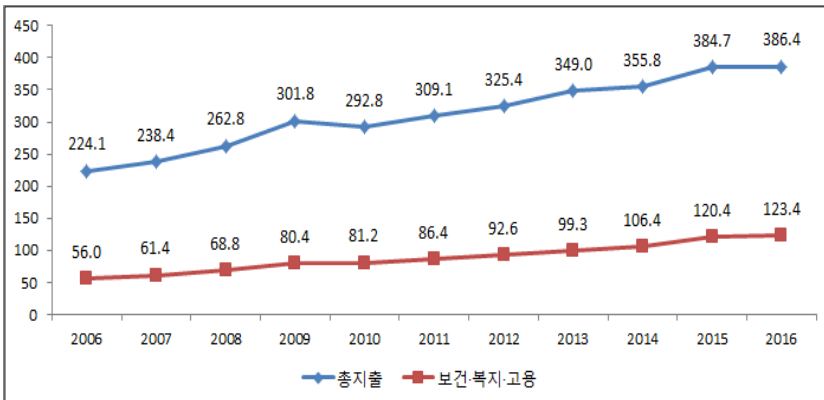
12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지난 지금까지 담보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외국 경제 관련 기구들은 저출산이 향후 한국의 미래 잠재성장률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년간 정부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오고 있다. 2006년 정부 총예산 224.1조 원 중 25.0%(56.0조 원)였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014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총예산 386.4조 원 중 31.9%(123.4조 원)로 그 규모가 2배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는 무상보육 등 저출산과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사업 시행과 경제 악화로 인한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등 고용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즉 소득 양극화로 인해 자생적으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증가와 저출산 및 고령화라는 인구 현상으로 파생한 보편적인 복지 문제를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도입하면서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림 1-1] 정부 총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

(단위: 조 원)



자료: 국회예산처(2011~2016).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p.14.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는 국민의 복지 수요를 위해 도입한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등 처우가 열악한 질 낮은 일자리라는 점이다. 일반 시장경제와 달리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정부가 배정한 정부 예산하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돌봄 등 복지부의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부의 예산 증액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재정 일자리가 질 낮은 일자리로 전락한 이유는 임금 상승률의 폭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민간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1년부터 5년간 5.1(4,320원)~8.1(6,030원, 2016년)% 상승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 3% 적용 또는 동결 과정을 반복해 왔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이직률은 높은 편이다. 노인돌봄 등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2013년 이직률은 25.1%이며 이 또한 전년도 대비 약 7% 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표 1-1〉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사업 근로자의 이직률 추이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수	평균 근로자	이직자 수	이직률
2011년	1,156	33,341	11,735	35.2
2012년	1,407	38,562	12,477	32.4
2013년	1,689	48,737	12,214	25.1

주: 이직률=(이직자 수)/(연평균 근로자 수)×100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데이터베이스 분석자료, 이철선 등(2013). 돌봄서비스 종사자 임금체계 표준화 방안연구.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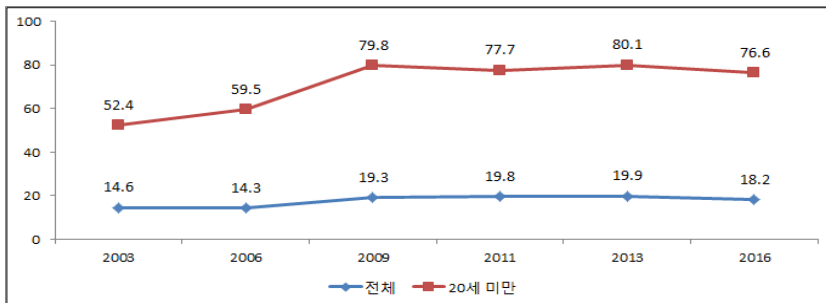
14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그러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 보전은 현 복지예산 규모의 증가를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복지 수요의 출현 및 증가와 공무원의 양적인 실적 중심의 업무 추진 등의 관행으로 볼 때, 민관 협력 형태로 참여한 복지 사업체와 그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 사업체에 사업 위탁을 의뢰했을 뿐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계약의 주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연계해 증가하는 복지재정과 사회서비스 인력의 보완 가능성을 살펴보고, 정부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품앗이, 두레 등 상부상조의 문화로부터 전수된 한국의 민간 자원봉사 문화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공적 자원봉사 시대를 열었고 최근에는 대학 입시 제도에 사회봉사 활동이 포함되면서 청소년도 자원봉사자에 포함되어, 참여율이 일반 국민 대비 약 4.2배에 이르고 있다.

[그림 1-2] 전체 인구 대비 20세 미만의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주: 자원봉사 참여율=(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자 수÷조사 대상 인구)×100
 조사 대상은 200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이고,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또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최근까지 기업 이미지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적 경영 활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2006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회계보고서(ISO 26000)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보편화된 경영 활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실제로 임직원 봉사활동 제도 등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전경련의 사회공헌백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1-2〉 임직원 봉사활동 촉진제도 도입 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사 차원의 봉사조직	77.7	81.9	86.3	86.5	85.9	88.7	85.7	88.7
봉사활동자 표창제도	58.5	68.1	66.5	69.3	69.6	70.4	64.0	70.4
봉사활동자 등록제도	49.7	51.4	65.0	68.2	67.0	62.9	54.3	63.8
임직원 외 봉사프로그램	-	-	-	56.8	64.9	71.0	-	70.0
봉사활동 교육프로그램	48.7	59.0	58.4	63.5	61.3	60.2	53.1	63.4
봉사활동 휴가제도	51.3	58.6	60.9	63.5	60.7	62.4	60.0	65.9

자료: 전국경제연합회(2016). 2016년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p.18.

더불어 2016년은 국가 차원에서 2006년부터 발효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이고, 기업 차원에서도 2006년부터 도입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회계보고서가 국제표준화 제도로 자리잡은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된 시점에서 그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측정은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가치로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 대비 시사점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는 한국 내 개인과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역사적 전개와 양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역사적 고찰은 자원봉사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으로 향후 본고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과의 연계성을 제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자원봉사의 현황은 개인과 기업의 자원봉사 현황이 양적으로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가 하는 것과 개인과 기업 간 자원봉사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자원봉사활동이 국가적으로나 기업 측면에서 제도화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산정해 보는 것이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평가해 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원봉사는 개인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 등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하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을 어느 정도 보완함과 동시에 부가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재정 절감 효과와 사회서비스 인력의 보완 가능성 등을 탐색해 보고자 함이다. 한편 사회적 가치 측정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차이 등 갈등 비용을 자원봉사활동이 어느 정도 감소시켜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셋째는 현 자원봉사활동을 확산시키는 데 등장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는 것이다. 앞서 두 번째 연구 내용인 자원봉사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산정이 자원봉사의 장점이라면, 세 번째 연구 내용은 현행 자원봉사활동의 단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정부와 기업의 제도나 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점이며, 해결 방안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탐색해 보는 것이다. 실례로 현재 개인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범부처로는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 이외에 사회복지시설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입시 제도를 관장하는 교육부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있다.

넷째는 본 연구의 결과를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행사 지원부터 행정지원 서비스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봉사활동이 과거부터 주된 활동 영역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현황과 개인 및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각 부처의 관리제도 및 시스템 등 4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윈윈(win-win)'이 가능한 정책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내용 확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총 5단계로 연구 방법을 설정하였다. 우선 1단계로 자원봉사 현황 파악을 위해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원봉사활동 확산과 자원봉사 및 사회서비스 간의 연계성 타진을 위한 연구 결과물들을 민간과 정부 연구 간행물, 제도와 관련

된 정부 자료 등을 포함해 수집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개인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행자부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들을,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회공헌활동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파악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근거로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의 양적 현황과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한 2차 통계자료들을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수집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개인의 자원봉사 현황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와 행자부 산하 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의 1365 통계자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인증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편 기업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의 사회공헌백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한 자료는 행자부의 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 산정을 위해 행자부와 지역정보개발원의 협조를 얻어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인 1365를 통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최근 1년간 자원봉사를 경험한 일반인 1,200명이었으며, 설문 내용은 자원봉사에 투입된 인건비 등 직접비와 교통비 및 식대 등 간접비를 포함하여 자원봉사로부터 얻게 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도를 교육비용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4단계에서는 개인 및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확산 시 고려될 수 있는 문제점 도출을 위해 연령대별 자원봉사자(10~60대), 자원봉사에 대한 학계 전문가, 사회복지시설 등 자원봉사 수요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담당자, 그리고 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가 발의한 「나눔기본법」의 상충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법 전문가 등 5개 그룹 대상의 FGI(집단 면접법)를 실시하였다.

제 2 장

한국의 자원봉사 현황

제1절 한국의 자원봉사 연혁과 구조

제2절 한국의 개인 자원봉사 현황

제3절 한국의 기업 자원봉사 현황



2

한국의 자원봉사 현황 <<

제1절 한국의 자원봉사 연혁과 구조

1. 한국의 자원봉사 연혁

한국의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어떤 역사를 거쳐 왔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권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단순 노동력 제공에서 벗어나 헌혈, 온라인서비스, 생명 및 경제적 기부 등 나눔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영역 역시 사회복지를 넘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지원, 공공행정까지 포괄하고 있다.

근대 이전 한국의 자원봉사 역사는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계’와 ‘두레’이다. 계는 주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관혼상제 의식의 거행을 지역 주민들이 상부상조로 해결하는 순수한 민간협동체였고, 두레는 신라시대에 촌락 단위로 조직된 농촌사회의 주민협동체로서 방어, 노동, 예배, 유흥, 관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상부상조의 전통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향약으로 발전하게 된다. 향약은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 등 4가지 강령하에 유교 예절과 풍속을 전파하는 조직으로 농민들을 향촌이라는 토지공동체로 결속시키는 기능을 담당했다. 결국 근대 이전 한국의 자원봉사의 특징은 상부상조를 통한 지역공동체 구성과 유지에 있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근대기를 맞이하면서 지역공동체를 벗어나는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다. 근대 이후 현대의 자원봉사 도입기는 서양의 기독교 기반 관련 단체가 한국에 설립되면서 시작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울 YMCA와 YWCA로, YMCA는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로, YWCA는 1923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후 민족계몽운동에 주력하게 된다. 한편, 광복 후에는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사회연합회 등이 창설되면서 6·25전쟁으로 발생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적십자사, YMCA, YWCA 등 각종 사회단체들이 산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결국 도입기 당시의 자원봉사활동은 지역과 종파의 틀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두 번째로 확립기인 1960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한국의 자원봉사가 적십자운동과 새마을운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고 요약할 수 있다. 1963년 외국 민간 원조단체에 관한 법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인보관이 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도시 빈민운동과 자원봉사가 연계되기 시작한다. 특히 대학의 사회사업교육으로 인해 민간단체들에 의한 사회봉사활동이 사회복지활동의 일부로 통합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한편 경제개발과 관련된 새마을운동은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과 지역주민의 자원봉사가 연계되면서 어느 정도 정례화되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로 확대기인 1978년부터 1990년까지는 학생 등 특정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참여자의 확대기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 5개 지역에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였는데, 이곳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배치, 사후지도 등 일반 시민 대상의 자원봉사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자원봉사인력은행이 설립되어 인력 기반이 형성됨과 동시에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

을 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반 시민들이 국가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관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기관 수 증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번째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학계에서는 재정립기로 보고 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자원봉사가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지방자치제 실시로 정부의 참여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시민운동의 경우, 1994년 중앙일보가 자원봉사 캠페인을 시작하고, 1995년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자원봉사포럼을 구성, 관련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당시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자원봉사가 일부 시민이 아닌 전 국민으로 파급되는 시기를 맞는다. 한편, 정부 개입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이 관련 부처에 자원봉사 담당 부서와 해당 부처에 특화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이다. 그리고 1995년에는 교육부가 중·고교생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5·31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고, 국민복지기획단이 297개 시군구에 지역자원봉사센터를 구축한다. 이후 정부는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을 추진하고 있다.

24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표 2-1〉 한국의 자원봉사 연혁

시기	사회경제적 상황	자원봉사 내용	
근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체 구성 - 비용 절감을 위한 상부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한시대) 관혼상제를 위한 '계', '노동력 공유'를 위한 '두레' - (조선시대) 유교 예절 및 풍속 전파, 그리고 토지공동체 유지를 위한 향촌 	
근대 이후	도입기 (1960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의 전파에 따라 교회 및 관련단체의 활동 증가 - 일제강점기로 구국운동 중심 - 광복 이후 6·25전쟁 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3년) YMCA는 목공, 천공, 제화, 사진 기술 등 기술교육과 축구, 야구 등 운동 전파 -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 설립 - (1923년) YWCA는 전도, 여성계몽, 농촌운동, 야학, 절제, 생활개선운동 실시 - (1927년) 조선총독부가 6개 인보관을 설립, 관 주도 교화 사업 실시, 1954년 폐관 - (1949년) 대한적십자조직법 제정 - (1952년) 한국사회연합회 창설
	확립기 (1960~7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및 사회개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년) 외국 민간 원조단체에 관한 법 - (1963년)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 - (1964년) 인보관이 사회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 (1970년대) 대학생의 농촌봉사활동 확산과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지역주민 봉사활동 확대
	확대기 (1978~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부터 국민의식 증대 및 가족구조의 변화 - 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 사회복지협의회 부설로 5개 지역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 -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자원봉사 인력은행을 설치 - (1985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자원봉사단 구성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재정립기 (1991년~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제 실시 - 한국자원봉사 단체협의회 조직 - 자원봉사에 대한 기업·정부의 관심 대두 - 자원봉사활동 행정체계 구축 - 자원봉사 캠페인을 통해 개인, 기업, 학교의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한국자원봉사연합회 결성 후 중앙부처에 자원봉사 담당부서 설치 - (1994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조직 - (1995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중고교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실시 - (1995년) 한국자원봉사포럼 구성 및 자원봉사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 제시 - (1995년) 국민복지기획단이 전국 297개 사회복지관 부설 지역자원봉사센터 신설 - (1997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자원봉사 행사를 개최 -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 (2008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2008~2012) - (2008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2008~2012) - (2010년) 조선일보 등이 재능나눔 캠페인 실시 - (2010년) 자원봉사 시간등록제 실시 - (2012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행복박람회 - (2014년) 전국 사회복지 나눔대회

자료: 우태식, 김창래(2015). 자원봉사활동의 유래를 통한 행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p.106-110; 김대원(2000). 자원봉사활동의 역사와 경향. p.109-114 연구를 기반으로 재구성.

2. 한국 자원봉사의 구조 변화

자원봉사를 일종의 산업구조로 본다면 한국의 자원봉사는 1990년대 정부가 개입한 이후 개념과 활동 범위, 거버넌스 등 전반적인 구조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향후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 활동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의 연혁과 최근의 정책적 변화 등을 기초로 자원봉사 정책의 구조 변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정의 차원에서 자원봉사는 단순 노동력 제공에서 전문기술이 적용된 재능기부·전문봉사를 넘어 근래에는 금품 등 물질 나눔과 생명나눔(헌혈, 장기기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의 개념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1항, 2005년).

〈표 2-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관련 도입 제도의 현황

구분	1990년~	2010년~	최근
① 전통적 개념 (Classic)	활동 기반 (시간·노력 제공)		
② 현대적 개념 (Contemporary)	+	지식 기반 (재능기부·전문봉사)	
③ 확장적 개념 (Extended)	+	+	나눔 기반 (금품기부·생명나눔)
(비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눔기본법(안)

자료: 행정자치부(2015). 자원봉사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p.15.

그러나 2010년 조선일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추진한 ‘재능나눔 캠페인’은 자원봉사가 단순한 노동력 제공을 벗어나 나눔문화 및 자원봉사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재능나눔 측면에서 단순 노동력 제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이 요구되는 전문봉사가 전체 자원봉사에서 약 4~5%대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의하면 전체 자원봉사활동 횟수 중 전문봉사는 2011년 4.4%에서 2012년 5%로 증가했다가 2013~14년 소폭 감소하였다.

〈표 2-3〉 연도별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영역: 2011~2014년

(단위: 회,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회	%	회	%	회	%	회	%
총계	8,154,997	100.0	7,944,778	100.0	8,042,536	100.0	8,745,548	100.0
시설봉사	6,182,871	75.8	6,041,043	76.0	6,122,732	76.1	6,365,118	72.8
재가봉사	786,129	9.6	709,000	8.9	689,409	8.6	687,492	7.9
전문봉사	358,789	4.4	397,257	5.0	395,559	4.9	399,783	4.6
지역사회	490,512	6.0	462,131	5.8	502,953	6.3	527,596	6.0
헌혈	-	0.0	-	0.0	-	0.0	422,278	4.8
기타	336,696	4.1	335,347	4.2	331,883	4.1	343,281	3.9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2~2016). 2011~2015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를 분석하여 재구성.

전문봉사의 세부 유형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한 〈표 2-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문성을 이용한 자원봉사 유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그중 2015년 기준 아동학습지도(20.6%), 의료(12.6%), 요리(10.8%), 공연(10.2%) 등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4〉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 이상): 2011~2015년

(단위: %)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이·미용	4.7	6.0	5.2
요리	9.4	11.2	10.8
의료	12.0	10.7	12.6
아동학습지도	23.9	24.2	20.6
통역 및 번역	2.8	4.8	5.2
공연	8.6	8.3	10.2
평생학습 관련	7.4	7.3	8.4
전문상담	5.2	4.1	6.4
운전	9.9	8.1	7.3
주택 수리	10.4	9.5	8.0
기타	5.8	6.0	5.3

자료: 고경환 등(2016). 나눔실태 2015. 원자료는 통계청 사회조사.

한편 자원봉사를 넘어 나눔이라는 큰 범주에서 살펴보면 자원봉사는 기부, 1) 생명나눔²⁾과 함께 나눔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자원봉사는 인적 나눔의 한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부와 자원봉사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원봉사는 〈표 2-5〉에서 보는 것처럼 기부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 그리고 기부와 자원봉사가 함께 이루어질 때, 만족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진 자원봉사활동은 자선 등의 이름하에 현물 기부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및 단체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나눔의 하위개념으로 현금, 현물 등의 물품을 나눔 주체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생명나눔과 구분됨(고경환 등, 2016).

2) 현혈 및 장기기증을 중심으로 나눔 주체자의 신체 일부를 공공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임(고경환 등, 2016).

28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표 2-5〉 기부 여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 이상): 2011~2015년

(단위: %)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기부 참여자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8.3	28.3	30.1
	만족비율	34.2	43.5	45.6
기부 미참여자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11.5	12.2	10.4
	만족비율	17.6	28.2	27.1

자료: 고경환 등(2016). 나눔실태 2015. 원자료는 통계청 사회조사.

또한 생명나눔 역시 자원봉사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대표적인 생명나눔인 헌혈은 현재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2010년 2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한 자원봉사 인정·보상·기준 원칙 합의 내용에 따라 헌혈 1회당 자원봉사 실적 4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한도를 연간 자원봉사 시간 인정 횟수, 즉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로 한정하고 있다(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의한 연간 헌혈 횟수 범위 내). 따라서 2014년 기준 사회복지 자원봉사 영역 중 헌혈은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3.0%로 타 연령대보다 높다.

〈표 2-6〉 봉사 영역별 활동 현황: 2014년

(단위: 회, %)

구분	총계	시설 봉사	재가 봉사	전문 봉사	지역 사회	헌혈	기타
총계	8,745,548	72.8	7.9	4.6	6.0	4.8	3.9
10대 이하	2,012,474	17.5	1.5	0.4	1.7	1.0	0.9
20대	2,403,290	18.3	1.7	1.3	1.6	3.0	1.5
30대	406,791	3.2	0.3	0.3	0.3	0.4	0.1
40대	915,915	7.6	1.1	0.6	0.6	0.2	0.3
50대	1,171,420	10.0	1.5	0.8	0.7	0.1	0.4
60대 이상	1,835,658	16.1	1.7	1.2	1.2	0.0	0.7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5).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p.34.

둘째는 자원봉사 주체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공급자 측면에서 자원봉사자와 단체가 있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공급자 측면에서 최근 주목할 점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이외에 영리법인인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2006년 국제표준화기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회계보고서에 포함하면서(ISO 26000) 본격화되었고, 2010년 ‘재능나눔 캠페인’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재능도 사회적 자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표 2-7〉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등록 대상

구분		비고
공공 부문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공단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공립학교, 공립공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 부문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 공헌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자료: 행정자치부(2016).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p.27.

한편 수요자 측면에서는 자원봉사 수요처가 있다. 자원봉사 수요처는 자원봉사가 필요한 공공시설과 민간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 추진 기업체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정치적 또는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도 포함)는 정부의 자원봉사 수요처로 등록을 하지 못한다. 또한 독거노인·저소득가정·다문화가정 등 개인 및 세대 단위 봉사 수요는 시군구 및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감으로 등록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2016).

이 외에 정부가 자원봉사 영역에 관여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한다. 이들은 자원봉사 수요처와 공급자 간의 중계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원봉사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자원봉사활동 담당 부처가 다수인 관계로 정보 연계 등에서 중복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선 행정자치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하여 정책 설정 및 조정을 위해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준정부 기관으로서 정책 건의 및 정보의 연계·지원 등을 담당하는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포털 1365를 운영하는 지역정보개발원이 존재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관련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봉사실적 등록 등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로 2016년 기준, 전국에 13,159개의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사회복지 자원봉사시스템(VMS))와 지역봉사단이 있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는 산하 준정부 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전국 16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해 청소년 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를 운영 중이다.

〈표 2-8〉 자원봉사 관련 조직 현황

구분	연도	주요 활동	비고	
행정 자치 부	자원봉사 진흥위원회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등 - 자원봉사활동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규칙 등 - 위원회 간사는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범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한 위원회 - 위원회 간사는 행정자치부
	한국자원 봉사단체 협의회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관리 개발, 자원봉사 연구 및 평가 - 글로벌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자원봉사단체 민간 대표기구 - 법정단체
	자원봉사센터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조사, 연구 - 자원봉사 정책 지원 협조 - 자원봉사 진흥 사업 -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처 행자부 -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에서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
	정보개발원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 지자체 정보시스템 연구 및 컨설팅 - 정보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기관 행자부 -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보건 복지 부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19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교육훈련 등 공공사회복지 증진 업무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처 복지부 - 자원봉사활동 진흥 업무는 197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자원봉사 사업단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정보관리체계 구축 - 자원봉사단체 교류협력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활동 관련 부서
	지역사회 봉사단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봉사동아리를 지역, 직능, 보유역량별로 구성 -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맞춤형 봉사 일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봉사사업단의 사업

자료: 행정자치부(2016. 12. 14.). <http://www.moi.go.kr>
 한국자원봉사협의회(2016. 12. 14.). <http://vkorea.or.kr>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16. 12. 14.). <http://v1365.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6. 12. 14.). <http://kncsw.bokji.net>

셋째로, 활동 범위에서 자원봉사는 과거 지역 내 사회복지 중심에서 벗어나 그 내용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환경·정치·공공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지역 범주에 있어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의 활동 범위를 사회복지 및 보건을 위한 증진 활동 등을 포함해 총 15개를 명시하고 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표 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의 자원봉사 범위

주요 내용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을 위한 활동
2. 지역 사회 발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동
3. 환경 보전 및 자연보호를 위한 행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를 위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을 위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를 위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를 위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 구호를 위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을 위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 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지원을 위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활동

자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전문 개정 2014. 1. 7.).

이러한 범위 설정은 한국의 자원봉사활동 연혁에서도 알 수 있었던 바 처럼 인보관 중심의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이 새마을운동 등 경제개발 시기에 나타난 농업 보조 등을 거쳐 1980년대의 올림픽 등 국가 행사 보조, 1990년대 정부의 자원봉사 행정체계 구축에 따른 공공행정 보조, 그리고 2010년 ‘재능나눔 캠페인’의 재능나눔 등으로 발전하면서 그 활동 범위 역시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점

은 기존의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자원봉사 역시 그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온라인 자원봉사는 비영리조직, 자선조직, 지역사회 조직 등에 도움을 제공하는 무급의 노동으로서, 컴퓨터, 이동기기(휴대전화, 태블릿 PC 등)를 이용하여 온라인 체계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봉사활동에 접근 가능하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Cravens, J., 2014). 따라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에 시민들이 참여할 경우, 검증 자료를 제출하면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증해 주고 있다. 특히 상담이나 교육 등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거나, 인터넷·모바일폰 등에 익숙한 반면 본업으로 인해 현장에서 자원봉사가 어려운 청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시키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2016년 10월 발의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에는 자원봉사의 활동 범위를 앞서 언급한 15개 자원봉사활동에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첨부되었다.

〈표 2-10〉 온라인 자원봉사활동 유형

주요 내용	
- 문서번역	- 비디오, 영상 편집
- 주제, 정보 검색	- 사진과 파일 태그(꼬리표 붙이기)
- 상담	- 지도에 정보 추가
- 웹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그래픽, 인쇄물 등 디자인	
- 웹사이트, 사건, 정책, 그래픽과 관련된 제안 혹은 피드백 제공	
- 제안서, 언론 보도자료, 기사 등 작성 혹은 편집	
- 다른 온라인 자원봉사자들 관리	
- 마케팅, 법률, 사업, 의료, 농업 또는 기타 전문 서비스 제공	
- 문제제기, 자원봉사자 모집, 훈련, 모금 활동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 교과과정, 훈련, 수업을 위한 자료 개발	
- 온라인 토론 집단 중재	
- 학생, 창업가, 동료들 개인지도 또는 멘토	

자료: Cravens, J.(2014). Internet-mediated Volunteering in the EU. p.5.

34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넷째로, 과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민간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인증이나 확인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정부가 민간 자원봉사활동에 개입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시간인증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즉,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시간인증제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개인별 실적 및 보상 관리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실제 봉사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정 가능한 활동 범위는 자원봉사 준비·교육, 활동, 평가, 식사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량 봉사의 경우 차량 운행 및 기타 수반되는 시간을,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의 현장 순찰활동 시간 등은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표 2-11〉 자원봉사 공통 인정기준

구분	비고
교육·회의	- 봉사활동 직간접 관련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
문화 공연	-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만 인정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장 또는 A4용지 1장을 1시간 기준으로 인정
행사 참여	- 행사 안내, 주변 정리, 홍보 등은 인정, 단순참여 불인정 - 비공익 목적 기업 홍보, 종교 행사, 선교 활동 등은 불인정
숙박 포함 행사	- 캠프 진행 장소 도착부터 인정, 수면시간은 불인정, 아동·장애인 등 수면 중 보호가 필요한 경우 2시간 이내 추가 인정 - 단순 캠프·수련활동 불인정, 단 수련활동 중 봉사프로그램 포함 시, 해당 프로그램 진행 시간 및 교육 시간만 인정 - 홈스테이 관련 자원봉사 사전교육 및 사후평가 시간만 인정 - 호스피스, 간병의 경우, 수면시간은 불인정, 단 야간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2시간 이내 추가 인정
물품·현금 기부	- 봉사시간으로 불인정
헌혈	- 회당 4시간, 연간 헌혈 가능 횟수(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 한정 -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
종교시설 봉사활동	- 교회·성당·사찰 종교 행사 및 준비, 종교 행사 후 친교를 위한 활동은 불인정 - 동일 종교 시설 내 신도를 위한 활동은 불인정

자료: 보건복지부(2012).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2010. 7. 1. 시행). pp.27-29.

따라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는 자신들이 관할하고 있는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앞서 기술된 자원봉사활동 인증기준에 따라 시간인증제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상, 점포나 공공시설 이용 할인, 상해보험 등을 자원봉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표 2-12〉 범부처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제도 개관

구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주관	- 자원봉사센터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문화원연합회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포털	- 자원봉사 종합 포털 1365	- 사회복지 자원봉사포털 VMS	- 문화체육자원봉사 문화품앗이	- 청소년자원봉사 포털 Dovol
인증관리 프로그램	- 1365 자원봉사시스템	- 사회복지봉사 활동 인증관리 시스템	-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문화품앗이	- 청소년자원봉사 터전인증제 시스템
보상	- 인증서 발급 - 포상, 상패 부여 - 점포 할인, 공공시설 이용 할인 - 상해보험 가입	- 인증서 발급 - 그린·실버·골드 배지 수여 - 훈·포상 추천 및 표창 수여 - 사이버대학교 장학금 및 등록금 감면 - 상해보험 가입	- 인증서 발급 - 전문 분야 활동 내용 관리 - 마일리지 제공 - 우수봉사자·봉사단·활동기관 선정 및 시상	- 인증서 발급 - 포상 - 인센티브 제공 - 우수봉사자 등 - 상해보험 가입
도입 시기	- 2011년	- 2001년	- 2014년	- 2000년
법적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 지자체 조례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사회복지자원 봉사관리규정 - 인증관리규정	- 지역문화진흥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자료: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2016. 12. 14.) <http://www.nanumkorea.go.kr>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2016. 12. 14.) <http://www.vms.or.kr>
 문화체육자원봉사(2016. 12. 14.) <http://csv.culture.go.kr>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2016. 12. 14.) <http://www.sy0404.or.kr>
 청소년자원봉사(2016. 12. 14.) <http://dovol.youth.go.kr>

제2절 한국의 개인 자원봉사 현황

1. 자원봉사자 특성

앞서 본문에서는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의 구조 파악을 위해 역사적 진행 과정과 이에 따른 자원봉사의 개념과 활동 범위, 이해관계자 및 인프라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과정의 결과물로 현재 한국의 자원봉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말 기준, 15세 이상 총인구 4,398만 명 중 약 16.3%에 해당하는 717만 명이 1년 동안 1번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규모는 행자부의 1365 포털 내 참여 봉사자 수 375만 명에 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참여자 수 144만 명을 합한 수에서 두 시스템 간의 실적 연계자 수(행자부↔ 복지부 간 봉사실적 연계가 모두 중복자로 가정 시)를 제거 시, 산정되는 428만 명 이외에도 약 289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3〉 자원봉사 참여율과 참여자 수 추정: 2006~2015년

(단위: %, 천 명)

구분	2006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	명	%	명	%	명	%	명	%	명	
전체	14.3	5,643	19.3	7,928	17.6	7,421	17.7	7,617	16.3	7,169	
성별	남	14.0	2,751	19.3	3,952	18.0	3,786	18.1	3,883	16.9	3,710
	여	14.6	2,892	19.3	3,976	17.1	3,614	17.3	3,734	15.7	3,459
연령	15-19세	59.5	1,846	79.8	2,688	72.3	2,508	75.4	2,543	71.1	2,291
	20-29세	8.3	624	13.9	994	13.2	903	13.7	916	11.6	787
	30-39세	10.2	876	13.6	1,131	11.2	919	11.2	900	10.7	831
	40-49세	13.9	1,157	18.6	1,593	17.1	1,471	17.3	1,497	15.6	1,365
	50-59세	12.4	678	15.5	988	14.6	1,055	14.5	1,134	14.6	1,193
	60세 이상	6.5	420	7.0	510	7.2	563	7.8	660	7.8	725

주: 자원봉사 참가자 수는 통계청 해당 연도 잠재인구추계 모집단에 자원봉사 참가율을 곱해 산정, 자원봉사 참가율은 통계청 사회조사를 기반으로 추정.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6),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이와 같은 결과는 자원봉사 참여율을 산정하는 통계청의 사회조사가 조사 대상 중 1년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한 비율을 산정하는 반면, 행자부 1365 포털이나 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시스템 그리고 여가부 및 문체부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거나, 각 부처의 관리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수가 누락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이 실적 등록을 원치 않거나 기업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 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실적 등록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 관리시스템하에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주말 자원봉사의 경우, 사원이 원하는 경우에만 정부의 관리시스템에 등록될 뿐 의무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과 기업 직원들의 경우 근무시간 중 이루어지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³⁾

둘째, 행자부 나눔포털에서 집계되는 자원봉사자 수의 경우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기반으로 한 15세 이상 자원봉사 참가율이 2009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사회조사를 기반으로 한 15세 이상 자원봉사 참가율은 2009년 19.3%에서 2015년 16.3%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시스템에서 집계되는 연도별 자원봉사자 수 역시 동일 기간 연평균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행자부의 1365 포털 자원봉사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 160만 명에서 2015년 374.6만 명으로 약 2.3배로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2010~2015)은 15.9%에 이른다.

3) 보건복지부(2012).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2010. 7. 1. 시행).

38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표 2-14〉 행자부 및 복지부 자원봉사 참여자 추이: 2010~2015년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행 자 부	활동 인원	3,746,577	3,174,876	2,642,529	2,163,174	1,743,394	1,790,411
	전년 대비 증감 인원	571,701	532,347	479,355	419,780	47,017	186,511
복 지 부	활동 인원	1,438,086	1,780,798	1,384,549	1,353,476	1,531,268	1,509,572
	전년 대비 증감 인원	-342,712	396,249	31,073	-177,792	21,696	-

주: 현행 실적 포함함.

자료: 행자부 자료는 행정자치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6) 내부자료.

복지부 자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1~2014) 자원봉사 통계연보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6) 내부자료.

최근의 자원봉사활동이 감소 또는 답보 상태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은 현재까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본고에서 추정해 보면 크게 2가지 차원, 즉 자원봉사자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요 차원에서 자원봉사 수요처의 일거리가 감소하거나 수요처 수 자체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실례로 행자부의 자원봉사센터 현황 자료에 의하면 일감 수가 2011년 37만 건에서 2015년 12.5만 건으로 약 6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원봉사 수요처 수에서도 2009년 6.4만 개에서 2015년 4.1만 개로 약 4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자원봉사 수요처가 감소하면서 일거리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수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표 2-15〉 행자부 자원봉사 일감 수 및 수요처 연도별 추이: 2009~2015년

(단위: 건,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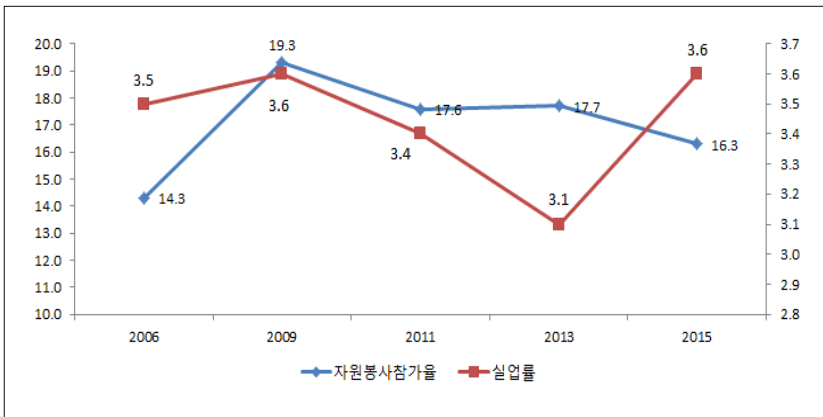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일감 수	6,745	35,047	373,729	205,848	159,451	156,065	125,398
수요처	63,983	69,681	61,802	67,919	48,566	61,296	41,173

자료: 행정자치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16). 2016 자원봉사센터현황. p.71, 75.

둘째는 공급 차원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자원봉사 참가율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이다. 개인은 타인을 배려하는 심리적·경제적 여유가 존재할 때, 자원봉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이 실업 상태에 놓인다면, 심리적·경제적 여유와 더불어 자원봉사 참가율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2011년 이후, 실업률과 자원봉사 참가율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⁴⁾

[그림 2-1] 실업률과 자원봉사 참가율 추이: 2006~2015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동향 각 연도.

이와 관련해 2015년 행자부의 1365 포털 자원봉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를 제외한 30대 이상 자원봉사자 비중이 2010년에 비해 3.1~5.5%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대 이하는 대학 입시와

4) 본고에서는 실업률과 자원봉사 참가율 간의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음의 관계가 신뢰수준 90%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실업률과 자원봉사 참가율에 대한 측정치가 30개 미만 이어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능성만을 제시함.

40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 준비를 위한 실적 때문에 자원봉사가 증가한 반면, 직장인이 대부분인 30대 이상은 실업률 증가로 자원봉사 참가율이 감소했다고 판단된다.

〈표 2-16〉 행사부 1365 포털 자원봉사 참여자: 2010·2015년

(단위: 명, %, %p)

구분	전체		남		여		
	참여자 수	%, %p	참여자 수	%, %p	참여자 수	%, %p	
2015년	전체	3,745,259	100.0	1,524,908	40.7	2,220,351	59.3
	10대 이하	1,647,733	44.0	733,020	19.6	914,713	24.4
	20대	459,337	12.3	208,010	5.6	251,327	6.7
	30대	265,862	7.1	94,854	2.5	171,008	4.6
	40대	565,507	15.1	168,510	4.5	396,997	10.6
	50대	458,307	12.2	181,381	4.8	276,926	7.4
	60대 이상	348,513	9.3	139,133	3.7	209,380	5.6
2010년	전체	1,790,363	100.0	723,619	40.4	1,066,744	59.6
	10대 이하	627,045	35.0	303,233	16.9	323,812	18.1
	20대	131,358	7.3	60,728	3.4	70,630	3.9
	30대	224,993	12.6	73,157	4.1	151,836	8.5
	40대	365,720	20.4	123,775	6.9	241,945	13.5
	50대	274,655	15.3	97,237	5.4	177,418	9.9
	60대 이상	166,592	9.3	65,489	3.7	101,103	5.6
10년대비	전체	1,954,896	0.0	801,289	0.3	1,153,607	-0.3
	10대 이하	1,020,688	9.0	429,787	2.6	590,901	6.3
	20대	327,979	4.9	147,282	2.2	180,697	2.8
	30대	40,869	-5.5	21,697	-1.6	19,172	-3.9
	40대	199,787	-5.3	44,735	-2.4	155,052	-2.9
	50대	183,652	-3.1	84,144	-0.6	99,508	-2.5
	60대 이상	181,921	0.0	73,644	0.1	108,277	-0.1

자료: 행정자치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6). 2010·2015년 자원봉사 운영실적 통계 원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

이러한 경향은 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시스템(이하 VMS)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010년 대비 2015년에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자원봉사자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 연령대 중 20대가 19.3% 포인트로 격차가 가장 크며, 그 이외 연령대에서는 대부분 3.3~3.8% 포인트 격차가 나타났다.

〈표 2-17〉 복지부 VMS 자원봉사 참여자: 2010·2015년

(단위: 명, %, %p)

구분	전체		남		여		
	참여자 수	%, %p	참여자 수	%, %p	참여자 수	%, %p	
2015년	전체	1,438,086	100	602,877	100	835,209	100
	10대 이하	531,401	37.0	237,151	39.3	294,250	35.2
	20대	450,047	31.3	200,202	33.2	249,845	29.9
	30대	94,224	6.6	51,555	8.6	42,669	5.1
	40대	138,525	9.6	50,555	8.4	87,970	10.5
	50대	129,575	9.0	42,650	7.1	86,925	10.4
	60대 이상	94,314	6.6	20,764	3.4	73,550	8.8
2010년	전체	1,509,572	100.0	644,658	100.0	864,914	100.0
	10대 이하	47,930	3.2	22,089	3.4	25,841	3.0
	20대	763,748	50.6	339,145	52.6	424,603	49.1
	30대	149,965	9.9	70,517	10.9	79,448	9.2
	40대	198,288	13.1	106,900	16.6	91,388	10.6
	50대	192,750	12.8	67,411	10.5	125,339	14.5
	60대 이상	156,891	10.4	38,596	6.0	118,295	13.7
10년 대비 15년	전체	-71,486	0.0	-41,781	0.0	-29,705	0.0
	10대 이하	483,471	33.8	215,062	35.9	268,409	32.2
	20대	-313,701	-19.3	-138,943	-19.4	-174,758	-19.2
	30대	-55,741	-3.3	-18,962	-2.3	-36,779	-4.1
	40대	-59,763	-3.5	-56,345	-8.2	-3,418	-0.1
	50대	-63,175	-3.8	-24,761	-3.4	-38,414	-4.1
	60대 이상	-62,577	-3.8	-17,832	-2.6	-44,745	-4.9

주: 현행 실적 제외.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6). 2010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보건복지부(2015).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

42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또한 자원봉사 1인당 참여 횟수에서는 자원봉사 영역에 따라 약간 차별적이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복지와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행자부의 1365 포털 사이트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자원봉사자 1인당 평균 자원봉사 횟수는 8.5회였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15년도에는 1인당 6.6회로 약 1.9회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20대 미만(+0.6~-0.7회)보다 30대 이상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8〉 행자부 1365 포털 자원봉사자 1인당 자원봉사 횟수

(단위: 회)

구분	연령	전체	남	여
2015년	전체	6.6	6.1	7.0
	10대 이하	3.6	3.4	3.7
	20대	4.9	4.9	4.8
	30대	6.4	6.2	6.4
	40대	8.7	9.6	8.3
	50대	11.9	10.5	12.8
	60대 이상	13.4	12.3	14.0
2010년	전체	8.5	7.8	9.0
	10대 이하	2.9	2.9	2.9
	20대	5.5	5.8	5.3
	30대	8.5	9.4	8.0
	40대	11.5	11.9	11.2
	50대	14.0	12.7	14.7
	60대 이상	16.6	15.4	17.3
2010년 대비 2015년	전체	-1.9	-1.7	-2.1
	10대 이하	0.6	0.5	0.8
	20대	-0.7	-0.9	-0.5
	30대	-2.1	-3.2	-1.6
	40대	-2.8	-2.3	-2.9
	50대	-2.2	-2.3	-2.0
	60대 이상	-3.2	-3.1	-3.3

자료: 행정자치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6). 2010·2015년 자원봉사 운영실적 통계 원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

다만 복지부의 VMS 자료는 과거에 비해 현재 자원봉사 횟수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기준 자원봉사자 1인당 자원봉사 횟수는 5.4회였고, 2015년 기준 현혈을 제외한 1인당 자원봉사 횟수는 5.9회로 파악된다. 즉 5년 동안 약 0.5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2.0회 감소하였을 뿐 전 연령대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복지부 자료 중 약 3분의 2가 행자부 자료와 중복되어 있다고 볼 때 자원봉사 횟수의 감소는 자원봉사자들의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표 2-19〉 복지부 VMS 자원봉사자 1인당 자원봉사 횟수

(단위: 회)

구분	연령	전체	남	여
2015년	전체	5.9	4.9	6.6
	10대 이하	3.9	3.8	4.0
	20대	5.5	5.2	5.7
	30대	3.8	3.3	4.2
	40대	5.8	4.0	6.8
	50대	8.1	5.4	9.4
	60대 이상	17.3	18.4	16.9
2010년	전체	5.4	4.3	6.2
	10대 이하	2.4	2.4	2.4
	20대	3.7	3.3	4.0
	30대	5.8	7.2	4.6
	40대	4.1	2.3	6.1
	50대	7.2	4.8	8.4
	60대 이상	13.6	12.6	14.0
2010년 대비 2015년	전체	0.5	0.6	0.4
	10대 이하	1.5	1.4	1.6
	20대	1.8	1.9	1.7
	30대	-2.0	-3.9	-0.4
	40대	1.7	1.7	0.7
	50대	0.9	0.6	1.0
	60대 이상	3.7	5.8	2.9

주: 현혈 실적 제외.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6). 2010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보건복지부(2015).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

2. 자원봉사 시간

한편 자원봉사활동의 또 다른 양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2015년과 2010년, 두 기간 동안 자원봉사 시간 관련 현황 자료를 행자부와 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앞서 분석한 1인당 자원봉사 참여 횟수 경향과 같이 행자부와 복지부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0〉 행자부 1365 포털 자원봉사자 1인당 자원봉사 누적 시간

(단위: 회)

구분	연령	전체	남	여
2015년	전체	22.6	19.6	24.6
	10대 이하	11.0	10.0	11.8
	20대	23.9	23.9	23.9
	30대	16.0	14.9	16.6
	40대	26.1	28.0	25.2
	50대	41.4	35.9	45.1
	60대 이상	50.5	36.1	60.1
2010년	전체	25.6	21.7	28.3
	10대 이하	11.5	11.1	11.9
	20대	21.6	21.8	21.5
	30대	24.8	22.9	25.8
	40대	32.6	32.9	32.5
	50대	36.6	25.8	42.5
	60대 이상	49.1	41.7	53.9
2010년 대비 2015년	전체	-3.0	-2.0	-3.6
	10대 이하	-0.5	-1.1	-0.1
	20대	2.3	2.1	2.5
	30대	-8.8	-8.0	-9.2
	40대	-6.6	-4.8	-7.3
	50대	4.8	10.1	2.5
	60대 이상	1.3	-5.6	6.1

자료: 행정자치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6). 2015년 자원봉사 운영실적 통계 원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

우선, 행자부 1365 포털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자 1인당 1년간 평균 누적 시간은 2010년 대비 2015년에 3시간 정도 감소하였으며, 특히 1인당 자원봉사 횟수가 감소했던 30대 이상 중 30대와 40대는 각각 8.8시간, 6.5시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복지부의 VMS 자원봉사자 1인당 자원봉사 누적시간은 2010년 평균 19.4시간에서 2015년 19.7시간으로 대동소이하다.

〈표 2-21〉 복지부 VMS 자원봉사자 1인당 자원봉사 누적 시간

(단위: 시간)

구분	연령	전체	남	여
2015년	전체	19.7	17.1	21.5
	10대 이하	12.2	12.2	12.3
	20대	20.6	20.2	20.8
	30대	13.5	12.5	14.5
	40대	19.0	14.4	21.5
	50대	26.8	19.7	30.2
	60대 이상	53.8	58.3	52.6
2010년	전체	19.4	16.3	21.8
	10대 이하	7.9	8.0	7.8
	20대	14.3	12.9	15.4
	30대	23.5	30.1	17.6
	40대	14.1	9.0	20.1
	50대	24.5	18.2	27.9
	60대 이상	44.3	41.7	45.2
2010년 대비 2015년	전체	0.3	0.8	-0.3
	10대 이하	4.3	4.2	4.5
	20대	6.3	7.3	5.4
	30대	-10.0	-17.6	-3.1
	40대	4.9	5.4	1.4
	50대	2.3	1.5	2.3
	60대 이상	9.5	16.6	7.4

주: 현행 실적 제외.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6). 2010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보건복지부(2015).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

46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둘째, 행자부 자료는 1인당 자원봉사 누적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1회당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에 1회당 3.0시간이었던 자원봉사 시간은 2015년에 들어 0.4시간 증가한 3.4시간이었다. 다만 연령대에서 20대 및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에서 각각 1.1시간, 1.4시간, 1.2시간 증가하였다.

〈표 2-22〉 행자부 1365 포털 자원봉사 1회당 자원봉사 시간

(단위: 회)

구분	연령	전 체	남	여
2015년	전체	3.4	3.2	3.5
	10대 이하	3.1	2.9	3.2
	20대	4.9	4.9	4.9
	30대	2.5	2.4	2.6
	40대	3.0	2.9	3.0
	50대	3.5	3.4	3.5
	60대 이상	3.8	2.9	4.3
2010년	전체	3.0	2.8	3.1
	10대 이하	3.9	3.8	4.1
	20대	3.9	3.8	4.0
	30대	2.9	2.4	3.2
	40대	2.9	2.8	2.9
	50대	2.6	2.0	2.9
	60대 이상	3.0	2.7	3.1
2010년 대비 2015년	전체	0.4	0.4	0.4
	10대 이하	-0.9	-0.9	-0.9
	20대	1.0	1.1	0.9
	30대	-0.4	-0.0	-0.6
	40대	0.1	0.2	0.1
	50대	0.9	1.4	0.6
	60대 이상	0.8	0.2	1.2

자료: 행정자치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6). 2015년 자원봉사 운영실적 통계 원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

이와 같은 경향은 복지부의 VMS 포털의 1회당 자원봉사 시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010년 기준 1회당 자원봉사 시간은 3.6시간이었고, 여성(3.5시간)보다 남성(3.8시간)이 약 0.3시간 많았다. 그러나 2015년 1회당 자원봉사 시간은 3.4시간으로 2015년 대비 0.2시간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였지만 그 감소 폭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줄면서 누적 자원봉사 시간도 감소했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 시간이 통상 4시간 정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 관행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2-23〉 복지부 VMS 자원봉사 1회당 자원봉사 시간

(단위: 시간)

구분	연령	전체	남	여
2015년	전체	3.4	3.5	3.3
	10대 이하	3.2	3.2	3.1
	20대	3.8	3.9	3.7
	30대	3.6	3.8	3.4
	40대	3.3	3.6	3.2
	50대	3.3	3.6	3.2
	60대 이상	3.1	3.2	3.1
2010년	전체	3.6	3.8	3.5
	10대 이하	3.3	3.4	3.3
	20대	3.9	3.9	3.8
	30대	4	4.2	3.8
	40대	3.5	3.8	3.3
	50대	3.4	3.8	3.3
	60대 이상	3.3	3.3	3.2
2010년 대비 2015년	전체	-0.2	-0.3	-0.2
	10대 이하	-0.1	-0.2	-0.2
	20대	-0.1	0.0	-0.1
	30대	-0.4	-0.4	-0.4
	40대	-0.2	-0.2	-0.1
	50대	-0.1	-0.2	-0.1
	60대 이상	-0.2	-0.1	-0.1

주: 현행 실적 제외.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6). 2010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보건복지부(2015).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

3. 자원봉사 내용

한편,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기존의 단순 노동력 제공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행자부 1365 포털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생활편의가 전체 자원봉사의 2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방법(16.5%), 문화행사(11.6%), 교육(7.5%), 환경보호(7.2%)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2010년도 대비 각각 19.0% 포인트, 10.4% 포인트, 9.7% 포인트, 5.8% 포인트, 5.7% 포인트 증가에 그친다.

〈표 2-24〉 행자부 1365 포털 자원봉사활동 영역별 자원봉사자 수 및 비중

(단위: 명, %, %p)

구분	2015년		2010년		2015-2010년 격차	
	봉사자 수	%	봉사자 수	%	봉사자 수	%p
전체	3,745,259	100.0	1,790,363	100.0	1,954,896	0.0
생활편의	969,744	25.9	124,127	6.9	845,617	19.0
주거환경	135,612	3.6	8,935	0.5	126,677	3.1
상담	41,111	1.1	11,608	0.6	29,503	0.4
교육	280,400	7.5	31,311	1.7	249,089	5.8
보건의료	47,527	1.3	14,609	0.8	32,918	0.5
농어촌	21,597	0.6	1,706	0.1	19,891	0.5
문화행사	435,200	11.6	34,735	1.9	400,465	9.7
환경보호	269,666	7.2	26,364	1.5	243,302	5.7
행정보조	244,611	6.5	26,401	1.5	218,210	5.1
안전·방법	617,258	16.5	108,338	6.1	508,920	10.4
인권·권익	10,295	0.3	280	0.0	10,015	0.3
재해·재난	10,804	0.3	1,248	0.1	9,556	0.2
국제협력	14,442	0.4	2,850	0.2	11,592	0.2
멘토링	40,205	1.1	1,069	0.1	39,136	1.0
기타	606,787	16.2	1,396,782	78.0	-789,995	-61.8

자료: 행정자치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6). 2010·2015년 자원봉사 운영실적 통계 원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비중이 높은 5대 자원봉사활동 중 문화행사(65.8%) 이외에 멘토링(106.6%), 인권·권익(105.6%), 주거환경(72.3%), 농어촌(66.1%)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은 비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전통적인 자원봉사 영역인 생활편의, 교육 보건의료, 등의 비중은 2015년 기준 각각 25.9%, 7.5%, 1.3%로 전체 중 약 40% 미만을 차지하지만 최근에 급증하는 안전·방법(16.5%), 문화행사(11.6%), 환경보호(7.2%), 행정보조(6.5%), 주거환경(3.6%) 등의 새로운 봉사영역 비중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표 2-25〉 행자부 자원봉사활동 영역별 연평균 증가율: 2010~2015년

(단위: %)

활동 분야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15.9	16.1	15.8	21.3	28.5	3.4	9.1	10.8	15.9
생활편의	50.9	44.2	54.8	57.9	67.2	34.6	42.0	44.2	50.9
주거환경	72.3	59.8	79.0	80.3	91.0	53.7	62.2	64.7	72.3
상담	28.8	9.1	37.4	34.8	42.7	14.9	21.2	23.1	28.8
교육	55.0	52.3	56.8	62.3	71.8	38.3	45.9	48.2	55.0
보건의료	26.6	14.3	32.8	32.5	40.3	12.9	19.2	21.0	26.6
농어촌	66.1	75.8	58.1	73.9	84.2	48.3	56.4	58.8	66.3
문화행사	65.8	65.2	66.2	73.5	83.8	47.9	56.1	58.5	65.8
환경보호	59.2	67.4	52.5	66.6	76.4	42.0	49.9	52.2	59.2
행정보조	56.1	39.4	64.3	63.4	73.0	39.2	46.9	49.2	56.1
안전·방법	41.6	56.1	26.7	48.2	57.0	26.3	33.3	35.4	41.6
인권·권익	105.6	106.3	105.2	114.8	129.1	83.6	93.7	96.5	105.7
재해·재난	54.0	72.4	33.3	61.1	70.9	37.3	44.9	47.2	54.0
국제협력	38.3	39.5	37.6	44.8	53.3	23.4	30.2	32.2	38.3
멘토링	106.6	101.8	109.6	116.2	129.2	84.3	94.3	97.4	106.7
기타	-15.4	-16.2	-14.8	-11.4	-6.2	-24.5	-20.3	-19.1	-15.4

자료: 행정자치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6). 2010·2015년 자원봉사 운영실적 원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

이러한 경향은 복지부 VMS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포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전통적인 봉사 영역인 시설봉사와 재가봉사 비중은 2010

50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년도 대비 2015년도에 각각 6.2% 포인트, 2.0% 포인트 감소하였지만, 전문봉사와 지역사회봉사, 헌혈이 포함된 기타봉사는 각각 0.2% 포인트, 1.2% 포인트, 6.9% 포인트 증가로 나타난다.

〈표 2-26〉 복지부 VMS 자원봉사활동 영역별 자원봉사자 수 및 비중

(단위: 명, %, %p)

구분	2015년		2010년		2015-2010년 격차	
	봉사자 수	%	봉사자 수	%	봉사자 수	%p
전체	1,676,182	100.0	1,682,550	100.0	-6,368	0.0
시설봉사	1,098,938	65.6	1,206,763	71.7	-107,825	-6.2
재가봉사	95,991	5.7	130,655	7.8	-34,664	-2.0
전문봉사	45,744	2.7	42,788	2.5	2,956	0.2
지역사회봉사	138,769	8.3	120,034	7.1	18,735	1.2
해외봉사	5,205	0.3	6,031	0.4	-826	0.0
기타봉사	291,535	17.4	176,279	10.5	115,256	6.9

주: 헌혈 실적 포함.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6). 2010·2015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

그리고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시설봉사와 재가봉사는 감소 추세이나 전문·지역사회·기타봉사는 반대로 증가 추세로 나타난다.

〈표 2-27〉 복지부 자원봉사활동 영역별 연평균 증가율: 2010~2015년

(단위: %)

활동 분야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0.1	-0.7	0.2	64.4	-8.0	-12.7	-3.1	-7.1	-10.0
시설봉사	-1.9	-2.4	-1.5	61.1	-12.9	-13.0	-2.9	-7.1	-9.0
재가봉사	-6.0	-5.7	-6.2	63.5	-9.9	-14.4	-6.6	-12.6	-14.7
전문봉사	1.3	1.5	1.3	87.7	8.0	-15.1	-3.3	-9.1	-9.8
지역사회봉사	2.9	0.4	5.1	53.6	-0.5	-12.9	-4.8	-12.1	-12.4
해외봉사	-2.9	-2.3	-3.4	63.3	5.2	-35.1	-24.0	-22.3	-14.4
기타봉사	10.6	8.1	11.7	111.4	4.9	-8.8	3.0	9.7	-10.3

주: 헌혈 실적 포함.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6). 2010·2015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

4. 자원봉사 수요처

앞서 본고에서는 2015년 기준, 행자부의 자원봉사 수요처가 2010년 대비 약 40% 감소한 4.1만 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약 5년 동안 연평균 약 10%씩 감소한 수치이다. 이들 행자부의 자원봉사 수요처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시설과 문화, 체육 등의 시설을 의미하는 민간시설이 약 3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으로 시민단체 등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가 20.4%로 전체 수요처 중 민간 비영리기관 및 시설이 약 52.2%를 차지한다.

〈표 2-28〉 행자부 자원봉사 수요처 연도별 추이: 2010~2015년

(단위: 개,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수요처	69,681	61,802	67,919	48,566	61,296	41,173	-10.0

자료: 행정자치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16). 2016 자원봉사센터현황. p.75.

〈표 2-29〉 2015년 기준 행자부 자원봉사 수요처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행정 기관	공공 기관	공공 시설	민간 기관	기업체	시설	기타
기관 수	41,173	5,824	5,745	5,717	8,396	770	13,092	1,629
비중	100.0	14.1	14.0	13.9	20.4	1.9	31.8	4.0

자료: 행정자치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16). 2016 자원봉사센터현황. p.78.

그러나 전통적인 자원봉사 수요처인 복지부의 비영리 사회복지 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수요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2010년 기준 자원봉사 수요처는 총 7,391개였으나 2015년의 경우 총

52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12,142개로 연평균 10.4%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세부 시설로는 아동시설 증가가 가장 많았다.

결국 자원봉사 수요처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증가하였지만, 기타 공공 부문의 자원봉사 수요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우선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복지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도 증가하였겠지만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시설별 지원이 질적인 면, 즉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인력 수에서 부족하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부의 공공부문 자원봉사 수요처 감소는 민간시설 이외에 존재했던 공공 시설이나 행정기관 등의 자원봉사가 감소했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 예산이 공공행정 등의 인력 확대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2-30〉 복지부 VMS 자원봉사 수요처 추이: 2010~2015년

(단위: 개, %)

구분		2010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7,391	12,142	10.4
사회 복지	전체	6,150	10,281	10.8
	아동시설	1,402	2,640	13.5
	노인시설	1,830	3,297	12.5
	장애인시설	1,103	1,931	11.9
	여성복지시설	164	226	6.6
	정신요양시설	111	175	9.5
	노숙인복지시설	50	71	7.3
	복지관	409	453	2.1
법인/단체		1,081	1,488	6.6
보건의료		472	721	8.8
기타		769	1,140	8.2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6). 2010·2015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

제3절 한국의 기업 자원봉사 현황

현재까지 개인의 경우, 통계청 사회조사나 각 부처별 자원봉사 시간통계로 인해 자원봉사 현황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현황 조사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경우는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1번씩 팩스나 이메일, 전화로 자원봉사를 포함한 사회공헌활동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전경련의 경우,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만큼 국내 기업 중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회원사이기 때문에 매출액 상위 501~1,000위 기업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경련과 대한상의 2개 단체가 매년 발간하는 사회공헌백서를 기반으로 한국 기업들의 자원봉사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만 각 보고서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 상이한 설문 문항을 채택한 경우가 많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비교 불가능한 조사 내용은 가급적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율 감소와 더불어 기업들의 자원봉사 참여율도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자원봉사 참여율의 감소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액 기준 1~500위 상위 기업인 대기업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2년 77.8%였으나 2014년에는 55.8%로 연평균 15.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매출액 501~1,000위인 중소·중견기업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연평균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감소율이 중소기업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또한 1인당 평균 자원봉사 참여 시간에서도 대기업은 평균 12~17

54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시간이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약 23~30시간으로 대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대기업 (전경련)	자원봉사 참여율	77.8	70.0	55.8	-15.3
	1인당 평균 참여시간	-	12.0	17.0	-
중소·중견기업 (대한상의)	자원봉사 참여율	48.5	46.9	41.4	-7.6
	1인당 평균 참여시간	22.7	30.2	-	-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13~2015).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대한상공회의소(2013~2015).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백서.

〈표 2-3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사회공헌비용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대기업 (전경련)	평균 사회공헌비용	14,442	12,003	11,562	-10.5
	평균 자원봉사비용	910	288	694	-12.7
중소·중견기업 (대한상의)	평균 사회공헌비용	340	250	349	1.3
	평균 직접사업비용 (자원봉사 포함)*	43	13	136	77.8

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당 평균 자원봉사 비용이 사회공헌 중 직접사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과의 비교는 불가능.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13~2015).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대한상공회의소(2013~2015).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백서.

이와 같은 추이는 기업의 사회공헌 또는 자원봉사 비용에서도 나타난다. 평균 자원봉사 참여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 2012~2014년까지 연평균 10.5% 정도 사회공헌 비용이, 그리고 연평균 12.7% 정도 평균 자원봉사 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중소·중견기업의 평균 사회공헌 비용은 연평균 증가율 1.3%로 거의 현상 유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과거에 비해 사회공헌 전담부서와 담당자 존재율에서도 대기업이 나 중견·중소기업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2012년 사회공헌 전담부서와 담당자 존재율은 각각 84.9%에서 42.4%, 67.5%로 감소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은 각각 14.6%, 85.4%에서 7.9%, 64.8%로 비중이 낮아졌다.

〈표 2-3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전담부서와 담당자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대기업 (전경련)	사회공헌 전담부서 有	84.9	77.9	42.4	-29.3
	사회공헌 담당자 有	84.9	77.9	67.5	-10.8
중소중견기업 (대한상의)	사회공헌 전담부서 有	14.6	45.1	7.9	-26.4
	사회공헌 담당자 有	85.4	79.6	64.8	-12.9

주: 각 비율은 각 연도 설문조사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 기업 기준.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13~2015).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대한상공회의소(2013~2015).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백서.

둘째로 자원봉사 참여율의 감소 원인 중 하나는 기업의 자원봉사 지원 제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자원봉사 참여율의 감소는 앞서 개인 자원봉사 현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원봉사 수요, 즉 일거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업 내 자원봉사 지원제도의 감소는 직장인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례로 2012~2014년간 지원제도 운영률에 있어서 대기업은 연평균 1.2% 정도, 중소·중견기업은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대기업의 경우 봉사자 시간등록 지원제도 운영률이 연평균 10% 정도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봉사활동 시간의 근무시간 인정이 연평균 60.3% 증가했다는 점이다.

〈표 2-3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원봉사 지원제도 추이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대기업 (전경련)	지원제도 운영률	77.7	79.5	75.8	-1.2
	봉사단 조직 구축(경비 지원)	85.9	88.7	85.7	-0.1
	봉사자 포상/인센티브 부여	69.6	70.4	64.0	-4.1
	봉사활동 임직원 교육 지원	61.3	60.2	53.1	-6.9
	봉사휴가제도	60.7	62.4	60.0	-0.6
	봉사자 등록 지원제도	67.0	62.9	54.3	-10.0
	기타	64.9	71.0	-	-
중소중견 기업 (대한상의)	지원제도 운영률	54.6	40.7	49.0	-5.3
	봉사단 조직 구축(경비 지원)	76.1	58.7	78.4	1.5
	봉사자 포상/인센티브 부여	18.3	32.6	14.9	-9.8
	봉사활동 임직원 교육 지원	-	-	6.8	-
	봉사활동 근무시간 인정	26.8	32.6	68.9	60.3
	기타	9.9	10.9	2.7	-47.8

주: 전경련(2013~14). 자원봉사 지원제도의 기타 내용은 임직원 외 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13~2015).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대한상공회의소(2013~2015).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백서.

셋째, 자원봉사 참여율과 지원제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또는 사회공헌 분야에서 여전히 취약계층 지원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주요 수요처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경우 45% 정도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84% 이상이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해 사회복지시설을 자원봉사 또는 사회공헌의 주요 활동 분야로 선택하고 있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차이는 대기업의 경우, 학술·장학 분야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감소하였고, 그 대신 문화·예술·스포츠 등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표 2-3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분야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대기업 (전경련, 단수응답)	사회복지(취약계층 지원)	-	45.0	45.6
	보건의료	-	4.8	7.6
	학술장학	-	16.4	23.0
	문화예술스포츠	-	9.4	9.7
	환경보호(보전)	-	6.2	5.1
	응급재난구호	-	1.3	-
	농어촌지원	-	3.5	-
	해외지원	-	5.2	3.0
	기타	-	8.3	6.0
중소중견 기업 (대한상의, 복수응답)	사회복지(취약계층 지원)	83.9	91.2	88.7
	보건의료	8.5	8.0	11.9
	학술장학	31.5	25.7	18.5
	문화예술스포츠	15.4	15.9	23.1
	환경보호	16.9	18.6	17.9
	응급재난구호	8.5	11.5	12.6
	농어촌지원	7.7	8.8	11.9
	해외지원	6.2	8.8	15.2
	기타	2.3	5.3	4.6

주: 전경련, 2013년 보고서에는 2012년 사회공헌 분야별 프로그램 비중 자료는 부재, 2015년 보고서에서는 사회공헌 분야 중 응급재난구호와 농어촌지원 부분 설문 변경.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13~2015),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대한상공회의소(2013~2015),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백서.

넷째, 기업들은 자원봉사를 포함한 사회공헌 파트너 선정에서 파트너 없이 자체 사업에 집중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경우 파트너 없이 자체 사업만을 추진한다는 비중이 22% 이상이었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27%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수의 기업이 파트너십 상대로 비영리단체(NPO) 등을 선호하면서도 자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파트너 기관의 대외 투명성이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부족, 그리고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기업-외부 기관 간 시각

차이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편, 다른 파트너 선정 시 국가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이 14.7%, 중소기업이 28.3%로, 기타를 제외할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3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파트너 현황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대기업 (전경련, 단수응답)	직접 사업	33.0	22.5	-
	국가/지자체	67.0	14.7	-
	NGO, NPO 등 시민단체*		48.4	-
	자사출연재단		4.2	-
	기타(타 기업, 종교시설 포함)		10.3	-
중소중견 기업 (대한상의, 복수응답)	직접 사업	-	47.8	27.8
	국가/지자체	-	28.3	29.1
	NGO, NPO 등 시민단체*	-	41.6	61.6
	자사 출연재단	-	-	11.9
	기타(타 기업, 종교시설 포함)	-	18.6	12.5

주: 1) 2012년, 2013년 자료 중 부재한 자료는 설문 변경으로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 사회복지시설 및 모금/배분 전문기관 포함.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13~2015).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대한상공회의소(2013~2015).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백서.

다섯째, 기업들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제도 마련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68.3%(14년도 기준)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공헌 관련 법/제도 수립, 사회공헌인증제도를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제도 마련 등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5) 전국경제인연합회(2015). 2015년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p.18.

〈표 2-37〉 중소·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지원 방안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 여부		77.2	68.3
지원방안	제도 마련	34.7	70.9
	물질적 지원	22.1	36.9
	문화 정착	14.1	30.1
	정보 공유	21.6	30.1
	없음	5.5	1.0
	기타	2.0	-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13~2015).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대한상공회의소(2013~2015).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백서.

〈표 2-38〉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방안 예시

구분	주요 내용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 수립 - 근로기준법 등에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마련 -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정부 조달 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해 주는 제도 마련 - 국가 차원에서 사회공헌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제도
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고려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업들에 제공 - 자원봉사와 관련된 참신한 아이템 발굴 및 홍보 - 지원 대상 및 자원 봉사처(수요처)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신뢰성 검증 - 기업의 주력 사업 등을 고려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정보 제공
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전파, 우수기관 선정 등에 대한 대외적 홍보 마련 -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물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 혜택 확대(세금 감면, 대출 시 금리 인하 등) - 인센티브(자금 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 - 인적지원(자원봉사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사 파견, 사회공헌 담당 대상 교육 등)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컨설팅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15).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백서. p.223.



제 3 장

자원봉사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측정

제1절 개관

제2절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

제3절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



3

자원봉사의 경제적·사회적 << 가치 측정

제1절 개관

본고에서는 앞서 서론을 통해 소득 양극화에 따른 복지 재정 증가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보완 방안을 찾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그 목적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가 정부의 복지예산 감소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으려면 그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원봉사가 가진 정책적 효과를 살펴본다면 사회적 자본 형성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2가지 세부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노동력 등 정부의 재정지출이 아닌 민간의 순수한 자본 투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 산업 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정부 재정의 절감 효과라고 할 것이다. 둘째는 자원봉사가 소득 양극화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의 감소, 즉 사회적 약자나 자신 이외의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이해 증진 효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첫째, 정부 재정의 절감 효과 측면에서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둘째는 사회적 이해 증진의 측면에서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시도하였다.

자원봉사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측정은 각각 산업연관분석과 설문조사라는 2가지 방법론을 전제로 구축하였다. 우선, 경제적 가치는 자원봉사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로 조작적 정의하고,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의 상호의존관계를 일람표 형식으로 표시한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경제 동향을 산업 간의

생산기술적 연관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투입 대비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매년 산업연관분석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방법은 특정 산업 내 투입량 대비 산출량을 기반으로 국가경제의 전 산업에서 파급되는 생산 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액과 이로 인한 고용 및 취업 유발 규모의 분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사회적 가치는 개인 자원봉사로 연계 되는 사회적 편익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즉 자원봉사를 통해 획득하는 사회적 산출가치에서 비용을 제한 순가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측정을 위해 최근 1년간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절차는 우선 자원봉사의 현황 통계자료 확보 후 산업연관분석과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우선 사회적 가치 측정은 자원봉사자 자신의 노동력과 비용 대비 자원봉사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이해보나 편익 등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 산정의 경우, 총자원봉사자와 그들이 투입한 노동력 및 경비를 합친 총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즉 교통비 등 실비용을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얻어 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존재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총투입인력에서도 앞서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부처에 산재해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통합 자료를 산출해야 하는 것도 큰 과제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총자원봉사자 현황 자료를 행자부와 복지부의 자원봉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추출하는 한편, 경제적 가치 조사와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제2절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

1.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자원봉사의 경제적 파급 효과

가. 시나리오 설정과 분석자료 수집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크게 2가지 기초자료, 즉 자원봉사자의 총수와 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투입한 인건비 및 간접비를 합친 총투입비용 자료가 필요하다. 우선 자원봉사자 총수의 경우, 자료 수집 과정에서 2가지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그중 하나는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행자부,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의 통합 현황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고, 둘째는 통계청 사회조사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고려한 추정 자원봉사 참가자 수 717만 명과 가장 규모가 큰 행자부와 복지부의 총참가자 수(중복 제외) 429만 명 간에 약 300만 명의 수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었다.⁶⁾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변수로서 통계청 사회조사에 근거한 자원봉사자 717만 명과 행자부 및 복지부 통합 자원봉사시스템상에 포함된 자원봉사자 수 429만 명 가정하에 시나리오를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번째로 개인이 자원봉사활동에 투여한 총비용의 경우,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간접비의 경우 사회적 가치 측정에서 조사한 자원봉사활동 시 하루당 개인이 쓴 교통비 등 평균 개인경비를 자원봉사 영역별 평균 비용으로 간주하여 적용하였다.

6) 통계청 사회조사에는 직장인을 포함해 자원봉사 참여율을 조사하고 있고, 행자부 및 복지부 행정자료는 기업 자원봉사 시 근무시간 인정이 안 되는 근로자에 한해 시간등록을 허용하고 있어 본고에서 설정한 자원봉사자에는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포함됨.

66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표 3-1〉 활동처·연령계층별 자원봉사활동 시 하루 평균 개인경비 지출 현황

(단위: 원)

활동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보건의료(기관)	6,631	5,667	8,343	7,500	3,875	6,163	6,498
교육(기관)	4,278	5,077	5,318	5,900	15,500	9,175	5,996
종교단체 등 ¹⁾	5,748	8,079	10,102	9,411	6,477	8,075	8,039
사회복지(기관) 등 ²⁾	5,518	5,623	9,997	9,251	10,832	7,317	8,251
환경(단체)	7,740	3,640	9,077	7,455	6,173	5,500	6,931
예술·문화·스포츠(단체)	2,464	9,778	10,600	14,571	15,417	9,813	10,190
공명선거·정치 및 정당(단체)	-	-	-	-	-	-	-
합계	5,446	6,049	9,397	9,009	9,931	7,548	7,917

주: 1) 종교단체, 공익민간(단체), 관공서, 직능단체·전문가(단체)·노동조합, 재난 재해 현장 등을 합친 것임.

2) 사회복지(기관), 청소년(단체), 국제기구, 공원, 거리 등 지역사회 현장, 기타 등을 합친 것임.

〈표 3-2〉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시간당 임금과 산정 근거

(단위: 원)

산업 분류	시간당 임금	산출 근거	출처
기타 사업서비스	10,332	- 노인 돌봄서비스 등 4대 바우처 서비스 시간당 총비용 평균	이철선 등(2015)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수가 산정과 임금체계 심층 분석
수리서비스	16,874	- 청소방역지부사업(청소, 주거안 전서비스) 월평균 임금/근무시간	이철선 등(2014)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가능성 모색 및 방안 연구
사회복지사업	9,420	-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지도원 1호봉/월평균 소정 근무 174 시간	20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교육서비스	8,744	- 보육교사 1호봉 월지급액 / 174시간	2015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 및 보건	9,057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의료직 4급 1호봉 기준 / 174시간	20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농림어업서비스	7,500	- 영농도우미 1일 6만 원 / 8시간	2015년 농림사업(복지)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서비스	8,778	- 문화복지사 / 174시간	이철선 등(2014)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가능성 모색 및 방안 연구
사회단체	14,773	- 2016년 기준, 협동조합 중간 지원기관(민간단체) 인건비 1인당 265만 원 / 174시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년 임금 3% 감액 적용
공공행정 및 국방	7,372	- 일반직 9급 1호봉 / 174시간	2015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직접비인 노동비용은 시간당 인건비를 적용하였는데, 수준을 2015년 최저임금 5,580원과 자원봉사 영역별에 근접한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또는 공무원의 시간당 임금을 적용하였다. 최저임금 적용 이유는 봉사자가 자원봉사 영역에서 미숙련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의 시간당 임금 적용은 정부 사업을 시민들이 봉사로 보완하는 재정보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원봉사자 수(사회조사 추정치 대비 행자부·복지부 통합자료)와 인건비 수준(최저임금 대비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시간당 임금) 적용을 고려하여 4가지 분석 대안을 마련하였다.

〈표 3-3〉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 안

(단위: 명, 원)

구분	1안(통합 행정자료+최저임금)		2안(통합 행정자료+재정일자리 임금)	
	봉사자 수	투입비용	봉사자 수	투입비용
전체	4,278,266	663,349,997,129	4,278,266	1,135,916,111,613
기타사업서비스	1,674,163	229,381,841,806	1,674,163	413,551,679,614
수리서비스	135,612	18,020,839,904	135,612	52,611,877,224
사회복지사업	457,017	140,009,773,674	457,017	233,791,543,914
교육서비스	320,605	42,314,734,024	320,605	65,229,130,760
의료 및 보건	81,438	16,996,247,583	81,438	27,260,473,278
농림어업서비스	21,597	2,898,880,139	21,597	3,835,642,379
문화서비스	435,200	59,251,070,880	435,200	91,685,756,808
사회단체	279,961	37,520,378,394	279,961	95,664,090,127
공공행정 및 국방	872,673	116,956,230,725	872,673	152,285,917,509
구분	3안(사회조사 추정치+최저임금)		4안(사회조사 추정치+재정일자리 임금)	
	봉사자 수	투입비용	봉사자 수	투입비용
전체	7,169,565	1,111,649,187,350	7,169,565	1,903,580,655,517
기타사업서비스	2,805,581	384,400,601,704	2,805,581	693,034,432,140
수리서비스	227,260	30,199,520,798	227,260	88,167,559,832
사회복지사업	765,874	234,629,911,509	765,874	391,790,428,773
교육서비스	537,273	70,911,494,527	537,273	109,311,691,437
의료 및 보건	136,475	28,482,497,769	136,475	45,683,399,559
농림어업서비스	36,192	4,857,975,072	36,192	6,427,811,489
문화서비스	729,313	99,293,593,244	729,313	153,647,995,008
사회단체	469,162	62,877,060,875	469,162	160,314,929,538
공공행정 및 국방	1,462,435	195,996,531,851	1,462,435	255,202,407,742

주: 3안 및 4안의 자원봉사 영역별 자원봉사자 수와 투입비용 산출을 위한 자원봉사 시간은 통합 행정자료 비율을 적용해 산정.

나. 자원봉사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자원봉사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과정에서는 크게 2가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첫째는 자원봉사 내용과 관련된 산업구분에 기반하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선정하는 과정이었는데 본고에서는 2016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 산업연관표인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2014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측정한 투입비용과 봉사자 수가 2015년 기준이었지만 2015년 기준 산업연관표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3-4〉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한 산업분류 매칭

산업 세세분류 코드	명칭	산업 중분류 코드	명칭
154	기타사업서비스	74	사업지원서비스
164	수리서비스	82	수리 및 개인서비스
158	사회복지사업	78	사회복지서비스
156	교육서비스	76	교육서비스
157	의료 및 보건	77	의료 및 보건
11	농림어업서비스	5	농림어업서비스
161	문화서비스	79	문화서비스
163	사회단체	81	사회단체
155	공공행정 및 국방	75	공공행정 및 국방

두 번째는 경제적 부가효과를 산출하는 데 이용되는 부분별 승수 선정과 관련된 산업분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2014년도 82개 산업 중분류하의 기초가격평가표상의 각종 승수, 즉 생산유발계수⁷⁾와 부가가치 유발계수⁸⁾를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2005년

7) 생산유발계수란 산업연관분석에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적 생산액 수준으로 산업연관분석에서 생산유발관계는 다음과 같이 최종수요(y^d)와 총산출액(x) 사이의 관계

기준 년의 산업연관표(연장표 포함)에서는 생산자가격평가표를 이용하여 산업구조를 분석하였으나, 새로운 2010년도 기준 년의 산업연관표 자료에서는 기초가격평가표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우선 행자부와 복지부의 통합자료로 생성된 자원봉사자 약 428만 명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한 임금을 투입한 시나리오 1안의 경우, 전 산업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액은 1조 1,00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8,633억 원으로 총파급효과는 1조 9,64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두 번째로 행자부와 복지부의 통합자료 자원봉사자 약 428만 명에 2015년 기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종사자 정규직 임금을 적용한 시나리오 1안에서는 생산유발액이 1조 9,085억 원이었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4,921억 원으로 총파급효과는 3조 4,00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시나리오 2안은 1안 대비 1.7배 정도 많은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번째, 통계청 사회조사의 자원봉사 참가율을 기반으로 추정한 자원봉사자 수 717만 명에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시나리오 3안에서는 전 산업 생산유발액이 1조 8,447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4,477억 원으로 총파급효과는 3조 2,924억 원이었다.

네 번째, 통계청 사회조사를 기반으로 추정한 자원봉사자 수 717만 명에 2015년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을 적용한 시나리오 4안에서는 전 산업 생산유발액이 3조 1,98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2조 5,005억 원으로 총파급효과는 5조 6,989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x = (I - A^d)^{-1}(y^d - z))$ 로부터 얻어짐, 여기서 x = 총산출량 벡터, A^d = 투입계수 행렬(국산), y^d = 최종수요 벡터(국산), z = 잔폐물 발생액, $(I - A^d)^{-1}$ 은 레온티에프 역행렬(Lentief inverse)을 의미.

- 8)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국내 생산물 중 특정 품목에 대하여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경제 전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유발되는지를 나타내며, $v = A^v (I - A^d)^{-1} (y^d - z)$ 의 산식을 통해 추출이 가능함, 이때 v = 부가가치 벡터를, A^v = 부가가치의 대각행렬, $A^v (I - A^d)^{-1}$ = 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을 의미.

70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표 3-5〉 시나리오별 자원봉사활동의 전 산업 생산유발액

(단위: 십억 원)

산업코드	내용	시나리오			
		1안	2안	3안	4안
-	전체	1,100.8	1,908.5	1,844.7	3,198.3
001	작물	4.9	8.6	8.2	14.4
002	축산물	3.9	6.8	6.5	11.4
003	임산물	0.4	0.8	0.7	1.3
004	수산물	1.9	3.3	3.2	5.6
005	농림어업 서비스	3.2	4.3	5.4	7.3
0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0.0	0.1	0.1	0.1
007	금속 및 비금속광물	0.2	0.3	0.3	0.5
008	식료품	21.5	37.6	36.1	63.0
009	음료품	2.0	3.7	3.3	6.1
011	섬유 및 의복	10.9	19.2	18.2	32.1
012	가죽제품	2.1	3.7	3.5	6.2
013	목재 및 목제품	1.3	2.3	2.2	3.8
014	펄프 및 종이제품	6.7	12.0	11.2	20.1
015	인쇄 및 복제	4.3	7.6	7.2	12.7
016	석탄 및 석유제품	19.2	33.2	32.2	55.7
017	기초화학물질	5.1	9.3	8.6	15.5
0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3.0	5.5	5.1	9.3
019	화학섬유	0.4	0.7	0.7	1.2
020	의약품	3.3	5.4	5.4	9.0
021	비료 및 농약	1.3	2.2	2.2	3.7
022	기타 화학제품	12.6	23.5	21.1	39.4
023	플라스틱제품	6.3	11.6	10.6	19.4
024	고무제품	1.6	3.2	2.7	5.4
025	유리 및 유리제품	0.8	1.4	1.3	2.4
02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0	1.6	1.7	2.7
027	철강1차제품	5.0	8.9	8.3	14.9
028	철강가공제품	1.6	3.0	2.7	5.0
029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2.3	4.2	3.9	7.1
030	금속 주물	0.5	0.9	0.8	1.5
031	금속제품	7.7	13.7	13.0	23.0
032	일반목적용기계	4.3	7.9	7.1	13.2
033	특수목적용기계	1.7	2.9	2.8	4.9
034	전기장비	7.7	13.9	13.0	23.3
035	반도체	0.5	0.9	0.8	1.5
036	전자표시장치	1.6	2.9	2.6	4.8
037	기타 전자부품	1.8	3.3	3.0	5.5
0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0.8	1.4	1.3	2.3
039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3.9	6.9	6.5	11.6

산업코드	내용	시나리오			
		1안	2안	3안	4안
040	가정용 전기기기	2.9	5.3	4.9	9.0
041	정밀기기	5.1	8.6	8.5	14.3
042	자동차	7.8	16.7	13.0	28.0
043	선박	0.2	0.3	0.4	0.5
044	기타 운송장비	1.0	1.6	1.7	2.7
04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9.6	16.9	16.1	28.3
046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18.6	32.0	31.2	53.5
047	가스, 증기 및 온수	14.5	25.1	24.3	42.1
048	수도	1.7	2.7	2.8	4.5
049	폐수처리	2.3	3.8	3.9	6.3
050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3.5	6.1	5.9	10.2
051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5.0	7.4	8.3	12.3
053	도소매서비스	29.7	52.6	49.7	88.2
054	육상운송서비스	12.1	21.2	20.3	35.6
055	수상운송서비스	0.5	0.7	0.8	1.2
056	항공운송서비스	2.6	4.7	4.4	7.8
057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5.1	9.0	8.5	15.1
05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0.5	55.9	51.1	93.7
059	통신서비스	17.0	29.6	28.6	49.6
060	방송서비스	2.3	4.5	3.8	7.5
061	정보서비스	2.4	4.0	4.0	6.7
062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4.6	7.7	7.6	12.9
063	출판서비스	4.0	6.9	6.7	11.5
064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1.9	3.1	3.3	5.2
065	금융서비스	18.1	32.0	30.3	53.7
066	보험서비스	7.2	12.8	12.1	21.5
067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2.1	3.6	3.5	6.1
069	부동산서비스	17.0	31.1	28.5	52.2
070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3.3	5.1	5.6	8.6
071	연구개발	0.0	0.0	0.0	0.0
07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8.5	14.9	14.3	24.9
0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3.6	6.1	6.0	10.3
074	사업지원서비스	245.9	441.8	412.1	740.3
075	공공행정 및 국방	120.2	158.3	201.5	265.2
076	교육서비스	42.7	66.0	71.6	110.6
077	의료 및 보건	21.1	34.3	35.4	57.4
078	사회복지서비스	140.0	233.8	234.6	391.8
079	문화서비스	62.9	97.5	105.4	163.5
0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2.1	4.1	3.5	6.8
081	사회단체	39.1	98.3	65.6	164.8
082	수리 및 개인 서비스	24.7	63.7	41.5	106.7

72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표 3-6〉 시나리오별 자원봉사활동의 전 산업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십억 원)

산업코드	내용	시나리오			
		1안	2안	3안	4안
-	전체	863.3	1,492.1	1,447.7	2,500.5
001	작물	11.3	19.8	18.9	33.2
002	축산물	6.1	10.8	10.3	18.0
003	임산물	1.2	2.0	2.0	3.4
004	수산물	2.4	4.2	4.0	7.0
005	농림어업 서비스	2.0	2.9	3.3	4.8
0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0.1	0.2	0.2	0.3
007	금속 및 비금속광물	0.5	0.8	0.8	1.3
008	식료품	8.5	15.0	14.3	25.2
009	음료품	1.5	2.8	2.6	4.7
011	섬유 및 의복	6.9	12.2	11.5	20.4
012	가죽제품	1.2	2.1	1.9	3.5
013	목재 및 목제품	1.0	1.7	1.6	2.8
014	펄프 및 종이제품	5.7	10.1	9.5	16.9
015	인쇄 및 복제	4.0	7.1	6.8	11.9
016	석탄 및 석유제품	3.7	6.5	6.3	10.9
017	기초화학물질	3.1	5.5	5.1	9.2
0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7	3.0	2.8	5.1
019	화학섬유	0.2	0.4	0.4	0.7
020	의약품	2.9	4.8	4.8	8.0
021	비료 및 농약	0.9	1.6	1.5	2.6
022	기타 화학제품	7.8	14.4	13.1	24.2
023	플라스틱제품	5.6	10.2	9.4	17.1
024	고무제품	1.4	2.7	2.4	4.6
025	유리 및 유리제품	1.1	1.9	1.8	3.3
02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0.9	1.4	1.4	2.4
027	철강1차제품	3.3	5.9	5.5	9.8
028	철강가공제품	1.2	2.2	2.0	3.7
029	비철금속과 및 1차제품	1.3	2.4	2.2	4.0
030	금속 주물	0.4	0.7	0.7	1.2
031	금속제품	7.9	14.1	13.3	23.6
032	일반목적용기계	3.6	6.6	6.1	11.0
033	특수목적용기계	1.8	3.2	3.1	5.4
034	전기장비	6.6	11.8	11.1	19.8
035	반도체	0.7	1.2	1.1	2.0
036	전자표시장치	1.6	2.9	2.7	4.9
037	기타 전자부품	1.4	2.5	2.3	4.2
0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0.6	1.0	1.0	1.7
039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2.1	3.8	3.5	6.3

산업코드	내용	시나리오			
		1안	2안	3안	4안
040	가정용 전기기기	1.4	2.5	2.3	4.2
041	정밀기기	3.5	6.0	5.9	10.1
042	자동차	5.8	11.9	9.7	19.9
043	선박	0.1	0.2	0.2	0.3
044	기타 운송장비	0.6	1.0	1.1	1.7
04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2.5	22.1	21.0	37.1
046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18.0	31.2	30.2	52.3
047	가스, 증기 및 온수	6.2	10.7	10.3	17.9
048	수도	2.3	3.9	3.9	6.5
049	폐수처리	2.7	4.4	4.5	7.4
050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4.2	7.2	7.0	12.1
051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3.5	5.3	5.9	8.9
053	도소매서비스	47.1	83.6	79.0	140.1
054	육상운송서비스	15.3	26.9	25.6	45.1
055	수상운송서비스	0.2	0.2	0.3	0.4
056	항공운송서비스	1.8	3.3	3.1	5.5
057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8.3	14.7	13.9	24.7
05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6.5	48.3	44.3	80.9
059	통신서비스	16.7	29.0	27.9	48.7
060	방송서비스	3.2	6.0	5.4	10.1
061	정보서비스	2.8	4.8	4.7	8.0
062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7.3	12.5	12.3	21.0
063	출판서비스	3.3	5.6	5.5	9.4
064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1.9	3.1	3.2	5.2
065	금융서비스	31.3	55.5	52.5	93.0
066	보험서비스	7.4	13.1	12.4	22.0
067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3.1	5.5	5.3	9.3
069	부동산서비스	30.2	54.9	50.7	92.0
070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4.7	7.3	7.8	12.3
071	연구개발	0.0	0.0	0.0	0.0
07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2.6	22.1	21.2	37.1
0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6.7	11.7	11.3	19.5
074	사업지원서비스	183.3	328.1	307.2	549.8
075	공공행정 및 국방	93.3	124.9	156.4	209.4
076	교육서비스	32.1	49.7	53.9	83.3
077	의료 및 보건	14.2	23.4	23.8	39.2
078	사회복지서비스	60.7	101.4	101.7	169.9
079	문화서비스	36.7	57.2	61.5	95.8
0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2.6	4.9	4.3	8.2
081	사회단체	18.6	46.0	31.2	77.1
082	수리 및 개인 서비스	17.0	39.5	28.5	66.1

74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표 3-7〉 시나리오별 자원봉사활동의 총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십억 원)

산업코드	내용	시나리오			
		1안	2안	3안	4안
-	전체	1,964.1	3,400.7	3,292.4	5,698.9
001	작물	16.2	28.4	27.1	47.6
002	축산물	10.0	17.5	16.8	29.4
003	임산물	1.6	2.8	2.7	4.7
004	수산물	4.3	7.5	7.2	12.6
005	농림어업 서비스	5.2	7.2	8.7	12.1
0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0.1	0.3	0.2	0.4
007	금속 및 비금속광물	0.7	1.1	1.1	1.9
008	식료품	30.1	52.6	50.4	88.2
009	음료품	3.5	6.5	5.9	10.8
011	섬유 및 의복	17.7	31.3	29.7	52.5
012	가죽제품	3.2	5.8	5.4	9.6
013	목재 및 목제품	2.3	4.0	3.9	6.6
014	펄프 및 종이제품	12.3	22.1	20.7	37.0
015	인쇄 및 복제	8.4	14.6	14.0	24.5
016	석탄 및 석유제품	22.9	39.7	38.4	66.6
017	기초화학물질	8.2	14.8	13.7	24.8
0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4.7	8.6	7.9	14.4
019	화학섬유	0.7	1.2	1.1	1.9
020	의약품	6.1	10.1	10.3	17.0
021	비료 및 농약	2.2	3.8	3.7	6.3
022	기타 화학제품	20.4	38.0	34.2	63.6
023	플라스틱제품	12.0	21.8	20.1	36.6
024	고무제품	3.0	6.0	5.1	10.0
025	유리 및 유리제품	1.8	3.3	3.1	5.6
02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9	3.0	3.1	5.0
027	철강1차제품	8.3	14.7	13.8	24.7
028	철강가공제품	2.8	5.2	4.8	8.7
029	비철금속과 및 1차제품	3.7	6.6	6.2	11.1
030	금속 주물	0.9	1.6	1.5	2.6
031	금속제품	15.7	27.9	26.3	46.7
032	일반목적용기계	7.9	14.5	13.2	24.2
033	특수목적용기계	3.5	6.1	5.9	10.3
034	전기장비	14.3	25.7	24.0	43.1
035	반도체	1.1	2.1	1.9	3.5
036	전자표시장치	3.2	5.8	5.3	9.6
037	기타 전자부품	3.1	5.8	5.3	9.8
0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	2.4	2.3	4.0
039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6.0	10.7	10.0	18.0

산업코드	내용	시나리오			
		1안	2안	3안	4안
040	가정용 전기기기	4.3	7.9	7.1	13.2
041	정밀기기	8.6	14.6	14.5	24.4
042	자동차	13.5	28.6	22.6	47.9
043	선박	0.3	0.5	0.6	0.8
044	기타 운송장비	1.7	2.6	2.8	4.4
04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22.1	39.0	37.1	65.4
046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36.7	63.2	61.5	105.8
047	가스, 증기 및 온수	20.7	35.8	34.6	60.0
048	수도	4.0	6.5	6.7	10.9
049	폐수처리	5.0	8.2	8.4	13.7
050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7.7	13.3	12.9	22.2
051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8.5	12.7	14.2	21.2
053	도소매서비스	76.8	136.3	128.7	228.3
054	육상운송서비스	27.4	48.1	45.9	80.6
055	수상운송서비스	0.6	1.0	1.0	1.6
056	항공운송서비스	4.4	7.9	7.4	13.3
057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13.3	23.7	22.3	39.8
05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57.0	104.1	95.4	174.5
059	통신서비스	33.7	58.7	56.5	98.3
060	방송서비스	5.5	10.5	9.2	17.6
061	정보서비스	5.2	8.8	8.8	14.7
062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11.9	20.2	19.9	33.9
063	출판서비스	7.3	12.5	12.2	21.0
064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3.9	6.2	6.5	10.4
065	금융서비스	49.4	87.5	82.7	146.7
066	보험서비스	14.6	26.0	24.4	43.5
067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5.2	9.2	8.7	15.3
069	부동산서비스	47.2	86.1	79.2	144.2
070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8.0	12.4	13.4	20.8
071	연구개발	0.0	0.0	0.0	0.0
07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21.2	37.0	35.5	62.0
073	과학기술 관련 전문서비스	10.3	17.8	17.3	29.8
074	사업지원서비스	429.2	769.9	719.3	1,290.2
075	공공행정 및 국방	213.6	283.2	357.9	474.6
076	교육서비스	74.9	115.7	125.5	193.9
077	의료 및 보건	35.3	57.7	59.2	96.6
078	사회복지서비스	200.7	335.2	336.4	561.7
079	문화서비스	99.6	154.7	166.8	259.3
0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4.7	9.0	7.8	15.0
081	사회단체	57.8	144.4	96.8	241.9
082	수리 및 개인 서비스	41.7	103.1	69.9	172.8

본고는 분석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그 기준을 2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는 추정의 보수적 접근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에 있어 투입되는 인력의 범위가 현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적용한 인력 수는 행자부와 복지부 행정 통합자료와 통계청 사회조사의 자원봉사 참가율을 적용한 추정치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산정에 적용되는 참가자 수는 최소와 최대 2가지 범위를 고려하였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보완 효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최저임금과 현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참여 종사자의 임금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재정보완 효과를 추정하는 데에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참여 종사자의 임금 적용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민간의 사회적 자본 투여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가치는 시나리오 4안 중 최저임금이 적용된 시나리오 1안과 3안의 결과가 적용되며, 정부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재정보완 파급효과는 시나리오 2안과 4안의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부의 재정보완 파급효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간의 사회적 자본으로 발생하는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1조 9,641억 원에서 최대 3조 2,924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생산유발효과는 최소 1조 1,008억 원에서 최대 1조 8,447억 원이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최소 863.3억 원에서 최대 1조 4,477억 원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재정보완 파급효과는 최소 3조 4,007억 원에서 최대 5조 6,989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생산유발효과는 최소 1조 8,447억 원에서 최대 3조 1,98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최소 1조 4,921억 원에서 최대 2조 55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표 3-8〉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재정보완 파급효과 결과

(단위: 십억 원)

구분		총파급효과	생산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경제적 가치	시나리오 1안 : 통합행정자료 + 최저임금	1,964.1	1,100.8	863.3
	시나리오 3안 : 사회조사 추정치 + 최저임금	3,292.4	1,844.7	1,492.1
사회서비스 재정 보완 파급효과	시나리오 2안 : 통합행정자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임금	3,400.7	1,908.5	1,447.7
	시나리오 4안 : 사회조사 추정치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임금	5,698.9	3,198.3	2,005.5

이와 더불어 자원봉사활동이 재정지원 사회서비스를 보완하는 직접 인력을 자원봉사 시간을 기반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산정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약 54,021~90,528명으로 파악되었다. 즉 정부가 투입해야 할 사회서비스 제공을 시민 약 54,021~90,528명이 보완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로 인해 최소 1조 1,359억 원에서 최대 1조 9,0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표 3-9〉 자원봉사인력의 정규화 고려 시 인력 산정과 직접재정 절감액

(단위: 시간, 명)

산업 구분	통합행정자료			사회조사 추정치		
	자원봉사 시간	보완 인력	잠정투입 예산	자원봉사 시간	보완 인력	잠정투입 예산
전체	112,795,231	54,021	1,135.9	189,023,483	90,528	1,903.5
기타사업서비스	38,756,279	18,561	413.5	64,948,197	31,105	693.0
수리서비스	3,062,780	1,467	52.6	5,132,640	2,458	88.1
사회복지사업	24,422,336	11,697	233.7	40,927,218	19,601	391.7
교육서비스	7,242,224	3,468	65.2	12,136,598	5,813	109.3
의료 및 보건	2,952,035	1,414	27.2	4,947,053	2,369	45.6
농림어업서비스	487,897	234	3,835.6	817,623	392	6,427.8
문화서비스	9,831,672	4,709	91.6	16,476,024	7,891	153.6
사회단체	6,324,781	3,029	95.6	10,599,137	5,076	160.3
공공행정 및 국방	19,715,227	9,442	152.2	33,038,993	15,823	255.2

주: 사회서비스 보완인력은 월 정규직 근로시간 174시간에 12개월을 근무한다고 가정 시 산출 인원.

제3절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

양현미 등(2007)은 사회적 가치란 개인, 그룹, 공동체, 사회 간의 관계를 친밀하고 공고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우정, 신뢰, 사랑, 정체성, 소속감 등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공공복지를 향한 가치이념이며 실천노력이다(대구광역시종합자원봉사센터, 2004). 자원봉사활동은 시설이나 지역사회의 심리적 장벽, 편견, 무관심을 없애며, 주민의 사회참여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인의식,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김영호, 1989).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 즉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과거 수십 년간 사회적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의 프로그램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으며 그 결과 수백 개의 척도가 생겨났다.⁹⁾ 사회 부문의 고전적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으로는 비용 효과 분석(Cost-Effective Analysis)과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방법이 있다. 비용 효과 분석은 프로그램의 혜택이나 개입이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상황일 때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비금전적인 혜택 또는 결과와 비용의 비율로 계산한다(조영복·류정란, 2013). 비용 편익 분석은 개입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을 화폐화하여 어떤 것이 더 큰지 비교하는 것인데, 분석 목적은 의사결정자에게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개입 중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돕고, 프로그램들을 비교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준다(조영복·류정란, 2013). KAIST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

9) <http://socialinnovationgroup.kr/archives/3022>에서 2016. 12. 13. 인출.

회적 편익-사회적 비용으로 산출하고 있다(KAIST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2010). 안영규(2010)는 사회적 편익을 취약계층의 고용으로 인한 공공 부문 지출 감소, 세수 및 실질소득 증가분 등으로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비용을 자원봉사자들의 기회비용,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등으로 측정하였다.

1.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 조사 개요

본고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비용 대비 효익 이론(Cost-Benefit Theory) 관점에서 그 수준을 3가지로 나누어 투입비용 대비 산출가치의 차이인 편익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수준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한 총투입비용 중 실제 투입 가능한 비용, 즉 교통비 등 간접비와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이 저숙련 노동자라는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를 가정해서 사회적 산출가치 간의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총투입비용 중 인건비를 생계를 위한 임금 획득 노력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사회적 산출가치 간의 차이를 산정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보조지표로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후 경험하게 된 사회적 이해도와 자원봉사활동 전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해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었다.¹⁰⁾

그리고 사회적 편익 추정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행정자치부의 '1365 자원봉사활동 포털'(이하 1365 포털)(www.1365.go.kr) 회원 중 최근 1년 안에 1회 이상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10>은 1365 포털에 가입된 회원들의 연령별 분포

10) 사회적 가치 측정변수로서 사회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의식 고취 부분을 고려하였으나 편익 부분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제외함.

를 살펴본 것으로서 10대 이하가 전체의 29.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26.0%의 비율을 보인 20대인데, 이것을 보면 20대 이하가 전체 회원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0〉 1365 자원봉사활동 포털 회원 수

(단위: 명, %)

연령	회원 수	비중
14세 미만	514,061	(4.7)
14세 이상	2,734,284	(25.0)
20대	2,842,265	(26.0)
30대	906,643	(8.3)
40대	1,612,947	(14.7)
50대	1,255,770	(11.5)
60대	668,018	(6.1)
70대 이상	402,251	(3.7)
합 계	10,936,239	(100.0)

자료: 행정자치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6). 2010·2015년 자원봉사 운영실적 통계 내부자료.

조사 방식은 예산과 시간적 제약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찾아내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다만 온라인 설문조사는 컴퓨터 접근성과 활용력이 낮은 연령층의 참여를 기대하기가 다소 곤란한 단점을 가진다. 설문지는 1365 포털 팝업창을 이용하였으며 회원 중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로그인 후 설문지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10세 이상인데, 충분치 못한 조사 예산으로 목표 응답자 수를 1,200명 정도로 제한하였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태와 사회적 이해도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각 연령대별로 최대 200명씩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2016년 10월 17일부터 1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모

든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모바일 커피 쿠폰 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조사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타 연령대는 무리 없이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60대 이상은 당초 계획했던 1주일 동안 97명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는 우리나라 10세 이상 인구 모집단을 반영하지 않은 조사 설계이므로 분석 시 비율만 살펴보았다.

2. 응답자의 일반사항 및 자원봉사활동 현황

가. 응답자 일반사항

본 조사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45.1%, 여자는 54.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60대 이상 연령계층을 제외하면 유사한 비율을 차지한다(표 3-11 참조). 왜냐하면 연령대별로 200명씩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60대 이상의 응답률은 목표치보다 낮았다. 그 이유는 조사 방식이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설문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표 3-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 학생이 32.2%로 가장 많았고, 사무/기술직 23.9%, 가정주부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3,000만 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36.1%이며 3,000만~5,000만 원 미만이 31.5%를 차지하였다. 반면 가구 소득이 9,0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도 약 5.8%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 참조).

82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표 3-11〉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분포

(단위: 명, %)

구분		분포
성별	남	499 (45.1)
	여	607 (54.9)
	소계	1,106 (100.0)
연령	10대	206 (18.6)
	20대	201 (18.2)
	30대	198 (17.9)
	40대	202 (18.3)
	50대	202 (18.3)
	60대 이상	97 (8.8)
	소계	1,106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8 (0.7)
	자영업	36 (3.3)
	판매/서비스직	55 (5.0)
	기능/숙련공	22 (2.0)
	일반직업직	15 (1.4)
	사무/기술직	264 (23.9)
	경영/관리직(사무관/부장 이상)	32 (2.9)
	전문/자유직(변호사/의사/건축사/교수/예술가)	47 (4.2)
	가정주부	147 (13.3)
	학생	356 (32.2)
	무직	51 (4.6)
	기타	73 (6.6)
	소계	1,106 (100.0)
가구소득	3,000만 원 미만	399 (36.1)
	3,000만~5,000만 원 미만	348 (31.5)
	5,000만~7,000만 원 미만	178 (16.1)
	7,000만~9,000만 원 미만	117 (10.6)
	9,000만 원 이상	64 (5.8)
	소계	1,106 (100.0)

나. 자원봉사활동 현황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된 주된 계기는 연령계층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chi^2=291.677$, $p < 0.000$). 10대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주된 계기는 아무래도 입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비율이 34.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친구 등 주변 지인의 권유로 사회를 경험하기 위해 한다는 비율도 타 연령계층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대도 10대와 마찬가지로 입시나 취업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32.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30대는 회사 등 소속된 기관의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30.3%로 가장 많았다. 40대 이후부터는 자원봉사활동을 자발적인 시민의 의무로 생각해서 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도 높아졌다. <표 3-12>를 보면, 기타 비율이 전체에서 1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자원봉사활동 계기는 주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혹은 타인을 돕는 생활 실천 등 목적 없는 이타심으로 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표 3-12> 응답자의 자원봉사활동 계기

(단위: %)

구분	연령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친구 등 주변 지인의 권유로	33.5	16.4	20.7	24.8	18.3	21.6	22.7
회사 등 소속 기관의 업무 중 하나	8.3	19.9	30.3	18.8	17.3	3.1	17.5
입시, 취업 등 필요한 요건 갖추려고	34.5	32.3	8.1	5.4	3.0	0.0	15.3
타인의 영향 없이 시민의 의무로 생각	12.6	17.9	26.3	33.7	38.6	54.6	28.3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1.0	0.0	1.5	3.0	6.9	8.2	3.0
기타	10.2	13.4	13.1	14.4	15.8	12.4	13.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13>은 연령대별로 최근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기간을 조사한 결과로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원봉사활동 일수도 증가하고, 연령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55.785$, $P<0.000$). 자원봉사활동 일수는 최소 1일만 했던 응답자가 있는가 하면 매일, 즉 365

84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일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응답자도 있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계층은 평균 100일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3〉 응답자의 최근 1년간 자원봉사활동 일수

(단위: 일)

연령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0대	14.84	19.352	1	165
20대	17.03	25.957	1	200
30대	23.13	39.971	1	300
40대	30.12	34.549	1	200
50대	49.09	68.342	1	340
60대 이상	100.47	91.025	1	365
전체	33.28	53.259	1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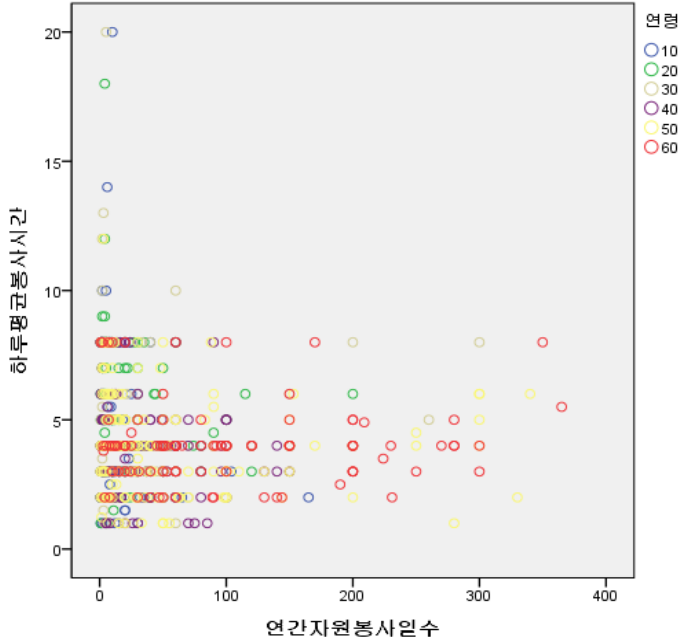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4 참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하루 평균 가장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연령대는 20대(평균 4.75시간)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30대(평균 4.16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대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평균 3.64시간 정도 하였다.

〈표 3-14〉 응답자의 자원봉사활동 시 하루 평균 활동시간 분포

(단위: 시간)

연령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0대	3.64	2.225	1	20
20대	4.75	2.137	1	18
30대	4.16	2.293	1	20
40대	4.07	1.749	1	8
50대	4.03	1.750	1	12
60대 이상	4.06	1.563	2	8
전체	4.12	2.031	1	20

[그림 3-1] 자원봉사활동 일수별 하루 평균 봉사시간 분포



[그림 3-1]에 의하면, 연령대가 젊을수록 자원봉사 일수는 적지만 봉사활동일(日)에 참여한 시간은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봉사활동 횟수는 많아져도 봉사활동일에 투입하는 시간은 짧다는 것이다. 결국, 나이가 들면 자원봉사가 적은 시간이지만 꾸준히 참여하는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봉사하는 활동처로는 사회복지기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15 참조). 그다음으로 봉사활동이 많은 곳은 ‘공원, 거리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이 12.8%, ‘교육기관’ 10.9%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에서의 봉사활동 비율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높았다.

86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표 3-15〉 연령계층별 자원봉사 활동처 분포

(단위: %)

활동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보건의료(기관)	6.3	4.5	3.5	3.0	2.0	8.2	4.2
교육(기관)	18.0	14.9	11.1	8.9	5.0	4.1	10.9
종교단체	1.5	0.0	1.5	1.0	1.5	2.1	1.2
사회복지(기관)	27.2	35.8	34.8	37.6	32.7	30.9	33.4
환경(단체)	9.7	5.0	6.6	5.4	5.4	6.2	6.4
공익민간(단체)	5.3	3.5	8.6	6.9	6.4	3.1	5.9
예술·문화·스포츠(단체)	5.3	9.0	2.5	3.5	5.9	8.2	5.5
관공서(구청, 동사무소 등)	4.9	4.0	11.6	4.5	11.4	13.4	7.8
직능단체, 전문가(단체), 노동조합	0.5	1.0	0.0	1.0	2.0	2.1	1.0
공명선거, 정치 및 정당(단체)	-	-	-	-	-	-	-
재난 재해 현장	0.0	1.0	0.5	0.5	2.0	0.0	0.7
청소년(단체)	8.7	2.5	1.0	3.0	2.0	1.0	3.3
국제기구	0.0	0.5	0.5	0.5	0.0	0.0	0.3
공원, 거리 등 다양한 지역사회현장	8.3	13.4	12.6	14.9	17.3	8.2	12.8
기타	4.4	5.0	5.1	9.4	6.4	12.4	6.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15〉와 같은 활동처에서 주로 하는 봉사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청소와 같은 단순 노동력 제공이 많은 반면에 연령이 높을수록 봉사자의 전문 재능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3-16 참조). 기타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의 내용에는 ‘학습 봉사/보조’, ‘교육’, ‘청소년 멘토링’, ‘도서관 사서’, ‘장애인 혹은 노인 말벗 등’, ‘헌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3-16〉 연령계층별 자원봉사활동 내용

(단위: %)

활동 내용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청소 등 단순한 노동력 제공	77.2	66.2	73.2	65.3	53.0	42.3	64.8
자격증이 필요한 프로보노(재능기부)	7.8	13.9	11.6	13.9	19.8	28.9	14.7
온라인 서비스	1.5	1.5	2.5	1.5	3.5	3.1	2.2
기타	13.6	18.4	12.6	19.3	23.8	25.8	18.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chi^2=59.789$, $p < 0.000$

응답자의 39.0%는 행자부가 운영하는 자원봉사 ‘1365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처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 활동처를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27.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7>에서 기타 방법으로는 ‘학교’ 혹은 ‘동호회’ 등을 통한 인지 경로가 많았다.

<표 3-17> 연령계층별 자원봉사활동처 인지 경로

(단위: %)

활동 내용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지인을 통해	24.8	22.4	24.7	30.7	34.2	26.8	27.3
1365 사이트를 통해	52.4	46.3	44.9	29.2	25.7	30.9	39.0
회사를 통해	1.9	6.5	11.6	9.9	7.9	2.1	7.1
중교기관을 통해	1.0	0.5	1.5	2.0	3.5	3.1	1.8
환경(단체)	6.3	4.5	4.0	9.4	7.9	6.2	6.4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4.4	4.0	5.1	7.9	9.4	13.4	6.8
기타	9.2	15.9	8.1	10.9	11.4	17.5	11.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제노동기구(ILO)는 자원봉사활동을 ‘비대가성의 강제적이지 않은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장영식 등, 2015).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과 비대가성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개인 경비, 예컨대 식비, 교통비 등은 자원봉사자 스스로의 몫이 된다. 사실 자원봉사활동의 이념이 자선(philanthropy)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비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 봉사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껴 그만큼 봉사활동에 참가하려는 의지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지출하는 경비를 확인해 본 결과, <표 3-1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18>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 시 개인경비가 전혀 들지 않는 봉사자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1회 자원봉사 때 약 7,917원의 개인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8〉 연령계층별 자원봉사활동 시 지출한 개인경비

(단위: 원)

연령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0대	5,446	5,410	0	30,000
20대	6,049	6,322	0	50,000
30대	9,397	15,478	0	150,000
40대	9,009	9,597	0	80,000
50대	9,931	18,225	0	200,000
60대 이상	7,548	5,648	0	30,000
전체	7,917	11,766	0	200,000

3.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

우선, 본 연구에서는 앞서 개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입비용 대비 산출되는 편익, 즉 비용 대비 효익 이론(Cost-Benefit Theory) 관점에서 결과물인 사회적 산출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회적 산출 가치를 책과 학교 등 간접경험을 통해 배우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접 자원봉사를 통해 얻게 되는 1일 사회교육 비용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때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비용의 비교 기준을 4년제 대학교 1일 평균 교육비용 49,000원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은 자원봉사 경험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킨다는 주된 변수라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지식수준, 자신이 속한 준거 집단의 성향, 개인의 소득 수준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갈등 완화의 전제 변수 중 하나인 사회적 지식에 대한 교육비용으로 측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평가의 준거점으로 사회적 지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대학 1일 교육비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1일 교육비용은 체험을 위한 지불가격이 아니라 행동경제학 이론 중 하나인

Prospect Theory에서 제시하는 바처럼 자신들이 행한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평가액이 손실인지 아니면 이익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선의 역할이었다. 그 결과, 연령계층별 사회적 산출 가치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F=1.867, p=0.097 > 0.05$). 그러나 <표 3-19>와 같이 응답자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서는 사회적 산출 가치에 차이가 있었다($F=2.624, p=0.011 < 0.05$).

<표 3-19> 자원봉사 일수별 사회에 대한 교육비용으로 환산한 사회적 산출 가치

(단위: 원)

최근 1년간 자원봉사활동 일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9일	51,546	62,235	0	1,000,000
10~19일	65,711	103,008	1,000	1,000,000
20~29일	62,732	103,493	3,000	1,000,000
30~39일	85,796	153,736	10,000	1,000,000
40~49일	125,195	461,864	0	3,000,000
50~59일	63,558	124,511	5,020	1,000,000
60~99일	66,466	96,940	0	700,000
100일 이상	46,093	27,813	0	100,000
전체	61,575	125,413	0	3,000,000

주: 무응답 제외.

설문 응답자들이 경험한 사회적 산출 가치는 봉사활동 1회 참여 시 약 61,575원 정도의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자원봉사 참여 기간이 40~49일가량 되는 응답자들의 1일 사회적 산출 가치가 가장 높았고, 그 산출 가치는 약 125,195원이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참여 횟수가 많다고 해서 사회적 산출 가치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 사회적 산출 가치도 연령이 높아지면서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0 참조).

〈표 3-20〉 연령계층별 사회에 대한 교육비용으로 환산한 사회적 산출 가치

(단위: 원)

연령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0대	62,607	103,805	0	1,000,000
20대	58,319	105,031	0	1,000,000
30대	82,892	239,015	0	3,000,000
40대	52,089	28,236	0	200,000
50대	61,906	83,128	0	1,000,000
60대 이상	42,139	30,260	0	200,000
전체	61,575	125,413	0	3,000,000

주: 무응답 제외. F=1.867, p=0.097 > 0.05

두 번째, 사회적 투입비용 측면에서 우선, 자원봉사 1회당 투입되는 교통비 등 실비용과 최저임금에 기반한 인건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자원봉사 1회당 인건비는 201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인 6,030원에 평균 자원봉사 시간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총투입비용은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실비용에 자원봉사 1회당 인건비를 더해 산출하였다. 그 결과 산출된 실비용 차원에서의 총투입비용은 전체 평균 32,761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봉사자 1인이 자원봉사 1회당 비용을 투입하여 산정된 사회적 편익은 28,814원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8,410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60대 이상은 10,109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자원봉사활동 실비용 기준 사회적 편익 추정

(단위: 원)

연령	투입			산출	편익
	1회당 실비용	인건비	총비용	사회적 산출 가치	사회적 편익 (순가치)
10대	5,446	21,949	27,395	62,607	35,212
20대	6,049	28,643	34,692	58,319	23,628
30대	9,397	25,085	34,482	82,892	48,410
40대	9,009	24,542	33,551	52,089	18,538
50대	9,931	24,301	34,232	61,906	27,674
60대 이상	7,548	24,482	32,030	42,139	10,109
전체	7,917	24,844	32,761	61,575	28,814

세 번째 본고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무보수성, 비대가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사회적 편익을 개인의 기회비용 관점에서 산출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개인별 투입비용 중 인건비 부문을 응답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투입된 시간 대신 생업 종사 시 얻을 수 있는 보수, 즉 생업 시 획득되는 시간당 인건비를 적용하였다. 즉 주관적 판단에 따른 기회비용을 개인별 생업 인건비로 대체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2016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보수를 의미한다. 그 결과 기회비용으로서 시간당 생업 평균 인건비는 12,796원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기회비용 분석 결과 연령과 기회비용 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모든 연령층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에 대한 기회비용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표 3-22 참조). 그리고 총투입비용은 조사된 시간당 생업 인건비에 자원봉사 1회당 평균 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그런 다음 사회적 편익은 앞서 사회적 교육비용으로 추정된 사회적 산출 가치에서 기회비용을 적용한 투입비용을 제하여 산정하였다.

〈표 3-22〉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연령계층별 자원봉사에 따른 시간당 기회비용

(단위: 원)

연령계층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0대	8,582	8,221	0	70,000
20대	9,709	8,442	0	60,000
30대	13,135	12,227	0	85,000
40대	14,390	12,328	0	80,000
50대	17,718	14,818	0	90,000
60세 이상	14,105	12,973	0	85,000
전체	12,796	11,999	0	90,000

주: 1) 무응답 제외, $F=11.023$, $p=0.000 < 0.01$

2) 기회비용 차원에서 측정한 시간당 인건비 설문에서 불성실한 응답자 20명을 제외, 평균값은 1,087명의 평균값.

자원봉사자 1인당 기회비용 차원에서 추정되는 사회적 편익은 봉사 1회당 8,854원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1,366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60대 이상은 15,131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0대 이후 자원봉사자들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연령대들에 가구의 생업을 책임지는 가구주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3-23〉 자원봉사활동 기회비용 기준 사회적 편익 추정

(단위: 원)

연령	투입			산출	편익
	평균봉사시간	인건비	총비용	사회적 산출 가치	사회적 편익 (순가치)
10대	3.64	8,583	31,241	62,607	31,366
20대	4.75	9,709	46,120	58,319	12,199
30대	4.16	13,136	54,645	82,892	28,247
40대	4.07	14,390	58,569	52,089	-6,480
50대	4.03	17,719	71,406	61,906	-9,500
60대 이상	4.06	14,106	57,270	42,139	-15,131
전체	4.12	12,796	52,721	61,575	8,854

네 번째로, 본고에서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보조지표로서 개인이 봉사 활동 전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 등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도 대비 자원봉사로 증가한 사회적 이해도로 조작적 정의하고 측정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해도를 100%라고 가정할 때, 봉사활동을 경험한 후 체감하는 사회적 이해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3-24〉와 같이 사회적 이해도가 약 174%(1.74배)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이후 사회에 대한 이해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7.998$, $p=0.000 < 0.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 이후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도리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소 폭을 보면 50까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40대와 60대 자원봉사자들은 사회적 이해도가 최소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 연령대의 봉사활동은 사회를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24〉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연령계층별 사회적 이해 증감도

(단위: %)

연령계층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0대	161	47	50	400
20대	163	50	60	400
30대	172	49	65	300
40대	181	56	100	400
50대	187	59	50	600
60세 이상	184	54	100	400
전체	174	53	50	600

주: 무응답 제외.

또한 〈표 3-25〉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기간에 따라 사회적 이해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원봉사활동 일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이해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7.869$, $p=0.000<0.000$).

〈표 3-25〉 자원봉사활동 일수별 자원봉사에 따른 사회적 이해 증감도

(단위: %)

자원봉사활동 일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9일	161	48	50	300
10~19일	174	53	100	400
20~29일	181	50	60	300
30~39일	181	54	100	300
40~49일	189	41	120	300
50~59일	191	69	110	600
60~99일	185	49	100	300
100일 이상	190	64	100	400
전체	174	53	50	600

주: 무응답 제외.

〈표 3-26〉은 응답자 가구의 소득별 자원봉사활동에 의한 사회적 이해도를 살펴본 것인데 응답자 가구의 소득이 사회적 이해도에 유의미($F=2.604$, $p=0.035<0.05$)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사회적 이해도의 긍정적 영향은 가구의 소득이 일정 수준(7,000만원 미만)까지 증가할수록 이해도 역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가구소득별 사회적 이해 증감도

(단위: %)

가구소득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3,000만 원 미만	167	51	50	400
3,000만~5,000만 원 미만	178	56	80	600
5,000만~7,000만 원 미만	179	51	50	300
7,000만~9,000만 원 미만	177	48	100	300
9,000만 원 이상	171	61	100	400
전체	174	53	50	600

주: 무응답 제외.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사회조사 자원봉사 참가율을 기반으로 추정된 자원봉사자 수 717만 명을 기반으로 1인당 평균 자원봉사 횟수를 적용하면 1년간 최소 4,189억 원에서 최대 1조 3,634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자원봉사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27〉 전 자원봉사자 반영 사회적 편익 결과

(단위: 명, 회, 원, 백억 원)

연령	자원 봉사자 수	평균 자원봉사 횟수	최소		최대	
			개인별 사회적 편익(원)	총 사회적 편익(백억 원)	개인별 사회적 편익(원)	총 사회적 편익(백억 원)
10대	2,291,033	3.6	31,366	258.6	35,212	290.4
20대	786,645	4.9	12,199	47.0	23,628	91.0
30대	830,716	6.4	28,247	150.1	48,410	257.3
40대	1,365,377	8.7	-6,480	-76.9	18,538	220.2
50대	1,193,295	11.9	-9,500	-134.8	27,674	392.9
60대 이상	724,776	13.4	-15,131	-146.9	10,109	98.1
전체	7,169,565	6.6	8,854	418.9	28,814	1,363.4

주: 자원봉사자 수는 〈표 2-13〉 참조, 평균자원봉사 횟수는 〈표 2-18〉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첫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등 일반화된 방법론이 없기 때문이다(조영복·류정란, 2013). 둘째는 편익과 비용의 추정에 사용될 자료 수집이 어려운 점도 포함된다. 사실 사회적 가치 측정을 시도한 본 연구도 자료 획득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중에는 표본의 대표성이 포함된다. 본 조사가 정확한 지표에 근거해 수집된 자료는 아니지만 자원봉사활동이 가지는 대략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데 연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자원봉사 재확산을 위한
7대 이슈

제1절 개관

제2절 한국의 자원봉사 재확산을 위한 7대 이슈



4

자원봉사 재확산을 위한 << 7대 이슈

제1절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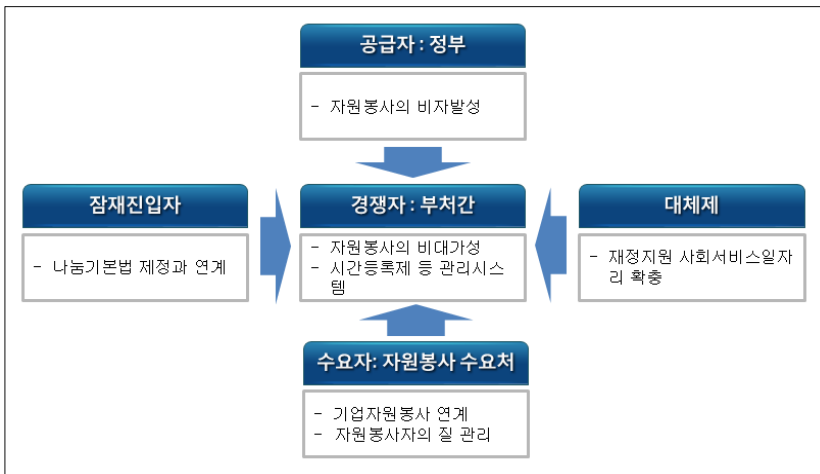
앞서 2장에서는 정부 부처와 기업 단체들이 작성한 자원봉사에 관한 2차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국의 자원봉사 현황에 대한 양적 현황과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개인과 기업 모두 자원봉사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제4장에서는 사회적 자본인 자원봉사활동을 재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이슈 7가지를 규정하고, 검토하였다. 선정된 7대 이슈는 자원봉사의 본질적 개념과 관련된 비자발성과 대가성 문제, 그리고 자원 효율성 측면에서의 기업 자원봉사활동과 국가 정책과의 연계 문제, 마지막으로 관리 차원에서의 각 부처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의 통합과 시간등록제 운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개정안과 나눔기본법 제정안의 상충 문제 등이었다.

7대 이슈에 대한 검토는 각각의 기존 문헌조사 후,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이루어졌다. FGI는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전문가의 경우 자원봉사 관련 단체 소속의 전문가와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교수,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일반인 그룹은 연령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하였는데 주로 본 연구에서 일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인터넷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제2절 한국의 자원봉사 재확산을 위한 7대 이슈

사실 자원봉사활동의 재확산을 위한 7대 이슈는 현 자원봉사활동의 구조,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선정된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 마이클 포터가 산업구조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시한 5요인(5 Force Theory)을 근거로 한다. 포터는 모든 산업구조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가지 주요 영향 요인, 즉 공급자, 수요자, 경쟁자, 대체재, 잠재진입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현황과 전망을 예측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포터의 산업구조분석틀하에서 우선, 공급자 측면의 경우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비자발적인 제도들을, 수요자 측면에서는 기업과 자원봉사 수요처 간의 연계와 자원봉사자들의 질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4-1] 한국의 자원봉사 재확산을 위한 7대 이슈 선정



또한 대체제 측면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증가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의 관계성을, 잠재진입자 측면에서는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나눔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상충 관련성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자 측면에서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와 자원봉사의 본질적인 철학인 비대가성 문제, 이와 맞물려 시행되고 있는 시간등록제 등 부처 간 관리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 비자발적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철학적 기반인 자원봉사주의(volunteerism)의 4대 기본 원칙, 즉 이타성, 공익성, 자발성, 비대가성의 한 축을 의미한다(행정자치부, 2015).

그러나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시민 중 상당수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발성이 아니라 사회나 정부가 부여한 의무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계기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32.8%는 비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이 회사 등 소속 기관의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17.5%였고, ‘입시·취업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의견은 15.3%였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응답자 중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30대(38.4~52.2%)는 전체 평균 3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젊은 세대의 경우 상당수가 비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대(34.5%)와 20대(32.3%)의 경우 입시 및 취업 때문에, 30대(30.3%)의 경우 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표 4-1〉 봉사활동 계기 중 자발성과 비자발성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비자발적	32.8	42.8	52.2	38.4	24.2	20.3	3.1
자발적	67.3	57.3	47.7	61.6	75.9	79.6	96.8

주: 1) 비자발적: '회사 등 소속 기관의 업무 중 하나, 입시·취업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려고'에 응답치 함.
 2) 자발적: '친구 등 주변 지인의 권유로, 타인의 영향 없이 시민의 의무로 생각해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기타' 등의 응답치 함.
 자료: 본고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 사회의 입시 및 취업 제도, 그리고 기업 문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대학 입시 제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요구조건이 존재하고, 대학의 경우 취업 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봉사 관련 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경우 사회공헌활동이 경영활동에 표준화가 되면서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동원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례로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FGI에서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10대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 시 가산점 때문에, 20대는 이력서 작성과 대학 필수 과목 선정 때문에, 30~50대 직장인은 직장 고과점수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2〉 자원봉사의 자발성 관련 FGI 내용 요약

연령대별	FGI 내용 요약
1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발적임. - 중학교 졸업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가산점이 있음. - 선생님이 봉사활동기록을 체크함. - 학생들은 봉사활동이 하나의 과제, 숙제라고 생각함. 봉사점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 ▶ 100% 비자발적이진 않음. - 처음에는 비자발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게 됨.
2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발적임. - 비자발성 90%, 자발성 10% 정도임. 이력서에 봉사활동시간을 적는 난이 있음.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봉사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선호함. - 대학에서 교양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면 봉사활동을 하지 않을 것임. 졸업을 위해 1학기에 봉사활동 60시간을 채워야 함. ▶ 100% 비자발적이진 않음. - 처음에는 취직을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도움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 자긍심을 느낌. - 봉사활동의 긍정적 경험을 계기로 휴학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음.
3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강제적, 비자발적임. - 봉사자의 98%가 비자발적이라고 생각됨. 활동복이나 점심식사 등 대가를 바라고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직장 고과점수에 반영됨. 봉사활동 후 만족도가 떨어짐. ▶ 100% 비자발적이진 않음. - 직장 고과점수에 반영되나 점수를 못 채우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며 강제성은 없음. 회사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함. - 헌혈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의 헌혈증을 모아 단체에 기부함. 자발적임.
40·5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적 의무임. - 회사에서 1인 12시간씩 봉사활동 할당 시간이 있음.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할당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페널티가 부여됨 - 회사에서 기부를 위해 월급에서 각출함. - 아이의 자원봉사 실적 사전 확보를 위해 활동함. ▶ 자발적임. - 자기만족으로 봉사활동을 함.
6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임. - 은퇴 후 새로운 활동,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시작함. -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활동함.

문제는 이와 같은 비자발적 사회제도로 인해 실시한 자원봉사 경험이 향후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선 일반인 자원봉사자 대상의 FGI에서 처음에는 비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경험하였지만 현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양적 자료에서는 그 성향이 다소 상반되게 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0대와 50대의 경우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자원봉사 참가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20~40대는 10년이 지날 경우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 사회조사를 기반으로 추정된 연령대별 자원봉사 참가율을 살펴보면 2006년 10대의 자원봉사참가율 59.5%는 5년이 지나 20대가 된 후에는 13.2%로 감소한 반면, 2006년 20대였던 사람들이 2015년 30대가 되어 추정된 자원봉사 참가율은 10.7%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30대와 40대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2] 세대 간 자원봉사 참가율 추이 비교

(단위: %)

구분	2006	2011	2015
15~19세	59.5	72.3	71.1
20~29세	8.3	13.2	11.6
30~39세	10.3	11.2	10.7
40~49세	13.9	17.1	15.6
50~59세	12.4	14.6	14.6
60세 이상	6.5	7.2	7.8

주: 자원봉사 참가율은 통계청 사회조사를 기반으로 추정.
 자료: 고경환 등(2016). 나눔실태 2015. p.125.

물론 보다 심층화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현 10대들의 경우 입시제도로 인해 과도한 자원봉사 시간 충족이 교육으로 이어져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결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오히려 입시제도에 필요한 자원봉사보다는 인격 소양에 필요한 최소 시간의 자원봉사를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교육적 의미에서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0대 이상의 경우 성인으로서 경쟁 위주의 사회 경험 등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옹고 그름의 판단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 자원봉사 경험이 사회 이해도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10대들의 경우 FGI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자원봉사가 하기 싫은 학교 숙제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학교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26호,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에 따라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하나로 구성하고,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 학습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선정·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학교가 동일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사례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5~20시간이며, 고입 전형에 위한 봉사활동 점수 기준은 학년당 4점으로 중학교 재학 3년 간 45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총점 12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20시간, 3년간 총 60시간을 채워야 한다. 이는 하루 8시간 수업을 가정할 때, 중학생은 1년에 2일, 고등학생은 2일 반을 자원봉사에 투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만약 교육적 차원이라면 1년에 1회 정도 즉, 현행 시간의 절반 정도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표 4-3〉 초·중·고등학교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사례

구 분	주요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의 공공성(공공성, 비영리성), 무보수성 원칙 -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연간 운영 시수는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개인 봉사활동 시수도 확보되도록 함 - 1일 8시간 이내 인정 ▶ 학생 봉사활동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발달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획 - 봉사활동의 목적, 취지, 필요성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반드시 편성 - 노인 대상 봉사활동을 학생 1인당 봉사활동 시수의 20% 이상 실시되도록 권장 - 동아리, 학급 단위의 프로젝트 봉사활동 활성화 도모 -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연간 5~10시간 이상 - 1~3학년: 연간 5시간 이상 - 4~6학년: 연간 10시간 이상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연간 15시간 이상 ▶ 내신 성적 반영 봉사활동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당 4점으로 총점은 12점(12시간 미만: 2점/ 12시간 이상~15시간 미만: 3점/ 15시간 이상: 4점)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연간 20시간 이상 ▶ 대입 내신 성적 반영점수는 대학별 대입 전형에 따름

주: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포함.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16). 2016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p.9.
 서울시교육청(2015). 2016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p.24.

2. 자원봉사의 비대가성

두 번째 이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대가성에 관한 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도 앞서 언급한 자발성과 같이 자원봉사의 정의상에 위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의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되 그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는 대가가 없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2항 기본 방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党性), 비종파성(非宗党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상으로는 어느 정도 대가가 지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 자원봉사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을 기반으로 한 마일리지 제도 또는 할인카드 제도를 운영하거나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적을 인사고과에 적용하기도 한다. 이 중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자원봉사 시간 등록제를 기반으로 시간당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이나 식품, 음식점 등 가맹점 이용 시, 할인이 적용되는 제도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활동 경비는 지자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나 급식비, 활동 경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결국 정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통해 비대가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크게 2가지이다. 그 첫째는 자원

봉사활동의 대가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대가의 범위가 현금성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업에서 제공하는 인사고과 시 산점처럼, 대가라는 의미 자체가 노동력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비현금성의 이점인지에 따라 그 수용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자원봉사활동의 비대가성에 대한 범위에 구체적인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4〉 지자체의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 현황(예시)

구 분	주요 내용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경비 지급 - (대상) 시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지급기준) 봉사시간 1일 4시간 이상, 교통비 3000원 이내, 급식비 5000원 이내, 활동용품비 등
대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일리지 제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발급 - (혜택) 마일리지 우대기관(가맹점) 이용 시 할인 혜택, 우수자원 봉사자 및 단체 표창 - (가맹점) 지역 내 미용, 식품, 자동차 정비, 음식점 등
수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일리지 제도) 1시간당 300마일리지 적립, 1인당 최대 50,000마일리지 적립한도 적용 - (마일리지 차감) 공공시설물 및 할인가맹점 대상으로 10% 할인 시, 300마일리지, 20% 할인 시 500마일리지, 30% 할인 시 700마일리지 차감. - (쿠폰 제공)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용주차장 전용쿠폰 50% 할인쿠폰 제공 - (공공시설 사용) 구민회관, 야외음악당 등 공공시설 대관료 - (가맹점) 가구, 통신, 교육, 학원, 병원, 꽃집, 부동산, 음식점 등
전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일리지 제도) 개인별 활동실적에 따라 시간당 60포인트 제공 - (대상) 행자부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 후 6개월 경과자 중 최근 6개월 실적이 6회 또는 24시간 이상인 봉사자. - (시설 활용) 전주동물원, 자연생태박물관 무료 입장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유료 주차장 이용 - (행정서류) 등·초본 등 발급 수수료 - (마일리지 사용) 유료 주차장, 행정서류 발급 시 차감

자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2017. 12. 31.) <http://volunteer.seoul.go.kr>
 대구시 자원봉사센터(2017. 12. 31.) <http://nanum.daegu.go.kr>
 수원시 자원봉사센터(2017. 12. 31.) <http://swvc.suwon.ne.kr>
 전주시 자원봉사센터(2017. 12. 31.) <http://nanum.jeonju.go.kr>

두 번째 문제는 약간의 대가성 지불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의 2014년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한 자원봉사자 및 비자원봉사자의 찬성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대부분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입학, 취업에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한 스펙 반영 등 기득권의 지속적 인정이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외의 별도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비자원봉사자의 찬성률이 자원봉사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5〉 자원봉사 인센티브·혜택에 대한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찬성을 비교

(단위: %)

인센티브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으로 주차할인권,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73.6	72.1
자원봉사 활동시간 마일리지 적립	71.4	64.9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가맹점 할인쿠폰 제공	67.8	65.3
입학, 취업에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한 스펙 반영(혜택)	60.3	65.3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외의 별도 수당 지급	42.8	48.8

자료: 행정자치부(2014).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p.69.

이러한 결과는 본고에서 실시한 자원봉사자 FGI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대가성 지급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마일리지 제도가 자원봉사활동의 동기 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대가성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다는 것이었다. 대가성을 고려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순수성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반면에 연령이 높은 경우, 개인들의 시간 할애와 작업량,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처의 거리에 따라 투여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고려할 때 결국

우려되는 점은 지자체의 인센티브 제도가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높은 연령대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교육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이라도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태가 관행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표 4-6〉 자원봉사의 비대가성 관련 FGI 내용 요약

연령대별	FGI 내용 요약
1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대가를 받는 것에 찬성함. - 힘든 봉사활동에 한해서 대가가 필요함. 대가가 없으면 봉사자가 부족할 것임. ▶ 대가·보수를 받는 것에 반대함. -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 대가는 필요 없음. - 보수를 받는다면 고용관계가 되는 것임. 대가를 바라고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과 다를 게 없음.
2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대가를 받는 것에 찬성함. - 현금 형태가 아닌 봉사시간 마일리지 제도는 봉사활동 동기 부여가 가능할 것임. -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보수를 받는 것은 반대함. - 봉사활동 본래 취지인 무보수성 원칙 필요 - 수당이나 마일리지 없어도 자원봉사를 할 사람은 할 것이고 굳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을 것임. - 행사 진행요원들에게 제공되는 유니폼을 받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부모님 세대는 있을 수 있음.
3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대가를 받는 것은 반대함. - 수당을 주기 시작하자, 수당이 없는 봉사활동을 기피함. - 유급자원봉사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봉사활동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김. - 자원봉사활동의 질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40·5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보수를 받는 것에 찬성함. -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교통비, 간식비가 나오는 봉사활동을 선호하게 됨. -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봉사활동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봉사단원들에게 회비 형태로 각출하고 있음. 봉사활동을 하러 왔는데 회비를 낸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단원들이 일부 있음. 단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의 공모사업을 통해 봉사활동 잡비를 보전받기도 함.

연령대별	FGI 내용 요약
6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대가·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함. - 전문적 또는 작업량이 많을 경우는 기본적인 수당은 필요함. 기관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봉사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교통비와 식비가 탄력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대가를 받는 것에 반대함. - 대가에 대해 봉사시간 인정 또는 실비 지급 중에 선택하라는 경우도 있음. 대부분 돈보다 봉사시간 인정을 선택했음. - 한 번 받으면 계속 받고 싶을 것임.

3. 자원봉사 인증제와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과 비대가성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문제가 바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증제이다. 2010년 행자부를 시작으로 자원봉사 관련 범부처가 도입한 자원봉사 시간인증제는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원봉사자별 봉사시간을 인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 인증제 운영은 크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우선 부정적 측면에서 자원봉사 인증제는 자원봉사활동의 비자발성과 대가성을 유도하는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축적된 자원봉사 실적 자료가 학생들의 입시제도의 행정자료가 됨과 동시에 앞서 언급한 지자체의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및 할인카드 운영의 기본 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간인증제가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의 비자발성과 대가성을 유도하는 부정적인 기능 이외에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자원봉사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는 항상 위험한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시, 자원봉사자 및 관련자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관련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근거로 자원봉사 인증제가 활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실시한 일반인 FGI에서도 자원봉사 인증제에 대한 반대 의견보다는 기존 유지 의견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자발성이나 대가성을 유도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자원봉사 인증 등록제가 자원봉사자의 수나 자원봉사활동의 만족감 등에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표 4-7〉 자원봉사 시간등록제 관련 FGI 내용 요약

연령대별	FGI 내용 요약
1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등록제 필요함. - 시간등록제가 없다면 봉사자가 많이 줄어들 것임.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생각함.
2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등록제는 필요 없음. -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 증명·등록을 위한 것임. - 자기소개서에 사용할 수 있어 좋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스펙 쌓기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 같음.
3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등록제는 장단이 있음. - 봉사활동 일정 시간이 채워지면 마일리지 카드를 제공함(경기도 100시간, 울산 80시간). 봉사활동 활성화 정책으로는 긍정적이나 해당 시간이 채워지면 더 이상 봉사활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음. 봉사활동의 질 하락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40·5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등록제 필요함. - 적립시간을 체크하면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 부듯함. - 현월 후 현월증을 받는 것처럼,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좋음.
6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등록제 필요함. - 봉사활동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필요함. 봉사시간이 쌓이는 것을 보니 만족감이 생김. 시간 누적치를 확인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도 있음. - 단, 실적 등록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자원봉사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시스템과 운영에는 다소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첫째는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이 범부처 및 관련 기관별로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2015년 기준 정부와 자원봉사 관련 기관이 운영 중인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은 총 12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중앙부처만 하더라도 행정자치부(1365 자원봉사포털)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독자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등 각 산하 기관별로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독자 운영하고 있다.

〈표 4-8〉 주요 기관별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 운영 현황

운영부서	운영기관	시스템명	URL
행정자치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365 나눔포털	http://www.1365.go.kr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인 증관리(VMS)	http://www.vms.or.kr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자원봉사 시스템	http://dovol.youth.go.kr
문화체육관광부	걸스카우트연맹	현황정보시스템(BIMS)	http://www.girlscout.or.kr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http://www.bloodinfo.net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s.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	http://www.childfund.or.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	http://csv.culture.go.kr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http://cppb.go.kr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청소년부	자원인력관리 프로그램 (RCY Dream-i)	http://www.redcross.or.kr/rcy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	http://volunteer.knps.or.kr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http://neis.go.kr

자료: 한국정보시스템감리연구원(2015). 국민자원봉사[국민 Volunteer ID] 활성화 연구. p. 12.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시스템 간의 연동 문제이다. 일간연계의 경우 자원봉사 수요처의 확보 및 자원봉사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관리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적 연계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협회(LVMS), 청소년연맹 등 일부 기관과는 실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원봉사자의 총현황 등 실효성 있는 현황 등을 집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9〉 1365 연계 현황

연계 기관	연계 방향	연계 항목	연계 여부
VMS	VMS → 1365	- 회원 이름 등 연계 동의 정보 등 - 봉사 일자, 시간 등 실적 등	- 실적 연계
	1365 → VMS	- 회원번호, 봉사 일자 등 실적 등	
DOVOL	DOVOL → 1365	- 회원 이름 등 연계 동의 정보 등 - 봉사 일자, 시간 등 실적 등	- 실적 연계
LVMS	LVMS → 1365	- 수요처 ID 등 정보 등 - 봉사 일자, 시간 등 실적 봉사자 정보	- 無
청소년 단체	청소년단체 → 1365	- 청소년단체 회원 ID 등 회원 여부 정보 - 봉사 일자, 시간 등 실적 봉사자 정보	- KOY: 청소년연맹(無) - GSC: 걸스카우트 - SCO: 한국스카우트 연맹(無) - SEK: 한국해양소년단 연맹(無) - KRC: 적십자
NAVER 해피빈	1365 → NAVER 해피빈	- 해피빈 승인 일자 - 프로그램 등록번호 등 일감정보 유효성	- 일감 연계
NEIS	NEIS → 1365	- 학교코드, 학년 등 학생정보 수신	- 실적 연계
	1365 → NEIS	- 자원봉사 일자, 실적 시간 등 송신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16).

둘째는 각 시스템의 독자 구축 및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등에 대한 정보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 현황과 관련된 통계 작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각 시스템별 구축이 자원봉사 인증에 맞추어져 있어 자원봉사자의 신원과 봉사시간, 수요처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나, 자원봉사자의 직업, 학력 등의 통계적 변수와 수요처의 법인 형태나 구체적인 유형, 수요처별 자원봉사 통합 현황에 대한 자료 생성이 어렵다.

4.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간의 욕구 미스매치

자원봉사활동의 재확산에 있어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자원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간의 욕구 미스매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반인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수요처 담당자 대상의 FGI의 경우, 서로 간 자원봉사활동 욕구에서 차별점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자원봉사의 확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수요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자원봉사자가 방문하기를 원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 등이 고려되지 않는 단순한 업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의 의미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평일과 주말, 개인과 단체라는 자원봉사활동 형태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예를 들어 양로시설 등 생활시설인 사회복지시설들은 정부의 인력 배치 기준과 그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평일 특히 주간 근무가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은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박물관 방문 등 원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면, 사회복지사 등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야간에 1~2명으로 충분한 관리 인력이 주간에도 그것도 원외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경우, 원생 관리에 2~3배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 관련 전문 자격증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이 많지 않고, 평일에 봉사활동을 하는 일반인들이 적어 대표적인 자원봉사 수요처인 사회복지시설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말에 이루어지는 기업 등 단체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가 드물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 분장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단체 자원봉사의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 사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자원봉사자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방문단체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식사 준비, 청소 등 단순 노동력 제공의 자원봉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FGI에 참여한 자원봉사 수요처들은 평일에 활동 가능한 자원봉사자 풀(Pool)을 개인 또는 지역 부녀회 등을 통해 별도로 확보하고 있었다.

〈표 4-10〉 자원봉사 수요처의 FGI 내용 요약

구분	FGI 내용 요약
봉사자 모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봉사자에게 직접 연락함. - 1365나 VMS 사이트를 활용하지 않고, 시설 자체 홈페이지에 일감을 등록해 놓으면 기업이나 봉사단체로부터 연락이 옴. - 급하게 봉사자가 필요할 때, 자원봉사시스템은 소용이 없음. 시스템을 통해 봉사자 모집공고를 올려도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음. 봉사센터, 기관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음. - 자주 오는 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에 직접 연락함. - 50:60대 봉사자분들은 인터넷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함. 1365나 VMS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시설에 방문한 적이 있는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풀(pool)을 관리함. ▶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해 봉사자를 모집함. - 전 직원이 VMS를 쓸 수 있음. VMS에 시설 소개와 봉사활동 모집공고를 띄우면 지역 내 단체에서 연락이 옴. - VMS가 번거롭긴 하지만 시설에서 추가로 봉사자 관리를 하지 않아도 체크할 수 있어 편리함. ▶ 대학 및 대학 동아리와 협약을 통해 대학생 봉사자를 모집함.

구분	FGI 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의 나눔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거나 사회봉사 수업에서 팀을 이뤄서 방문함. - 대학과 협약을 통해 모집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활동 의지가 높지 않아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에 배치함. 오히려 대학 봉사동아리와 협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대학생 봉사자들을 모집함.
미스매칭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자 vs 수요처) 원하는 봉사활동 분야와 시간대가 다름. - 시설에 오면 늘 일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음. 특히 연말에 봉사자가 몰리기 때문에 시설에서 봉사자를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음. 정작 급할 때는 봉사자를 구하기 어려움. - 목욕봉사를 할 수 있는 봉사자 섭외가 어려워져 봉사자에게 교통비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 -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봉사는 한계가 있음. - 시설에서 봉사를 필요로 하는 시간과 봉사자가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 연계가 어려움. 시설에서는 평일에 봉사자가 필요한데 봉사자들은 주말에 봉사하기를 원함.
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봉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57명의 어르신을 2명이 케어해야 할 때가 있음. 조건이 안 맞아서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움. - 봉사자 없이는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됨. 대부분이 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 생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케어 인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봉사자를 활용함. - 이용시설의 이용자가 하루에 500명 정도임.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 - 나들이, 행사, 캠프가 진행될 때는 봉사자가 반드시 필요함. 봉사자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 - 대상자가 1명이든 100명이든 100명 기준으로 조리사의 인력 배치 기준이 1명임. 365일 휴일 없이 조리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봉사자를 활용함. ▶ 봉사자를 활용해 복지사 업무를 대체할 수 없음. - 시설 인력이 부족해서 봉사자에게 부역으로 쓴다는 시각도 있지만 복지사의 업무와 봉사자의 영역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음. -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임. 봉사자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음.
봉사자 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사업의 경우 봉사자 검증을 진행함. -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봉사활동의 경우는 검증을 진행하지 않지만 멘토링 사업은 봉사자를 검증함. - 대상자와 봉사자가 1:1로 진행하기 때문에 면접을 진행함. ▶ 정보 조회 및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봉사자를 검증함. - 아동이 대상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후 프로그램을 맡김. 1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해서 관리함. ▶ 질 관리가 어려움. - 복지사 한 명이 자원봉사 관리만 하는 것도 아닌데 봉사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음. - 봉사자 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 없음.

구분	FGI 내용 요약
기업 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봉사활동을 받는 이유는 기부와 연관되어 있음. - 기업의 봉사활동은 기부(현금 및 현물)를 받기 위함임. 기업에서는 20~30명 정도가 한꺼번에 시설을 방문함. 그만큼의 일감이 없어 배치하기 어려울 때가 있음. 무리하게 받는 이유는 필요한 물품이 있기 때문임. - 기업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는 매번 봉사자들이 바뀜. 올 때마다 봉사자 사전교육을 진행하기도 번거로움. - 한시적인 봉사는 배제하려 함. 정기적으로 활동하려는 기업과 연계하여 파트너십을 유지함. - 자발적으로 오는 개인들과 차이가 있음. - 기업의 경우 건전한 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음.
봉사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진행 여부에 따라 봉사자의 만족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함. - 학생 봉사자들이 1시간 봉사활동을 하러 와도 기관 설명 및 봉사활동 교육을 50분 정도 진행함. - 교육은 시설 소개, 봉사자의 자세, 대상자와의 대화법, 봉사활동 시 유의할 점 등을 30분 정도 진행함. - 교육 후 봉사활동 만족도가 높음.
자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참여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경험한 후 태도가 바뀌는 것이 보임. (800명 중 30명 정도) - 처음부터 순수한 의미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분은 많지 않음.
봉사활동 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60대 주부 봉사자들이 줄어들음. - 기존에 활동하는 봉사자들이 노령화되면서 밀반찬 봉사나 목욕봉사를 요청드리기 어려움. - 기업 자원봉사도 줄어들고 있음.
실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로 티머니를 충전해서 지급됨. - 멘토링 사업에 활동비 지원 외에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운영됨.
정부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65나 VMS에서는 관리자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임. 봉사자 관리를 위한 교육이 추가로 필요함.

반면에 공급자로서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일방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으로 다소 불만을 갖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단체 자원봉사에 참여한 10대 학생의 경우, 주 자원봉사 내용이 식재료 다듬기 등 단순 노동력 제공이었기 때문에, 향후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 등 행사지원 자원봉사가 시

간 확보와 육체적 피로 측면에서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30~50대 주부들의 경우,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 부모가 미리 자원봉사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부모들은 교육적 의미에서 자원봉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표 4-11〉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 관련 FGI 내용 요약

연령대별	FGI 내용 요약
1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정도로 느낌. - 마침 일손이 부족할 때 부르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생각됨. - 기관에서 단순한 일을 주로 맡김.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 경험을 느껴볼 기회가 적음. - 자원봉사자를 노동자처럼 대함.
2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만족, 기쁨을 느낌. - 들인 시간, 돈에 비해 부딿함이 큼. - 사람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감이 있음. - 봉사활동 유형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했을 때는 시간을 낭비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이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을 때(ex. 말벗봉사, 목욕봉사 등) 보람이 큼.
3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함. - 아이들이 봉사활동의 가치를 알았으면 함. ▶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봉사활동 전에 자원봉사 교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 이해도가 높아짐. ▶ 자원봉사자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자원봉사자를 아르바이트생 대하듯 함.
40·5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함. -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이 느껴짐. - 아이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 오라고 하기 전에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가족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효과가 큼.
6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실현, 삶의 의미를 찾음. - 봉사 실적을 통해 자아실현을 한다고 느끼고 살아온 삶의 흔적이자 역사라고 생각됨. ▶ 자원봉사자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자원봉사자를 무시함. 할 일이 없어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생각함.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자원봉사 수요처와 공급자의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자원봉사 전에 사전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요처나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2014년 자원봉사 실태조사 자원봉사 교육 경험률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원봉사 교육의 도움 정도에서도 16.6% 정도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표 4-12〉 자원봉사교육 경험률: 2005~2014년

(단위: %)

구분	2014년	2011년	2008년	2005년
자원봉사 교육 경험률	33.6	22.0	30.9	21.1

자료: 행정자치부(2014).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p.49.

〈표 4-13〉 자원봉사 교육의 도움 정도: 2005~2014년

(단위: %)

구분	2014년	2011년	2008년	2005년
매우 도움	83.4	45.0	43.9	41.4
약간 도움		51.0	47.2	48.6
그저 그렇다	-	-	4.9	8.6
별로 도움 안됨	16.6	4.0	1.6	1.4
전혀 도움 안됨		-	0.8	-

자료: 행정자치부(2014).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p.50.

결국, 자원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간의 욕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단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특히 현장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단체 자원봉사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수요처들은 봉사자들의 재능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봉사자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기업 자원봉사의 비효율성

기업은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첫째 이유는 개인의 경우, 노동력 중심의 봉사활동을 제공하지만 기업은 자원봉사활동과 금전적 기부가 포함된 패키지 형태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물질 자본을 직접 투자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은 자원봉사 시,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는 단순 서비스 중심의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원봉사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이 자원봉사 경험을 쌓으려면 직접 자원봉사 수요처를 알아보는 등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 자원봉사에 참여한 직장인은 회사 담당자가 수요처 탐색 등을 대신하기 때문에 낮은 기회비용을 담보로 자원봉사를 경험할 수 있다. 실례로 일반인 대상의 FGI에서 40~50대 중년 남성 직장인들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계기가 기업의 자원봉사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 자원봉사는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자원봉사 수요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도움을 원하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한다. 이를 도와주기 위해 국가는 조세를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의 경우, 정부가 지출한 예산이나 서비스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지만, 기업 자원봉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업 자원봉사 자료가 각 부처의 정보인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으며, 자원봉사 인증기준에서도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자원봉사는 인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처의 인증관리시스템에 접

속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시설들은 기업들의 자원봉사나 기부가 넘쳐나는 반면, 인지도가 낮거나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시설 등의 자원봉사 수요처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

둘째는 공급자 측면에서 기업의 자원봉사 담당자들은 수요처를 찾는 데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탐색 비용과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업에 자원봉사나 사회공헌 담당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 업무가 자원봉사 또는 사회공헌인 경우는 드물다. 실례로 2015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백서에서는 조사 기업 중 71.5%가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겸임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처 유형과 투명성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기업들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문보다는 기업의 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찾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는 특정 업종에 강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화된 자원봉사를 제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수요처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시설 등 자원봉사 수요처에 대한 FGI에서 일부 시설들은 기업 자원봉사의 경우, 자원봉사보다는 기부 등 물품 때문에 자원봉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제로 자원봉사 수요처가 요구하는 형태의 자원봉사는 청소 등 단순 노동력 제공 형태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넷째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을 수요처와 연계하려는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요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공급자인 기업들의 수요처 탐색과 투명성 보증을 위한 정보 제공, 그리고 기업의 특화된 자원봉사활동 능력 등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이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조세 기반의 복지재정이 증가하는 시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지시설이나 지역공동체 형성 등 사회서비스 요구를 기업의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아쉬운 시점이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기업 단위로 행하고 있는 기업 자원봉사 담당자 대상의 FGI에서는 정부가 기업들이 자원봉사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사례나 자원봉사 수요처에 대한 투명성 자료 등을 제공해 주길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전 관심을 촉진 시킴으로써 향후 비자발적인 자원봉사를 자발적 자원봉사로 전환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자원봉사활동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자원봉사 자료 제공 및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기업 단위의 자원봉사 경험이 부족하고, 사내에 자원봉사 담당자 또는 사회공헌 담당자가 부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4-14〉 기업 자원봉사 관련 FGI 내용 요약

구분	FGI 내용 요약
자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비자발적 분위기임. - 휴일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분위기는 아님. - 직원들을 독려하여 기부금을 모음. 개인적으로 다른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는 직원은 각출을 반대하지만,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직원도 있음. - 불이익을 받을까 봐 참여하는 직원도 있음.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고과에 가산점 형태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 현재 자원봉사 시간 등록을 요청하는 직원은 거의 없음. 인사기록부에 반영된다고 하면 등록을 요청할 것임. ▶ 자원봉사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치·철학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기획이 필요함. - 사회공헌의 목표가 아동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아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기업의 모토와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동하고 있음. ▶ 적극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함. - 직원의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봉사활동을 진행함. 일이 바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데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음.

구분	FGI 내용 요약
기부와 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처에서 기업의 자원봉사활동보다 기부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부와 자원봉사를 같이함. -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에 기대하는 바는 기부(현금 및 현물)를 기본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노동력)은 부수적인. - 수요처에서는 물품 후원을 우선적으로 요청함. 기업에서 단체로 오면 시끄럽지만 하고 연출이 있어 수요처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자원봉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 관련 교육을 진행함. - 신입사원 OT에 사회공헌활동 교육을 내부적으로 진행함. -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사회공헌 교육은 이용해 본 적이 없음.
수요처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연계 사이트 이용 없이 기업에서 직접 수요처를 파악 -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후 선정함. 기부금 활용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장기적으로 지원 가능함. - 기업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 따라 수요처를 정함. (ex. 교육기업의 경우, 아동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해 교재 기부를 하고 교육 전문가인 직원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구청의 협조를 통해 공동기획의 형태로 진행함. ▶ 주말에 활동이 가능한 수요처를 선정함. - 평일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주말에 일정 조율이 가능한 수요처를 선호함.
활동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에 드는 비용을 매칭그랜트 형태로 처리함. -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과 회사 부담금을 1:1로 매칭함.
정부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공헌팀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해당 기업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컨설팅해 주는 전문가가 필요함. ▶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 - 기사 검색이나 복지 관련 홈페이지를 서칭해서 정보를 얻음. - 수요처 후원금 활용 정보, 타 기업의 우수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중 산재 처리 방법 등 관련 정보 공유가 필요함. ▶ 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 ex. (가칭)사회공헌인증기업 제도, 기업 사회공헌 문화 정착 지원

6. 자원봉사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와의 대체 가능성

앞서 본고에서는 제2장 자원봉사 현황 부문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일거리 감소와 실업률 증가 가능성에 대하여 언

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자원봉사 활동의 감소 원인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가로 인한 자원봉사 활동의 감소 가능성이다. 복지 수요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정일자리 확충을 시도하면서 과거 시민사회가 제공하던 사회서비스 관련 자원봉사활동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던 자원봉사자들이 요양보호사로 대거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업종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전반이 확충되면서 자원봉사활동이 감소하고 있다는 실질적 연구는 지금까지 부재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확충과 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감소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자원봉사활동과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간에 중복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정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 범위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산업들의 통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 개정)에 부합되도록 사회서비스 분야를 대분류 8개, 중분류 15개, 소분류 44개로 나누어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 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4-15〉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안)의 대분류 및 정의

대분류	정의
종합 사회서비스업	돌봄·재활·상담 등 사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시설·협회 등의 산업 활동.
돌봄서비스업	의료 관리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요양 보호 및 단순 돌봄 대상자에 대한 가정·비거주·거주시설 보호 산업 활동.
상담·재활서비스업	상담서비스와 재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또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건강지원 서비스업	재활서비스 외의 의료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공교육을 통한 유아·청소년기의 신체·사회적 발달 지원 및 평생교육·직장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개발 지원과 관련된 산업 활동.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 및 지원 사회서비스업	문화·예술·체육 활동 관련 국공립예술단체, 미술관, 박물관 등 관련 단체·시설 및 문화·예술·체육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활동.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업	피고용자를 파견하거나 중개·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또는 직업재활 등을 통해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노동 등 사회서비스와 사회보장 관련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된 산업 활동.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3).

또한 범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범부처 사업들을 범부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명명하여 관리하고 있다.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조세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고용과 복지 연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총 9개 부처에서 68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 수는 132.6만 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중 31개 사업이 복지부 소관 사업이며 일자리 수는 122.1만 명으로 전체 일자리의 92.1%를 차지한다. 그리고 2012년 이후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는 연평균 7.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16〉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2012~2015년

(단위: 명, %)

구분	연도				연평균 증가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1,067,273	1,133,532	1,206,099	1,326,462	7.5
복지부(31)	970,769	1,029,423	1,101,802	1,221,975	8.0
여가부(9)	18,525	27,671	24,522	24,235	9.4
교육부(5)	49,992	45,399	48,143	50,670	0.5
문체부(8)	16,223	18,961	20,077	19,684	6.7
환경부(5)	1,624	1,669	1,678	1,838	4.2
산림청(4)	7,121	7,188	6,619	5,572	-7.9
보훈처(2)	1,110	1,220	1,226	1,474	9.9
문화재청(3)	1,144	1,212	1,240	1,397	6.9
산업부(1)	765	789	792	777	0.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6).

이와 같은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과 자원봉사활동 간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총량에서 자원봉사자가 감소한 반면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4-17〉 자원봉사자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증감 수: 2013·2015년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5년	13년 대비 15년 증감 수	연평균 증가율
자원봉사자 추정치	7,617,488	7,169,565	-447,923	-3.0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1,133,532	1,326,462	192,930	8.2

주: 자원봉사 참가자 수는 통계청 해당 연도 장래인구추계 모집단에 자원봉사 참가율을 곱해 산정, 자원봉사 참가율은 통계청 사회조사를 기반으로 추정,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는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6),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러나 재정지원 일자리 수의 증가량보다 자원봉사자의 감소량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자원봉사 참가율이 높았던 2013년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자원봉사자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의 증감 폭을

살펴보면 동일 기간 내 자원봉사자 수는 약 44.7만 명 감소한 반면 범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수의 증가 폭은 19만 명에 지나지 않아 약 25만 명의 괴리가 존재한다. 한편, 자원봉사자 수의 감소는 전체 연령 중 15~19세(56.3% 감소), 20~29세(28.9% 감소), 40~49세(29.4% 감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약 25만 명의 격차는 15~19세의 자원봉사 감소분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중 20세 미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표 4-18〉 2013년 대비 2015년 연령별 자원봉사자 증감 수 및 비중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5년	13년 대비 15년 증감	
			수	%
전체	7,617,488	7,169,565	-447,923	100.0%
15~19세	2,543,280	2,291,033	-252,247	-56.3%
20~29세	916,004	786,645	-129,359	-28.9%
30~39세	900,029	830,716	-69,313	-15.5%
40~49세	1,497,019	1,365,377	-131,642	-29.4%
50~59세	1,134,186	1,193,295	59,109	13.2%
60세 이상	660,364	724,776	64,411	14.4%

주: 자원봉사 참가자 수는 통계청 해당 연도 장애인구추계 모집단에 자원봉사 참가율을 곱해 산정. 자원봉사 참가율은 통계청 사회조사를 기반으로 추정함.
 자료: 통계청 장애인구추계(2016).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렇다면 44.7만 명 중 25만 명을 제외한 19만 명의 자원봉사자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중 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 하면서 2013년 대비 2015년에 일자리 수가 증가한 7개 사업을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37.7만 명, 15년 기준)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이 35.5만 명(15년 기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27만 명, 15년 기준)이 세 번째다. 이 중 2013년 대비 일자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그 수가 11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60세 이상 자원봉사자의 증가를 고려해 볼 때 자원봉사활동과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의 대체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40~50대 여성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일자리 수 증가 폭이 큰 사업 중 40~50대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5.4만 명 증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1.1만 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1.2만 명) 등에서 적어도 2013년 대비 2015년도에 약 7.7만 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동일 기간 감소한 40대 여성 자원봉사자 13만 명과 비교했을 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그러나 결국, 전체 감소분 44만 명 중 약 20% 정도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에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자원봉사활동과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간에 대체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19〉 주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일자리 증감 현황

(단위: 명)

일자리 사업명	재정지원 일자리			
	2012년	2015년	증가 수	일자리 주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	277,286	355,078	54,574	40~50대 여성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0,111	23,933	11,130	40~50대 여성
노인일자리지원	267,075	372,445	110,445	65세 이상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18,646	21,258	119	30~40대 여성
영유아보육료지원	247,110	270,591	14,709	20~30대 여성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8,003	52,761	12,313	40~50대 여성
유아학비(누리과정)	32,266	38,379	3,250	20~30대 여성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3).

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나눔기본법과의 상충 가능성

자원봉사활동의 재확산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점 중의 하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나눔기본법안이다. 나눔기본법은 나눔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나눔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정하고자 발의된 법안이다. 나눔기본법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두 법안 모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나눔기본법안에서는 나눔을 크게 물적나눔, 인적나눔, 생명나눔, 교육기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인적나눔을 '나눔 주체의 전문적 또는 비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의 나눔'으로 정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세부 법안들을 중심으로 총 15개 활동 범위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에 나눔기본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의 자원봉사활동 이외에 물적·생명나눔과 교육 기부 등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관련 법률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되는 첫 번째 상충 가능성은 나눔기본법이 독자적으로 제정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2004년 제정되었고, 나눔기본법안은 제정을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나눔기본법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6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즉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조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7조 15항에서 언급한 '그 밖의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에 나눔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면, 나눔기본법의 제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상충 가능성은 두 법안 모두가 기본법이라는 점이다. 즉 어느 법안이 상위 법률이냐의 문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첫째는 기본 6법(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실생활에서 광범위한 역할을 발휘하는 개별 법령 또는 일단의 법규를 뜻하는 것이며, 둘째는 위계에 놓인 법령임에도 어떤 특정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법령을 다른 법령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는 경우(예 : 조세감면규제법, 정부조직법)를 뜻하기도 한다. 셋째는 어떤 분야의 정책에 있어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법령(예 : 각종 기본법)을 뜻하기도 한다. 넷째는 형식적으로 개별법에 우월한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개별법의 해석상에 세부지침으로 입법정책적 방향 제시의 기능을 통해 개별 법률들을 통합하여 통일적이며, 조화적으로 정책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침 규정의 역할을 하는 법률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나눔기본법, 두 법안이 앞서 언급한 두 번째 기본법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상충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두 가지 기본법으로 인해 나타날 정책 시너지 효과가 실현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5년마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눔기본법안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나눔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나눔기본법상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계획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상의 자원봉사 기본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두 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의 중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본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기업의 자원봉사는 기

부와 연계된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자원봉사와 달리 기업의 자원봉사는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두 법안이 발효될 경우에 기업·단체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4-2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나눔기본법안 비교

구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4)	나눔기본법(발의안)
법 지위	- 행정법상 기본법	- 행정법상 기본법
목적	-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	- 나눔에 관하 목적별·대상별·부처별 분산 내용을 포괄
의무	- (정부) 국가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민간) 정치활동 등의 금지	- (정부) 나눔기본계획 수립 - (나눔단체) 재무보고서 등 정보공개
조직	- (정부)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민간)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지방) 자원봉사센터 설치	- (정부) 나눔문화위원회 설치 - (정부) 나눔문화재단 설립 - (민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록 업체 중 나눔 법인 등
인센티브	- 포상 -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 국·공유산 재산의 사용 -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인건비 지원	- 포상 - 나눔 주체 및 단체에 세제 혜택 부여 - 나눔 주체 및 단체에 행정적 지원 및 인건비 지원 -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나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 기부연금제도 도입
교육·홍보·정보	- 자원봉사자 교육 권고 -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 자원봉사 인증제를 위한 정보 수집 및 가동 등	- 나눔의 날 및 나눔주간 - 나눔 캠페인 및 홍보 지원 - 나눔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나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타 법률 관계	-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등 15개 자원봉사활동 범위 설정	- 나눔을 물적·인적·생명·교육나눔 등 12개 관련 법률로 구분 - 인적나눔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내 자원봉사활동 포함
주관 부처	- 행정자치부	- 보건복지부

자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나눔기본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2-668호)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제 5 장

시사점과 정책적 과제

제1절 시사점

제2절 정책적 과제



5

시사점과 정책적 과제 <<

제1절 시사점

본고에서는 소득 양극화와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복지예산의 절감과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인력의 보완 요인으로서 자원봉사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인과 기업으로 나누어 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후에 자원봉사활동이 가지는 막연한 의미를 사회적·경제적 가치로 산정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재확산을 위해 고려되는 7가지 이슈를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자원봉사 현황

우선, 질적인 측면에서 4가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첫째는 자원봉사의 정의 차원에서 자원봉사가 단순 노동력 제공에서 전문기술이 적용된 재능기부와 전문봉사를 넘어 근래에는 금품 등 물질 나눔과 헌혈, 장기 기증 등 생명나눔(0)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원봉사 제공 형식이 오프라인을 벗어나 인터넷, 모바일폰, 태블릿PC 등 온라인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자원봉사 주체 측면에서 영리법인인 기업과 정부가 자원봉사 정책에 관여하면서 협회와 정부 산하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고, 넷째는

비대가성의 민간 자원봉사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보상 개념의 시간인증제가 도입되는 등 개인별 실적 및 보상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첫째와 둘째는 민간 부문의 자체적인 변화를, 셋째와 넷째는 정부가 자원봉사 정책에 개입하면서 나타난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양적 측면에서 한국의 자원봉사는 다소 침체기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 2009년 19.3%였던 자원봉사활동 참가율이 2015년에 16.3%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1인당 자원봉사 횟수와 자원봉사 시간도 감소 추세에 있다. 행자부 1365 포털에 집계된 1인당 자원봉사 횟수는 2010년 8.5회에서 2015년 6.6회로 감소하였고, 1인당 자원봉사 시간도 2010년 25.6시간에서 2015년 22.6시간으로 약 3시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 감소의 원인으로는 자원봉사 수요처의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증가가 고려된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감소 추세는 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액 기준 1~500위인 대기업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2년 77.8%에서 2014년에는 55.8%로, 매출액 501~1,000위인 중소·중견기업들은 2012년 48.5%에서 2015년 41.4%로 연평균 7.6%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추세는 자원봉사 비용과 사회공헌 전담부서 존재율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기업의 평균 자원봉사 비용은 2012년 9.1억 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6.9억 원으로 연평균 12.7%씩 감소하였고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공헌 담당부서 존재율에서도 대기업은 2012년 84.9%에서 2015년 42.4%로, 중소·중견기업은 2012년 14.6%에서 2014년 7.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의 자원봉사 감소 추세는 사내 자원봉사 지원제도와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자원봉사에 대한 근무시간 미등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셋째, 자원봉사 참가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내용에서는 질적 변화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단순 노동력 제공에서 안전·방법, 문화행사, 환경보호, 행정보조, 주거환경 등의 분야로 다변화되고 있었다.

넷째, 자원봉사 수요처의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공공 부문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사회복지시설은 아동시설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기타 공공 부문은 감소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중심인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 수요처는 2010년 7,391개였으나 2015년에 총 12,142개로 연평균 10.4%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기타 공공 부문 관련 자원봉사 수요처가 많은 행정자치부는 2010년 69,681개였던 수요처가 2015년 41,173개로 약 5년간 연평균 10%씩 감소하였다.

2.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측정

전반적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 자원봉사활동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자원봉사활동이 전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최소 1조 9,641억 원에서 최대 3조 2,924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중 생산유발액은 최소 1조 1,008억 원에서 최대 1조 8,447억 원이고, 부가가치유발액은 최소 863.3억 원에서 최대 1조 4,477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재정보완 파급효과는 최소 3조 4,007억 원에서 최대 5조 6,989억 원으로, 이 중 생산유발액은 최소 1조 8,447억 원에서 최대 3조 1,98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최소 1조 4,921억 원에서 최대 2조 55억 원이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이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을 보완하는 인력은 최소 54,021명에서 최대 90,528명이었고, 이들의 인건비 예산 최소 1조 1,359억 원에서 최대 1조 9,035억 원을 정부는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와 같은 추정은 4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것이다. 시나리오 설정 기준에서는 크게 2가지 변수를 고려하였는데 그 첫째는 자원봉사자 수로 통계청 사회조사를 기반으로 추정된 전 국민 대상 중 자원봉사자 수와 행자부와 복지부의 행정자료 통합으로 산정된 자원봉사자 수로 수준을 나누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려변수는 투입비용으로 인건비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시간당 임금으로, 그 수준을 나누었고 여기에 사회적 가치조사에서 파악된 실비용을 더하여 추정하였다. 특히 비용 부문 중 인건비를 최저임금과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시간당 인건비로 나눈 이유는 최저임금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순수한 미숙련자로 가정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함이고,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시간당 인건비를 적용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 절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표 5-1〉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재정보완 파급효과 결과 요약

(단위: 십억 원)

구분		총파급효과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경제적 파급효과	최소 : 자원봉사자 428만 명에 최저임금 적용	1,964.1	1,100.8	863.3
	최대 : 자원봉사자 717만 명에 최저임금 적용	3,292.4	1,844.7	1,492.1
사회서비스 재정보완 파급효과	최소 : 자원봉사자 428만 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임금	3,400.7	1,908.5	1,447.7
	최대 : 최소 : 자원봉사자 717만 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임금	5,698.9	3,198.3	2,005.5

둘째, 자원봉사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가치는 자원봉사자 717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1년간 최소 4,189억 원에서 최대 1조 3,64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자원봉사자 1인당 사회적 편익

8,854~28,814원에 1년간 평균 자원봉사 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즉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이해도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 측정은 최근 1년 동안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일반인 1,106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투입비용 대비 산출되는 가치의 차이인 편익, 즉 비용 대비 효익 이론(Cost-Benefit Theory) 관점에서 3가지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첫째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데 직접 소요되는 실비용 대비 얻는 사회적 산출가치 간의 차이인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투입비용을 기회비용 관점에서 생계를 위한 임금 획득에 들어가는 노력을 포기하는 대신 얻게 되는 사회적 산출가치 간의 차이를 산정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후 경험하게 된 사회적 이해도와 자원봉사활동 전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해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표 5-2〉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편익 결과: 전체 자원봉사자 반영

(단위: 명, 회, 원, 백억 원)

연령	자원 봉사자 수	평균 자원 봉사 횟수	최소		최대	
			개인별 사회적 편익(원)	총 사회적 편익(백억 원)	개인별 사회적 편익(원)	총 사회적 편익(백억 원)
10대	2,291,033	3.6	31,366	258.6	35,212	290.4
20대	786,645	4.9	12,199	47.0	23,628	91.0
30대	830,716	6.4	28,247	150.1	48,410	257.3
40대	1,365,377	8.7	-6,480	-76.9	18,538	220.2
50대	1,193,295	11.9	-9,500	-134.8	27,674	392.9
60대 이상	724,776	13.4	-15,131	-146.9	10,109	98.1
전체	7,169,565	6.6	8,854	418.9	28,814	1,363.4

주: 자원봉사자 수는 〈표 2-13〉 참조, 평균자원봉사 횟수는 〈표 2-18〉 참조.

3. 자원봉사활동의 재확산을 위한 7대 이슈

자원봉사활동은 민간 주도의 인력과 자본이 정부의 사회서비스에 투자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최소 1조 9,641억 원에서 최대 3조 2,924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소득 양극화로 인해 점차 어려워지는 사회적 통합을 정부의 직접 투자 없이 민간이 자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현재 침체기를 맞이한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이 재확산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보아야 할 7가지 이슈를 검토하였다. 첫째는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원봉사를 계속 자원봉사로 포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사회적 가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2.8%가 입시·취업·기업 업무라는 이유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10대들은 대학입시가 끝난 20대에 들어서면서 자원봉사 참가율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을 연도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는 자원봉사활동의 비대가성에 관한 문제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의 자원봉사 정의에 비대가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할인카드, 마일리지 제도,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을 인사고과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유효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는 자원봉사 인증제와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에 관한 문제이다. 자원봉사 인증제는 자원봉사의 비자발성과 대가성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지만 반대로 자원봉사자의 상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방어막, 즉 상해보험 가입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인증관리시스템들이 범부처 및 관련 기관별로 산재해 있고,

시스템 간 연동도 완벽하지 않으며, 연동이 된다하더라도 측정변수가 인증관리시스템 간 상이해 통계 작성에 한계가 있다.

넷째는 자원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간의 욕구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개인과 단체, 평일과 주말 등에 따라 자원봉사 수요처가 원하는 봉사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수요처는 평일 중심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는 생업 등으로 인해 주말 자원봉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업 등 단체 자원봉사의 경우, 자원봉사교육 등 자원봉사자의 질 관리가 어려워 단순 봉사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요처의 요구에 맞는 자원봉사를 경험한 일반인들 중 일부는 단순 노동력 제공의 자원봉사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섯째는 기업 자원봉사의 비효율성이다. 기업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와 기부가 함께 이루어지는 패키지형, 자원봉사 미경험자의 자원봉사로의 유인, 그리고 업종별 특화 형태의 자원봉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 축적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업에 자원봉사 수요처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워 높은 탐색비용과 질 높은 자원봉사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수요처들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여섯째는 자원봉사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와의 대체 가능성이다. 즉, 최근의 자원봉사 감소가 정부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확대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감소한 자원봉사자 수 44만 명과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증가한 종사자 수 19만 명을 비교 시, 자원봉사자 감소자 수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증가로 인한 종사자 수보다 약 25만 명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감소자 25만 명은 10대의 감소량으로 추정되며, 증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19만

개 중 11만 개는 65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이므로 대체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는 약 7.8만 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등 일부 경력단절 여성 중심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자원봉사활동과 대체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기타 사업들이 자원봉사활동과 대체적이라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곱째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새롭게 발의한 나눔기본법안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상충 가능성이다. 그 이유는 나눔기본법안에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4년에 제정된 관계로 중복된 나눔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통과 시, 두 법안이 모두 기본법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어느 법이 상위법이나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어 발효될 때, 주무부처가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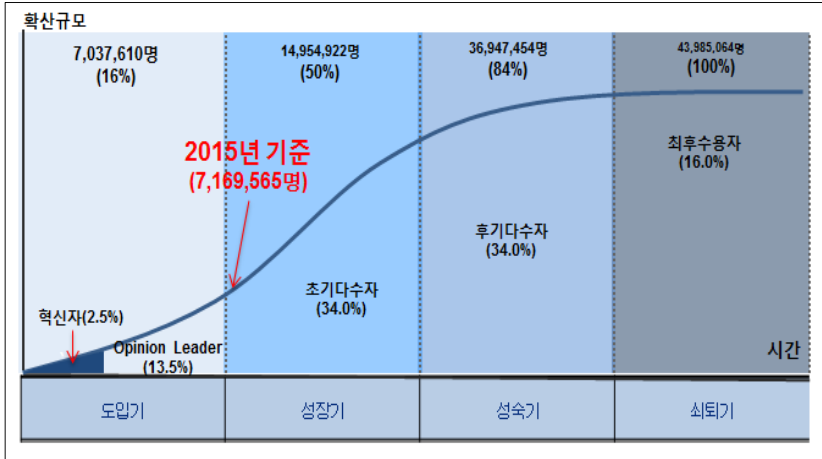
제2절 정책적 과제

1. 정책 방향

Everett M. Rogers(1995)¹¹⁾는 시장에 새로 도입되는 제품의 수용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확산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혁신가, 오피니언 리더, 초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최후 수용자로 구분되는 전체 소비자의 수용 정도에 따라 시장 상황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 4단계로 구분되며 단계적으로 확산(Diffusion)된다는 것이다.

11) Everett M. Rogers(1995). Diffusion of Innovations, Forth Edition, Free Press. New york.

[그림 5-1] 한국의 자원봉사 확산 단계: 2015년 기준



주 : 확산 규모는 2015년 15세 이상 인구 기준.

이와 같은 확산이론을 자원봉사활동에 적용해 보면 현재 한국의 자원봉사 산업은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15세 이상 전 국민의 자원봉사 참가율 16.3%는 확산의 4단계 중 도입기인 전체 수용자의 16.0%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자원봉사 참여율이 2009년에 19.3%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이 성장기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도입기로 후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²⁾ 이와 같은 점은 향후 한국의 자원봉사가 성장기로 다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예상하지 못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도 포함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자원봉사가 다시 성장기로 도입함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산업 전

12) 10대와 50대의 자원봉사 참가율의 감소가 주 이유. 특히 p102와 같이 과거보다 근래 들어 10대에서 20대에 이르렀을 경우, 자원봉사 감소 폭이 크며, 이는 10대 대상의 자원봉사가 입시를 위한 자격요건으로만 취급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추정되며, 50대는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흡수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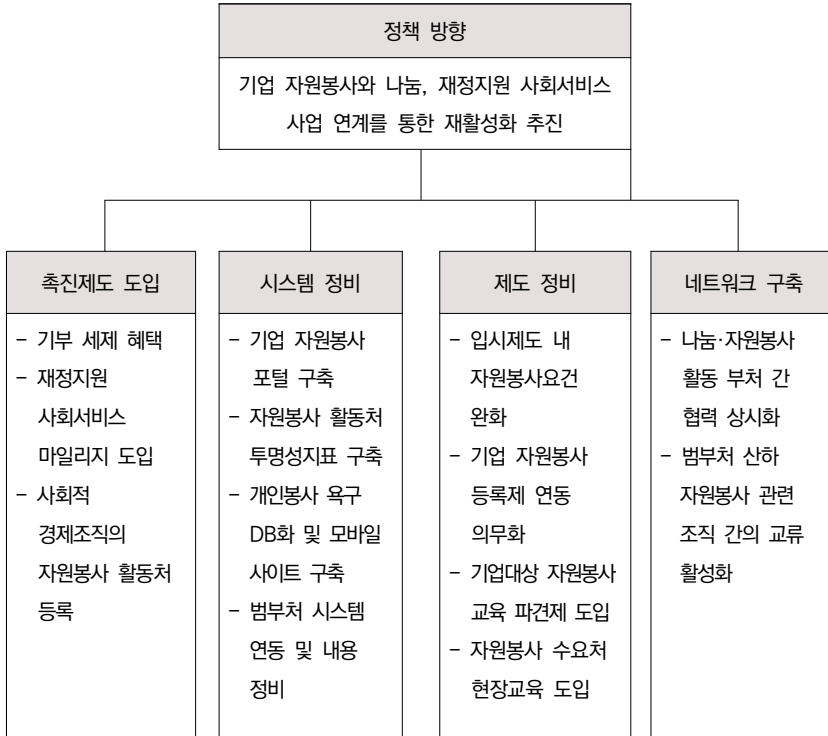
반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기존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앞서 분석한 시사점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기업 자원봉사와 나눔문화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는 자원봉사 시장의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와 새롭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초기 다수자들을 포괄하기 위함이다. 오피니언 리더는 타인의 사고방식이나 태도·의견·행동 등에 강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기자, 대학교수, 정부 공무원, 기업의 혁신 부서 담당자 등 직간접 관련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기 다수자는 오피니언 리더가 경험한 제품이나 제도가 이용하기 편리해졌을 때 수용하는 사람들로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 중이거나 기획하고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자원봉사와 더불어 자발적으로 기부 등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 봉사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앞서 시사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이 수요처나 기업 모두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한국에는 자원봉사가 가능한 5인 이상 사업체가 약 60만 개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자원봉사와 기부를 동시에 하고 있다. 또한 개인 봉사자들에게는 금전적 기부 이외에도 헌혈 등의 생명나눔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초기 다수자로의 확산 과정에서 보통 신제품의 경우, 높은 가격이 장애물로 등장하곤 하는 것처럼 제도나 수집된 정보 등이 장애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느냐 하는 것이다. 즉 제도나 정보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진입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노력이 자원봉사 활동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자원봉사와 금전적 기부를 받는 활동처가 어느 정도 신뢰 가능한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초기 다수자들이 자원봉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리스

크 감소가 자원봉사활동의 재확산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과의 연계이다. 앞서 기업과 기부문화의 연계가 자원봉사 수요자들에 대한 유인 정책이라면,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과의 연계는 자원봉사 활동처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역시 오피니언 리더와 초기 다수자로 구분이 가능하다. 기존의 오피니언 리더들로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정부 산하기관 등이 있으며, 초기 다수자들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새로운 조직은 최근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복원을 목적으로 일부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복지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여 비영리 이외에 영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자원봉사 활동처 관점에서 초기 다수자의 발굴은 앞서 언급한 기업의 자원봉사활동과 연관성이 높다. 본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존에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자사만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을 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원봉사 활동처가 사회복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에 집중돼 있어 자사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20% 이상의 기업들은 비영리법인 등 파트너 없이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 기업 측면에서 부합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이 외에 기존 사회복지시설 등 자원봉사 활동처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질 관리 등 효율성 제고 방안도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 인력을 적시에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5-2] 자원봉사활동의 정책적 방향과 세부 과제



2. 세부 과제

우선, 세부 과제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와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수요자 관점에서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마일리지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나눔기본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방안은 기업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기부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기부 현황이 국세청 등에 의해 보고 되고, 기부를 받은 활동처에 대한 기부금 현황이 실시간 집계될 수 있다면 자원봉사 활동처 내에 존재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둘째로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실적만큼 향후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으로 보상받는 제도로 만약 자원봉사자가 노인돌봄과 관련된 자원봉사를 하고, 향후 자신이 재정지원 사회서비스를 요청할 때에 자원봉사 실적만큼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는 제도이다. 이는 현행과 같이 현재 자원봉사와 연결된 제도를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방안이 도입된다면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할인쿠폰 등 금전적 보상을 대체할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비대가성을 무보수성으로 한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자원봉사 활동처로 등록하는 것이다. 앞서 국내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원봉사의 감소는 자원봉사 활동처 및 일거리 감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및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2014년 기준으로 1만여 개가 존재한다.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복지서비스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자원봉사 활동처로 등록시킨다면 2010년 대비 2015년 기준으로 감소된 자원봉사 활동처 28,000개의 수요를 어느 정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3〉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구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농림수산 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근거 법령	사회적 기업 육성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협동조합기본 법
시작 연도	2007년	2010년	2011년	2000년	2012년
주 참여자	취약계층 중심	지역주민 중심	농어촌주민 중심	저소득층 중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해당사자 중심
정책 목표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어촌 고용 창출 및 소득증대	탈빈곤 지원	새로운 법인격 도입으로 시장경제 보완
지원 내용	인건비, 사회보험료, 경영컨설팅, 각종 세제 및 금융 혜택	시설비, 경영컨설팅 등 최대 2년, 기업당 8,000만 원 지원	제품개발비, 경영컨설팅 등 기업당 5,000만 원	인건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년), 초기사업자금 융자 등	협동조합 상담 및 컨설팅, 교육 및 홍보
개수	1,165개 (‘14.9.)	1,119개 (‘13.12.)	720개 (‘13.12.)	1,340개 (‘13.12.)	5,601개* (‘14.9.)
중간지원 기관	사회적기업 진흥원 (공공기관), 권역별통합지 원기관(16)	마을기업지원 센터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	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중앙(1), 광역(10), 지역자활센터 (247)	사회적기업 진흥원 (공공기관), 권역별통합 지원기관(16)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4). 사회적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둘째는 자원봉사활동 시스템 정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성장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용자들의 리스크를 감소시켜 주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인증관리시스템이다. 수요처 및 봉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인증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

관리시스템하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구분되지 않아 기업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구축과 제공이다. 관련 시설의 특징과 더불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회계지표 등을 탑재하고, 기부금 현황 및 법인 형태 등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 기업들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투명성 관련 정보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된 정보는 부재하여 한번 지원했던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지원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원봉사 활동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정보는 재정 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도 직접 연결된다.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자원봉사자에게 전달된다면 수혜자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자원봉사자들로 인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부처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과 사회복지 등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시설 간의 정보 연계가 추진된다면 인력 및 경영 투명성과 관련된 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는 개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DB)와 모바일 포털의 구축이다. 자원봉사 활동처에서는 단순 노동력 제공에서부터 의료·보건, 행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가 존재한다. 그리고 주말이 아닌 평일에 자원봉사 인력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필요 인력에 대한 DB 확보와 실시간 연계는 자원봉사 활동처와 봉사자의 욕구를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넷째는 범부처 시스템 간의 연동과 연계지표의 구성이다. 현재 약 10개의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이 운영 중이고 일부 시스템 간에 연동이 이루어져 있지만 도서관협회, 일부 청소년단체 등과의 연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을 파악

하기 어려워 자원봉사활동의 재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장애물로 인식된다.

셋째는 자원봉사 관련 제도의 정비이다. 우선 개인 자원봉사자인 10대를 대상으로 한 입시제도상의 자원봉사 시간을 최소 수준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입시제도에 자원봉사를 의무화한 것은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으나 과도한 자원봉사 시간 설정은 오히려 10대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실제로 10대들의 자원봉사 참가율은 70%대에 이르지만 입시를 마친 20대에 들어서는 참가율이 10%대로 감소한다. 그리고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한 노동력 제공이며, 그 강도가 무척 크다고 인식되어 쉬운 자원봉사 활동처를 찾아보거나 그만두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FGI 조사에서 나타났다. 한편 기업 자원봉사자에 대한 등록제 허용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기업 자원봉사자 중 근무시간에 행한 자원봉사는 인증관리시스템상에서 불인정되고 있다. 기업의 자원봉사가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자발성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10대나 20대 대학생에 비해 형평성이 떨어진다. 10대나 20대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자원봉사가 실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업 대상에 대한 자원봉사 교육지원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공헌활동을 표방하는 요식행위로 고착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미와 전문성, 그리고 수혜자에 대한 배려가 필수이다. 그러나 현행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교육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자원봉사교육이 각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에서만 진행돼 기업과 자원봉사센터 간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자원봉사 포털 구축 후, 각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 담당자를 직접 기업이나 자원봉사 현장에

파견하여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교육은 기업이나 개인 자원봉사자가 활동처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즉, 회계나 투명성 관련 정보, 법인 성격, 자원봉사 세부 내용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정보 생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넷째는 자원봉사 관련 정부 부처들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이다. 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가 총괄하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약 10개의 인증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등 약 5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그 외 청소년단체 등 타 부처 관련 단체들이 존재한다. 또한 최근 국회에 발의된 나눔기본법의 경우, 주무부서가 행자부가 아닌 복지부이고, 법 내용에서는 서로 중복되는 업무 영역도 존재한다. 더욱이 행자부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부처 간의 역할과 정책 조정에 있어 1년에 1~2번 자문회의 성격으로 개최되는 등 그 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사무국이나 전문위원회 설치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소속 관련 단체 간의 정책 조정상의 문제점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 자원봉사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자원봉사 정책과 관리 등을 추진 중이다. 결국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산업구조하에 각 부처 산하의 개별 공공기관들이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이나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임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

- 고경환, 장영식, 이연희, 강지원, 진재현, 진달래, 김솔휘, 고금지. (2016). 나눔
실태 201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 (2011~2016).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 김대원. (2000). 자원봉사활동의 역사와 경향. 학생생활연구(대전대).
- 김영호. (1989). 자원복지이론과 실제. 홍익재.
- 대구광역시종합자원봉사센터. (2004). 대구광역시자원봉사교육자료: 자원봉사의
의미와 개념.
- 대한상공회의소. (2013~2015).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백서.
- 보건복지부. (2012).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2010. 7. 1. 시행).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3).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6).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2016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2016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 안영규. (2010). 대구경북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평가. 대구경북연구원.
- 양현미, 심광현, 박건희. (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우태식, 김창래. (2015). 자원봉사활동의 유래를 통한 행정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 이철선, 남상호, 최승준, 민동세, 권소일. (2013). 돌봄서비스 종사자 임금체계
표준화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영식, 고경환, 이연희, 김정현, 오미애, 강지원, 진재현, 함선유. (2015). 나눔
실태 201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2015).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6). 2016년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 조영복, 류정란. (2013). 사회적 가치 창출의 평가와 측정. 사회적기업연구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 동향」 각 연도.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3). 데이터베이스 분석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2~2016). 2011~2015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6). 2010·2015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데이터베이스 내부자료.

한국사회적기업연구소. (2011).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 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사회적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정보시스템감리연구원. (2015). 국민자원봉사[국민 Volunteer ID] 활성화 연구.

행정자치부. (2014).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2015). 자원봉사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행정자치부. (2016).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016).

행정자치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6). 2016 자원봉사센터 현황.

행정자치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 2010·2015년 자원봉사 운영실적 통계 내부자료.

Cravens, J. (2014). *Internet-mediated Volunteering in the EU*. Joint Research Centre.

Everett M. Rogers. (1995). *Diffusion of Innovations, Forth Edition*, Free Press. New york.

KAIST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2010).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평가도구(SROI) 개발·평가사업. 고용노동부.

포털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 <http://www.nanumkorea.go.kr>에서 2016. 12. 14. 인출.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http://www.vms.or.kr>에서 2016. 12. 14. 인출.

- 문화체육자원봉사. <http://csv.culture.go.kr>에서 2016. 12. 14. 인출.
-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6. 12. 14.) <http://www.sy0404.or.kr>에서 2016. 12. 14. 인출.
- 청소년자원봉사. <http://dovol.youth.go.kr>에서 2016. 12. 14. 인출.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http://volunteer.seoul.go.kr>에서 2017. 12. 31. 인출.
- 대구시 자원봉사센터. <http://nanum.daegu.go.kr> 2017. 12. 31. 인출.
-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http://swvc.suwon.ne.kr> 2017. 12. 31. 인출.
-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http://nanum.jeonju.go.kr> 2017. 12. 31. 인출.
- Social Innovation Group. 사회적 가치 측정, 과연 가능한가? (2013. 12. 5.), <http://socialinnovationgroup.kr/archives/3022>에서 2016. 12. 13. 인출.

법령

- 나눔기본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668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73호)



Q2.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며칠이나 자원봉사를 하셨나요?
(_____)일

Q3. 그렇다면 자원봉사활동 시,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하셨나요?
1일 (_____)시간

Q4. 주로 어떤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나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보건의료(기관) ② 교육(기관) ③ 종교단체 ④ 사회복지(기관)
⑤ 환경(단체) ⑥ 공익민간(단체) ⑦ 예술, 문화, 스포츠(단체)
⑧ 관공서(구청, 동주민센터 등) ⑨ 직능단체, 전문가(단체), 노동조합
⑩ 공명선거, 정치 및 정당(단체) ⑪ 재난 재해 현장 ⑫ 청소년(단체)
⑬ 국제기구 ⑭ 공원, 거리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
⑮ 기타(_____)

Q5. 귀하께서는 자원봉사 활동처에서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하셨나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청소 등 단순한 노동력 제공 ② 자격증이 필요한 프로보노(재능기부)
③ 온라인 서비스 ④ 기타(_____)

Q6. 자원봉사 활동처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대표적인 것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지인을 통해 ② 1365 사이트를 통해 ③ 회사를 통해
④ 종교기관을 통해 ⑤ 환경(단체)
⑥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⑦ 기타(_____)

Q7. 귀하께서는 자원봉사활동 시, 교통비와 식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비용은 하루 평균 얼마 정도였나요?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전혀 없다면 0원)

1일 (_____)원

Q8. 그렇다면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 시, 귀하가 생각하시는
시간당 인건비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었습니다.)

시간당 인건비 (_____)원

Q9. 아마도 귀하께서는 자원봉사를 통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1일 자원봉사를 통해 얻으신 우리 사회의 이해도를 1일 교육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4년제 대학교 1일 평균 교육비용은 49,000원 정도입니다)

1일 ()원

Q10. 만약 자원봉사 전 사회적 약자 등 우리 사회에 대한 귀하의 이해도가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자원봉사를 경험하신 후에 귀하께서 느끼시는 사회적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100을 기준으로 이해도 증가가 없는 경우 0, 증가시 +비율, 감소시 -비율을 적어주세요)

()%

Q11. 결국, 개인적으로 식비·교통비 등 간접비와 생업에 종사하면서 얻게 될 인건비를 투자하여 귀하께서는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계속 자원봉사에 참여하실 의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 ① 다시 할 생각이 전혀 없다. ② 별로 할 생각이 없다.
 ③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다. ④ 꼭 계속 할 것이다.

DQ1.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① 농업/수산업/축산업 ⑦ 경영/관리직(사무관/부장 이상)
 ② 자영업 ⑧ 전문/자유직(변호사/의사/건축사/교수/예술가)
 ③ 판매/서비스직 ⑨ 가정주부
 ④ 기능/숙련공 ⑩ 학생
 ⑤ 일반직업직 ⑪ 무직
 ⑥ 사무/기술직 ⑫ 기타()

DQ2. 귀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 ① 3,000만 원 미만 ② 3,000만~5,000만 원 미만
 ③ 5,000만~7,000만 원 미만 ④ 7,000만~9,000만 원 미만
 ⑤ 9,000만 원 이상

DQ3. 핸드폰 번호 ()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